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2006. 8.**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본 보고서는 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이 만든  
비전 2030 시안입니다



##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은 국민 누구나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놓는 국가 미래전략입니다.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난 반세기는 도전과 극복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참여정부가  
마무리되는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작고, 그 중에서도  
복지지출 비중은 이들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가 장기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고, 저출산·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동반성장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우는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참여정부는 복지를 성장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하여 이를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혜적인 배분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산적인 참여복지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비전 2030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략적 사고를 토대로 만든 대한민국 희망지도입니다. 단순히 미래상만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년, 10년 후의 모습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내다보는 국가경영지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첫째, 삶의 기본이 되는 ‘안전’이 보장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능력과 의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으로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비전 2030은 우리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그래서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합시다. 이 일에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 < 전체 요약 >

### 1. 추진 배경 및 경위

- (상황인식)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 기로에 위치
    - 인구감소가 시작되기 前  
향후 10~15년까지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
      - \* 생산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 대응이 지체될 경우 저성장과 분배악화가 심화되어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우려
  - 그러나 경제·사회·문화를 망라한 제도혁신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은 미흡
- (비전수립의 필요성) 더 늦기 전에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종합적 대책을 수립, 체계적인 대응 시급
  - 비전제시와 함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비전수립 과정)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비전 2030」을 수립
  -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 시작
    - \* 역동과 기회의 한국('03~'04), 동반성장 비전과 전략('05~'06) 등
  - '05. 6월부터 「비전 2030」 수립을 본격 추진
    - 60여명의 전문가로 민간작업단 구성('05.7)
      - \* 60여 차례의 토론회 및 5차례의 세미나 개최
    - 설문조사('06.1),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06. 8) 등 의견수렴

## 2.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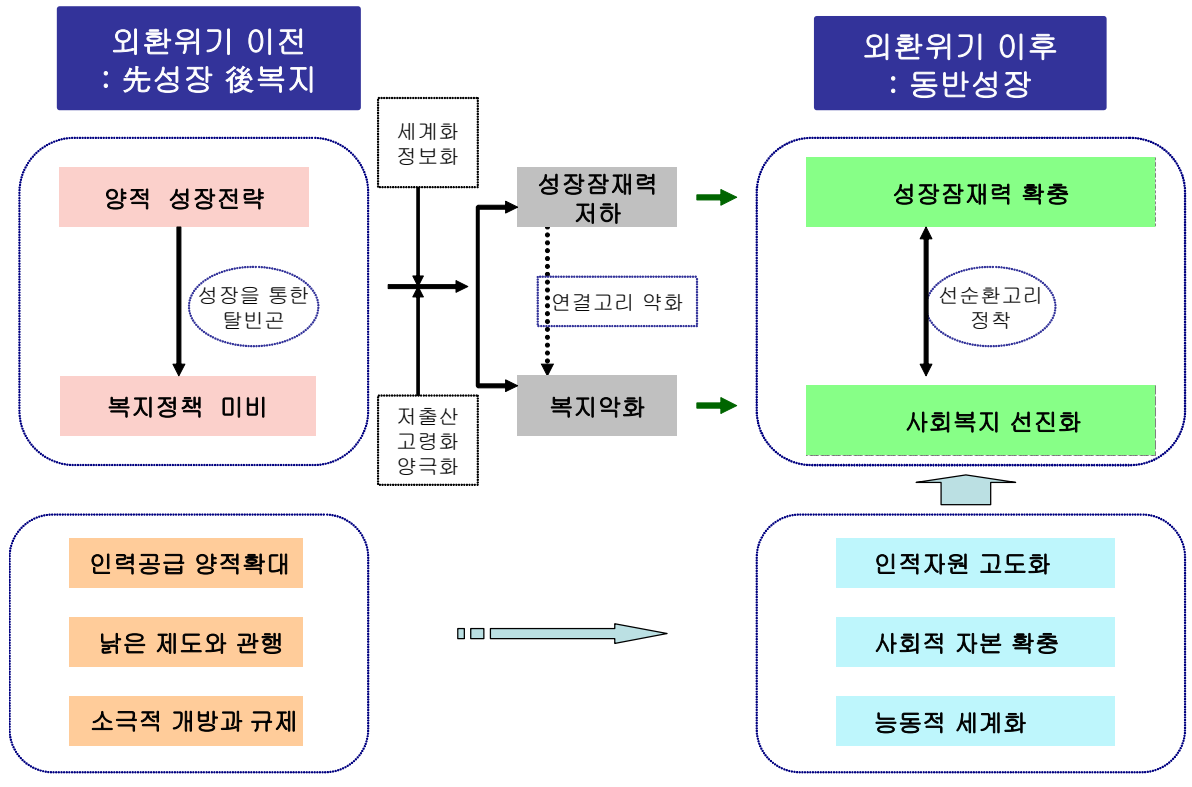
□ (패러다임 전환) ‘先성장 後복지’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성장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뿐 아니라 분배개선도 곤란

⇒ 동전의 양면관계인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 전환

	기존 패러다임	동반성장 패러다임
· 추진 배경	탈빈곤, 성장과 분배의 고리 작동	양극화 심화, 성장과 분배의 고리 약화
· 정부 역할	성장에 집중	성장과 복지의 조화
· 성장 전략	양적 투입위주 · 불균형 성장, 정부 주도	혁신주도형 · 균형 성장, 시장 주도
· 복지 전략	가족 · 공동체에 의존, 구호적 복지	정부의 역할 제고, 미래를 위한 투자
· 투자 중점	物的 자본	人的 · 社會的 자본*

\* 사회적 자본 : 구성원간 신뢰와 협력, 개방성 및 이를 촉진하는 제도 · 규범 · 네트워크 등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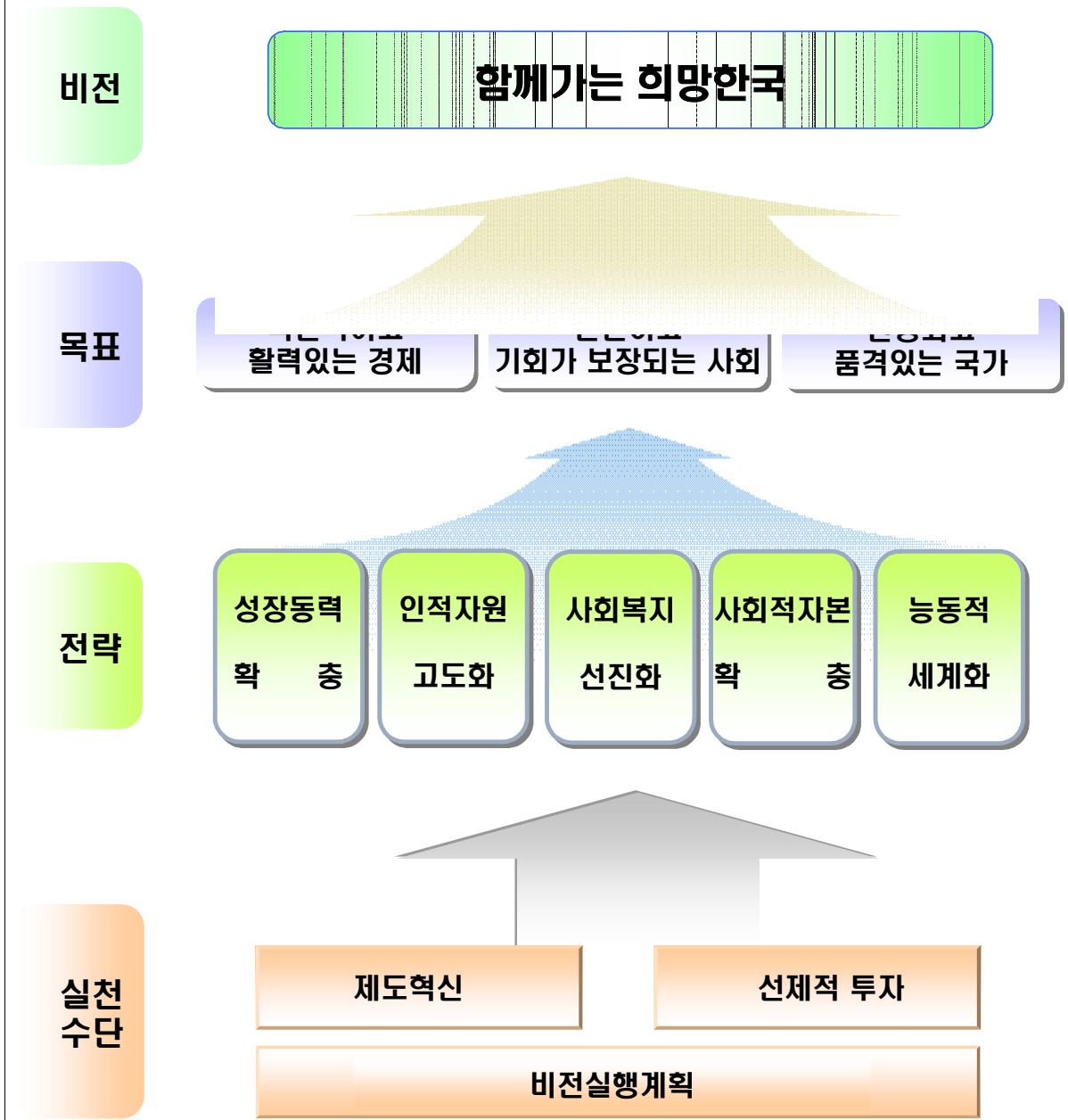


### 3. 2030 한국의 구상

#### □ (비전) 「함께가는 희망한국」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가지는 ‘기회의 나라’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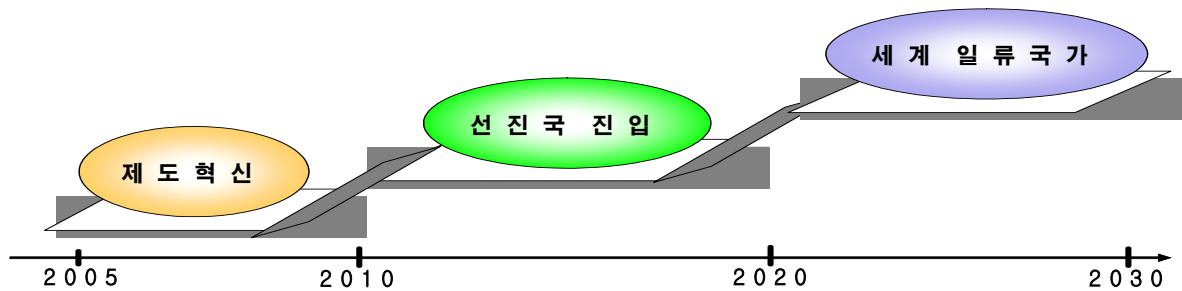
< 비전 2030 체계도 >



#### 4. 비전실현을 통한 미래의 모습

□ 비전실현을 통해 세계 일류국가 달성

- (제도혁신)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주요 사회·경제 제도의 혁신을 2010년까지 마무리
- (선진국 진입)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2010년 대에는 선진국에 진입
- (세계 일류국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 1인당 GDP와 삶의 질이 큰 폭으로 향상

- 1인당 GDP는 '30년 4만 9천불로서 현재의 스위스 수준 도달

\* 잠재성장률 추계(장기재정전망팀)

'06~'10년 : 4.9%, '11~'20년 : 4.3%, '21~'30년 : 2.8%

- 삶의 질 순위는 '30년 10위로서 현재의 미국 수준 추월

지표명	'05년	'10년	'20년	'30년	비 고('05 기준)
· GDP 규모 <sup>1)</sup> (십억불)	788 (788)	1,122 (1,262)	1,824 (2,567)	2,406 (4,145)	· 미국 12,486    일본 4,571 · 영국 2,201    이태리 1,766
· 1인당 GDP <sup>1)</sup> (천불)	16 (16)	23 (26)	37 (51)	49 (84)	· 스위스 50    미국 42 · 일본 36    프랑스 34
· 국가경쟁력(순위, IMD)	29	20	15	10	· 미국 1위    싱가포르 3위 · 스위스 8위    일본 21위
· 삶의 질(순위, IMD)	41	30	20	10	· 호주 1위    스위스 4위 · 미국 14위    일본 35위

1) 2005년 불변가격 기준, ( )안은 경상가격 기준

## 5. 달라지는 미래 국민생활의 모습

\* 숫자는 ('05) → ('10) → ('20) → ('30)

	20대	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 국민				노인, 2/3가 연금혜택 받는다 * 연금수급률 17 → 30 → 47 → 66%
				치매·중풍노인, 사회에서 책임진다 *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11 → 35 → 70 → 100% * 장기요양병상수(인구천명당) 0.5 → 1.5 → 3 → 4개
	집 걱정,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사회로 삶의 질이 높아진다 * 건강보험 보장률 65 → 72 → 80 → 85%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4 → 10 → 15 → 20% * 삶의 질(IMD, 60개국) 41 → 30 → 20 → 10위 * 공공임대주택 비율 5.1 → 10.1 → 16 → 16%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 국민문화향유율 ('03) 62 → 70 → 90 → 95% *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 9만 → 5만 → 4.5만 → 4만			
	투명하고 상부상조하는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다 * 청렴도 지수(TI, 159개국) 40 → 25 → 10 → 5위 * 자원봉사 참여율 15 → 20 → 30 → 50% * 5대 범죄 발생대비 검거율 72.6 → 73 → 75 → 77%			
근로자	고용,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평생 배우며 일할 수 있다 * 평생학습 참여율 ('04) 22 → 30 → 40 → 50% * 고용률 63.7 → 67 → 70 → 72%			
	비정규직,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다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63 → 70 → 80 → 85%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 0.77 → 0.58 → 0.37 → 0.24%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여가시간은 늘어난다 * 연간실근로시간 2,366 → 2,300 → 2,166 → 2,033시간			
	실업, 재기의 기회가 확대된다 * 실업자훈련 참여자 취업률 50 → 51 → 60 → 65%			
기업인	협력적 노사관계, 대·중소기업간 상생,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56 → 42 → 26 → 15일 * 기업의 사회적 책임(IMD, 60개국) 30 → 25 → 20 → 10위			
	공정한 시장경쟁, 대학연구성과,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진다 * 산학간 지식이전 정도(IMD, 60개국) 21 → 15 → 10 → 5위			
	우리 기술과 상품, 세계 어디서나 인정 받는다 * 부품개발 기술수준(일본=100) 84 → 94 → 98 → 105 * 혁신형 중소기업 1 → 3 → 6 → 9만개 * 세계 일류상품 505 → 1,000 → 1,550 → 2,000개			

	20대	30대	40~50대	60대 이상
학생 / 청소년		우리 아이들, 달라진 교육환경에서 공부한다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2 → 30 → 27 → 23명		
		방과후 아이들, 사교육비 부담없이 안심하고 맡긴다 * 방과후 활동 수혜율 32 → 67 → 72 → 75%		
		우리 아이들, 사고없이 안전하게 성장한다 * 아동안전사고율(10만명당) 8.3 → 7.3 → 6.0 → 5.0명		
	학교에서 배운 지식,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다 * 대학교육 사회부합도(IMD, 60개국) 52 → 40 → 20 → 10위			
여성 / 맞벌이 부부		일하는 여성, 남녀차별 없이 능력으로 인정 받는다 * 여성권한척도(UNDP, 80개국) 59 → 45 → 30 → 20위		
		아이, 건강하게 낳아 걱정없이 키운다 * 영아사망률(천명당) ('02) 5.3 → 4.5 → 4.0 → 3.0명 * 육아서비스 수혜율 47 → 65 → 67 → 74%		
장애인		장애인, 원하는 직업에서 자아를 실현한다 * 장애인 실고용률 ('04) 1.3 → 1.7 → 2.5 → 3.0% * 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상용근로자 대비) 44.5 → 50 → 75 → 90%		
		신속하고 편리하게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국공립 장애인 재활병원수 1 → 7 → 16 → 32개소		
		더 이상 이동과 정보이용에 불편은 없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2.7 → 82 → 95 → 100% *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36 → 50 → 95 → 100%		
저소득층	최소한의 생활, 국가가 보장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0) 23 → 18 → 9 → 0%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3,800 → 3,320 → 2,160 → 1,000명			
농어업인		농어업인, 일하기 좋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40 → 64 → 76 → 80%		
		규모화·전문화로 농어업 경쟁력이 확보된다 * 쌀전업농 쌀생산비중 30 → 41 → 60 → 79% * 수산자원량 790 → 880 → 1,000 → 1,000만톤		

## 6. 비전실현 방안

□ (비전실현 수단) ‘함께가는 희망한국’의 비전과 전략은  
제도혁신·선제적 투자와 비전실행계획을 통해 실현

○ 제도혁신·선제적 투자

- 제도혁신 : 경제·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  
→ 제도혁신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진입 불가능
- 선제적 투자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기반 확충 분야,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  
→ 선제적 투자 없이는 바람직한 미래의 조기실현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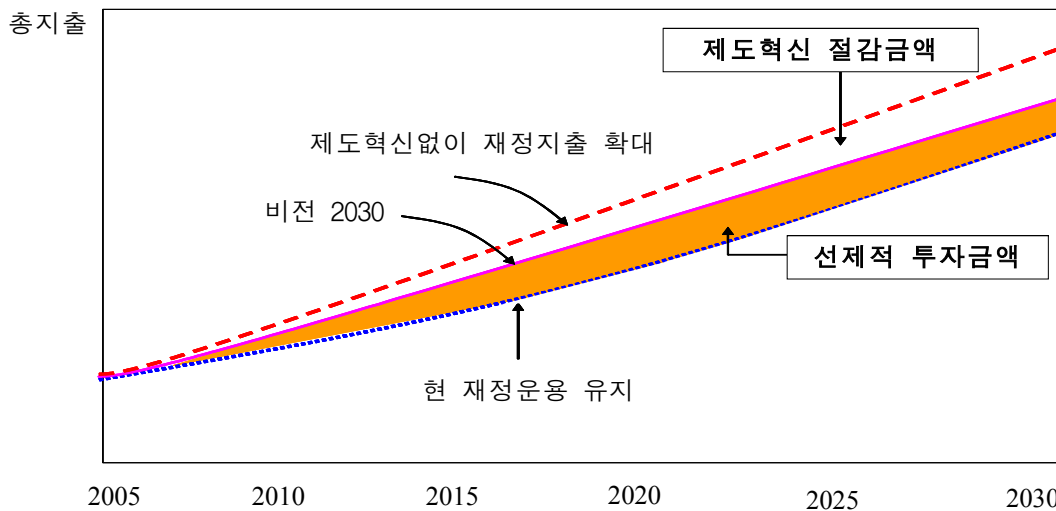
< 주요 제도혁신 및 선제적 투자 과제 >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li> <li>· 청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li> <li>· 학제 개편</li> <li>· 국민·지역연금 개혁</li> <li>·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li> <li>· FTA 체결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li> <li>·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li> <li>·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li> <li>· 보육서비스·방과후 활동 확대</li> <li>·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li> <li>·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li> </ul>

- 비전실행계획 : 5대 전략별로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표, 국제비교를 포함하는 구체적 실행계획(Vision Action Plan) 수립·시행

- (재정투자 방향) 동반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중점을 두되, 제도혁신을 통해 지출증가를 최소화
    -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R&D, 고등교육 부문 등에 대한 투자 강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 복지지출(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을 '20년경 '01년 美·日수준, '30년경 '01년 OECD 평균수준 도달 목표

<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圖式 >



## 7. 재원대책에 대한 국민적 논의 필요

- (2010년 까지) 추가적인 증세없이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및 세정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요재원 충당
- (2011년 이후)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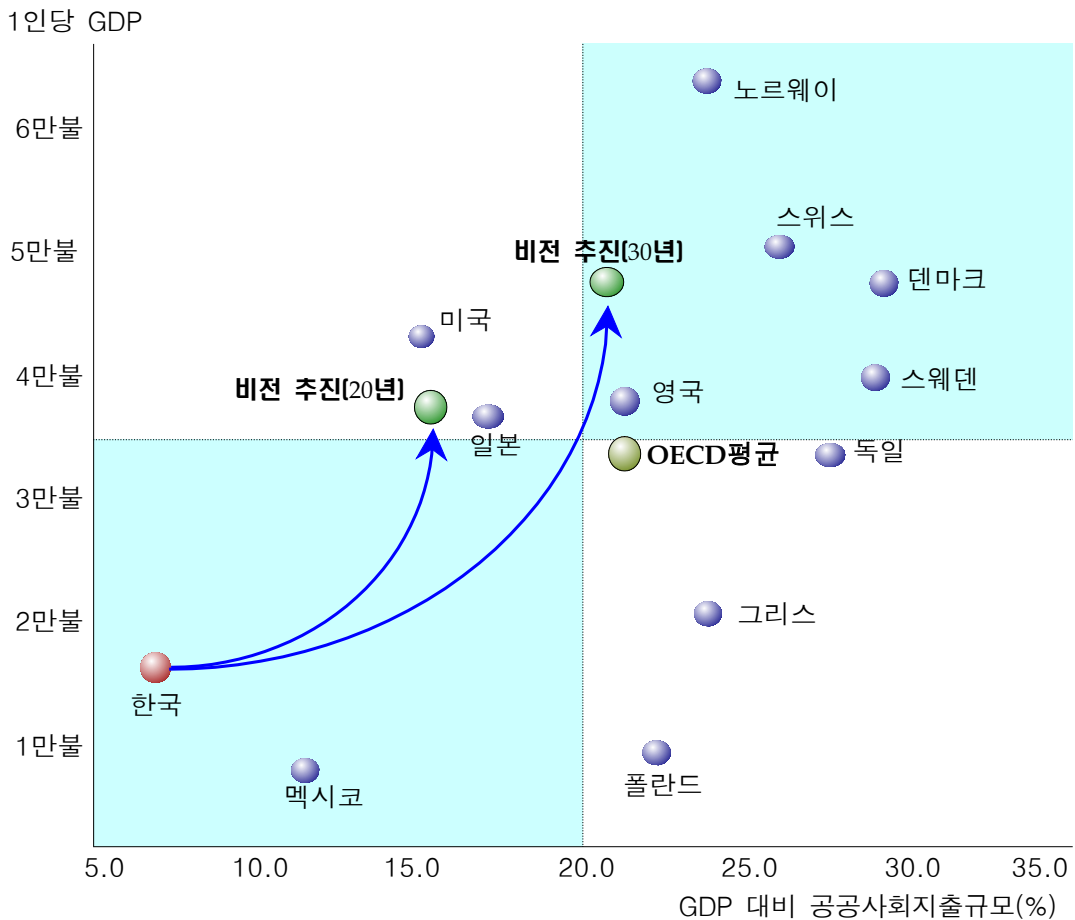
\* 현재의 복지지출 수준 유지시 빈곤의 대물림, 노후불안, 출산기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통합 저해 및 개인의 불안감 증가 우려

## 8. 외국수준과 비교한 2030 희망한국의 모습

□ 2030년 1인당 GDP는 '05년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고  
복지지출 규모는 '01년 OECD 평균에 도달

- 1인당 GDP('05년 불변가격 기준)는  
'05년 1만 6천불에서 '30년 4만 9천불 수준으로 증가
- 복지지출 규모는  
'05년 8.6%(잠정추계)에서 '30년 21% 수준으로 증가
  - '19년 15%('01년 미국 수준), '24년 17%('01년 일본 수준) 도달

< 1인당 GDP 및 공공사회지출 규모의 국제 비교 >



\* 1인당 GDP('05년 기준 ; IMF, World Economic Outlook('06.4))  
공공사회지출규모('01년 기준 ; OECD, Social Indicators('05))

## < 참고 > 비전 2030의 주요 특징

### ① 한 세대앞을 내다보는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

- 현재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종합전략

### ②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추진

- 성장과 복지를 동전의 양면관계로 인식, 복지정책을 성장전략의 하나로 접근
-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를 적극 추진

### ③ 제도혁신을 전제로 투자 확대

- 잘못 설계된 복지제도 유지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재정을 투입해도 복지 체감도는 제자리 수준

- \* 재정위험 사전 제거 : 국민·지역연금 개혁 등
- 효율성 제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 ④ 복지 투자는 확대하나, 2030년에 현재의 선진국 평균 수준

- 복지지출은 2020년경에 '01년 미국·일본 수준, 2030년에 '01년 OECD 평균수준에 근접
- 경제분야 투자는 민간역할 강화를 통해 지속 추진

### ⑤ 2010년까지는 증세없이 비전 2030을 추진

-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 필요



# 목 차

<b>I. 추진 배경 및 경위</b> .....	<b>1</b>
I-1. 추진 배경 .....	2
I-2. 추진 경위 .....	5
<b>II. 대내외 환경변화와 도전과제</b> .....	<b>8</b>
II-1. 대내적 여건 .....	9
II-2. 대외적 여건 .....	13
II-3. 국민의 입장에서 본 불안 요인 .....	15
<b>III.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b> .....	<b>18</b>
III-1. 그동안 국가발전과정 회고 .....	19
III-2.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31
<b>IV. 2030 한국의 구상</b> .....	<b>36</b>
IV-1. 비전과 전략 .....	37
IV-2. 비전실현을 통한 미래의 모습 .....	42

<b>V. 비전 2030 실현</b> .....	<b>52</b>
V-1.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	53
V-2. 비전실행계획 .....	56
<b>VI. 장기 재정전망</b> .....	<b>70</b>
VI-1. 재정전망의 전제 .....	70
VI-2. 비전 2030 투자방향 .....	71
VI-3. 재정전망 .....	74
VI-4. 2030년 한국의 모습 .....	77

<b>참 고 자 료</b>
----------------

<b>1. 비전실행계획</b> .....	<b>81</b>
<b>2. 50대 핵심과제</b> .....	<b>97</b>

## I. 추진 배경 및 경위

---

### 요 약

- ◇ (추진배경)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
  - ▶ 대응을 위해서는 종합적·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나 아직 준비가 부족
  - ▶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비전과 전략을 수립,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사회통합을 추진할 필요
  
- ◇ (추진경위) 잠재성장률 하락 등 장기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미래 문제에 대한 논의 본격화
  - ▶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설문조사, 시민사회단체 협의 등 1년 이상의 작업기간을 거쳐 「비전 2030」 수립
  - ▶ 「비전 2030」은 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이 작성·발표하는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 보고서

## I -1. 추진 배경

- ① (상황인식)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세계화 등 장기·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
-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응노력이 시작되었으나 새로운 대내외 도전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 전환기의 부담 가중
  -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자리, 생계, 노후문제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 이는 다시 저출산, 저소비, 저성장으로 연결
  - 그러나 이러한 도전요인 자체보다는 이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
    - \* 미리 준비하지 못해 지금 저출산, 연금문제 등에 직면
      - 저출산 문제 : '83년 이미 출산율 2.08명 → 현재 세계 최저 1.08명
      - 국민연금 : 최초설계 잘못, '90년대 후반부터 문제제기 → 논의만 무성, 해결책 담보
- ② (대응의 시급성) 도전요인의 성격, 정책 시차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10~15년간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
- 인구가 감소(생산가능인구는 '16년, 총인구는 '20년을 정점으로 감소) 하기 전에 장기·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 이 기간동안의 대응성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기 발전궤도 및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이 결정될 전망
    - 대응이 지체될 경우 저성장과 분배악화가 심화되어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우려
    - \* 저출산대책은 지금 시행하여도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미치지까지는 20~30년 정도의 시차 발생

③ (현행 대응방식의 한계)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보다  
현안해결이나 부분적·단편적 준비에 치중

- 과거 정부주도 발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 전략기능이 약화
  - 개발연대의 권위주의는 해체되었으나  
국가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건전한 권위 창출에는 한계
- 경제·사회·정치·문화를 망라한 제도혁신의 큰 밑그림을  
준비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은 미흡

④ (장기비전 필요성)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

-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장기적 시계에서 수립되지 않으면 구조적 문제의 대응에 한계
  - \* 일본, EU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도  
10~30년의 국가 장기계획을 통해 미래 대비
- 이제 정부는 국가계획자(nation-planner)에서  
비전제공자(vision-provider)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필요
  -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비전의 실천력을 확보
  - \* 설문조사('06. 1, KDI) 결과, 전문가 97%, 일반국민 94%가 장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응답

## < 참고 > 세계 주요국가의 비전과 전략

- ① G 7 국가 : IT 등 지식·혁신기반, 사회적 이동성 문제에 주력
- ② BRICs : 사회 인프라 확충, 정치·경제제도 개선, 성장동력 다변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점
- ③ 強小國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정분야(Niche Market)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

국가	국가비전	추진전략
영국	Opportunity for all in a World of 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 및 경쟁촉진</li> <li>· IT 인력양성, 직업훈련체계 개편</li> <li>· 성공적 클러스터 발굴·지원</li> </ul>
일본	A New Era of Dynamism - Closer Ties and a Wider Range of Opportun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의 선순환</li> <li>·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구축</li> </ul>
EU	2010년까지 세계최고의 지식기반경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li> <li>·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li> <li>· R&amp;D 투자 확대 및 혁신 강화</li> </ul>
중국	2020年 全面的 小康*國家 * 부유하지 않으나 기본수요는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혁을 통한 성장의 질 개선</li> <li>·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li> <li>· 대외개방 확대 등 경제의 국제화</li> </ul>
싱가포르	Dynamic Global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 네트워크 확대, 경쟁력·유연성 확보</li> <li>·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li> </ul>
대만	Green Silicon Is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의 R&amp;D·첨단제품 생산거점 등</li> </ul>
아일랜드	지속성장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에 필요한 직업훈련 강화</li> <li>· 투자재원의 지역간 균등 배분</li> </ul>

\* 역동과 기회의 한국('04) 등 참고

## I -2. 추진 경위

### (1) 미래대비 논의의 시작

①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 시작

- 대부분의 보고서는 ‘정부주도-투입주도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전환 필요성 제시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97),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98), 2011 비전과 과제(’02) 등

②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구조적 문제가 본격화하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미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국정과제위원회, 국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장기비전과 정책과제 등을 마련

\* 역동과 기회의 한국(’04)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06, 국민경제자문회의)  
선진복지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06, 정책기획위원회) 등

③ 그동안의 작업은 잠재성장률 저하, 고령화 등의 문제제기와 대안모색의 측면에서는 의의

- 그러나 재정과 연계부족 등의 문제로 실천에는 한계

\* 설문조사 결과(’06.1, KDI) 과거 비전이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과 연계 등 구체적 실천전략 미흡(35.3%),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25.1%), 국민적 공감대 부족(17.4%), 현실과의 괴리(16.1%)로 지적

## (2) 비전수립 본격화

① 정부는 그동안 비전작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구조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격적인 비전작업 착수

○ KDI, 조세연, 대학교수 등 전문가 60여명으로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민간작업단 구성('05. 7)

\* 7개팀

- ① 비전총괄팀 ② 성장동력팀 ③ 인적자원팀 ④ 사회복지팀
- ⑤ 사회적 자본팀 ⑥ 국제화팀 ⑦ 장기재정전망팀

\* 작업단원 구성

- ① KDI,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세연연구원, 산업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평가원 등 출연연 박사
- ② 서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경기대, 고려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한양대 등 대학교수
- ③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

② 민간작업단 구성 후 60여 차례의 토론회 및 5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 세미나주제

- 미래 한국의 선택 무엇인가?('05.7)
- 한국 경제·사회발전 전망과 향후 재정의 역할('05.9)
- 비전 2030,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05.11)
- 장기비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06.2)
- 2006년 장기비전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제1차 워크숍('06.3)



### (3) 비전 2030 수립

① 설문조사, 자원배분회의 보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중간 작업내용을 구체화

○ 설문조사('06.1) : 일반국민, 전문가 대상으로  
우선 해결과제, 바람직한 미래상 등 조사

○ 국무위원 자원배분회의 보고('06.4)  
: 비전 2030의 주요내용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방안

○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06.8) : 비전 2030 보고서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② 정부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최초의 '장기비전과 전략'에 관한 종합 보고서 작성

○ (장기적 시계) 분석의 視界를 2030년까지 확장

▪ 5~10년의 중기적인 시계만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장기·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미흡

○ (기존 계획 통합) 그간의 비전 보고서, 논문, 각계 의견을 포괄

▪ 성장분야와 복지분야의 장기계획을 포괄하는 종합 보고서

○ (장기 재정전망) 비전 실현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추계하고  
다양한 재원조달방안 제시

▪ 국가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을 통해 체계적으로 뒷받침

## II. 대내외 환경변화와 도전과제

---

###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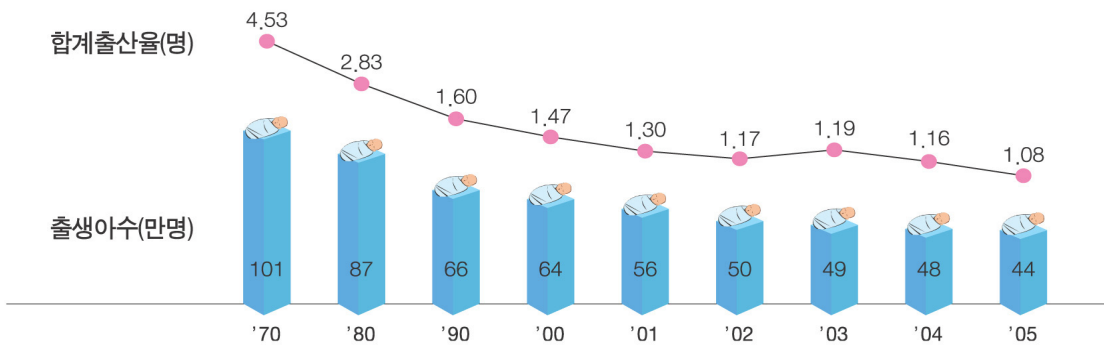
- ◇ (대내적 여건) 장기·구조적 문제가 급속히 심화
  - ▶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 ▶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
  - ▶ 양극화 또한 급속하게 전방위적으로 확산
  - ▶ 낡은 제도와 관행이 지속되어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 (대외적 여건) 통제 불가능한 환경변화에 노출
  - ▶ 세계화·정보화로 인한 무한경쟁에 직면
  - ▶ BRICs의 급성장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로 작용

## II-1. 대내적 여건

① (저출산·고령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 합계출산율은 1.08명('05)으로 세계 최저 수준

\* 미국 2.04, 영국 1.74, 독일 1.37, 일본 1.29('04), OECD 평균 1.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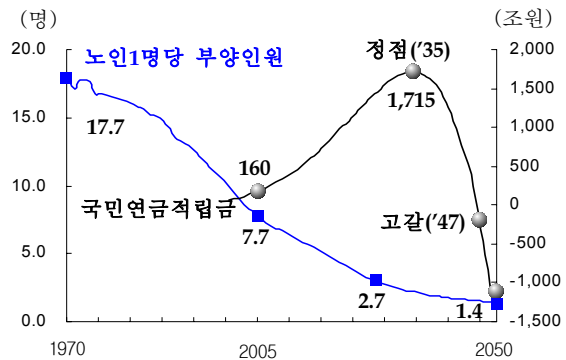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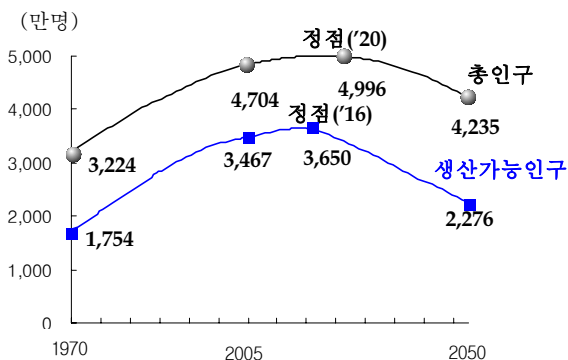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총인구는 '20년(생산가능인구는 '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00년 이미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7%)에 진입하였으며 '26년 초고령사회(20%), '50년 세계 최고령 국가(37.3%) 전망

< 총인구·생산가능인구 전망 >

< 국민연금적립금·노인1명 부양인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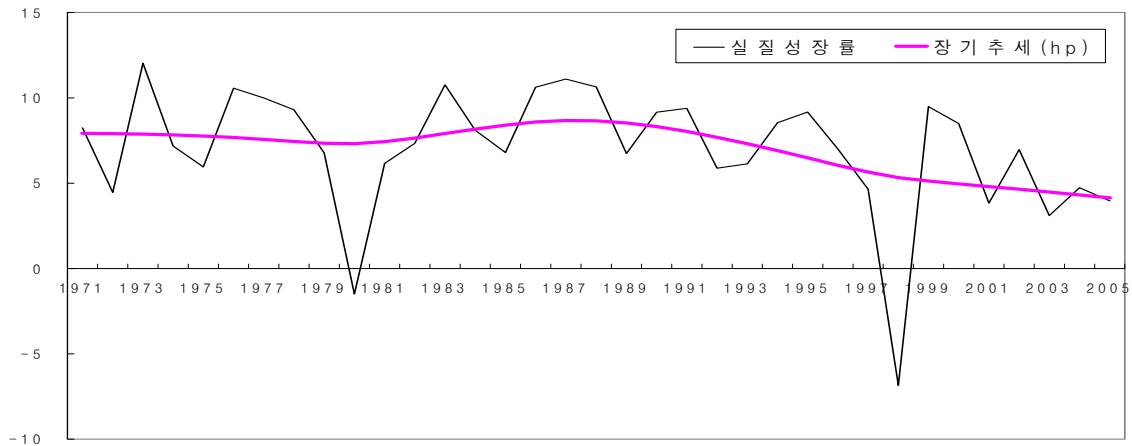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05.1), 국민연금발전위원회('03.6)

⇒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연금·의료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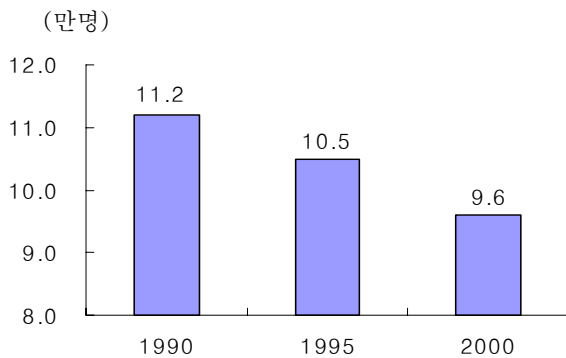
② (성장잠재력 저하) 경제가 성숙되고, 저출산·고령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

- 6~8%대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90년대 중반 이후 하향세를 보이며 2000년대에는 4% 중반 성장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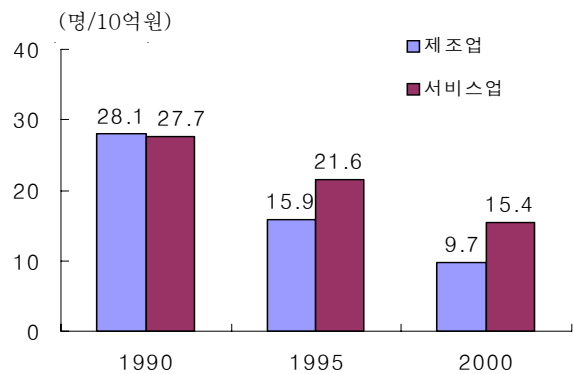


- 노동집약적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설비자동화 등으로 인해 성장 둔화와 함께 성장의 고용 창출 효과도 약화(Jobless growth)

< 1% 성장의 유발 취업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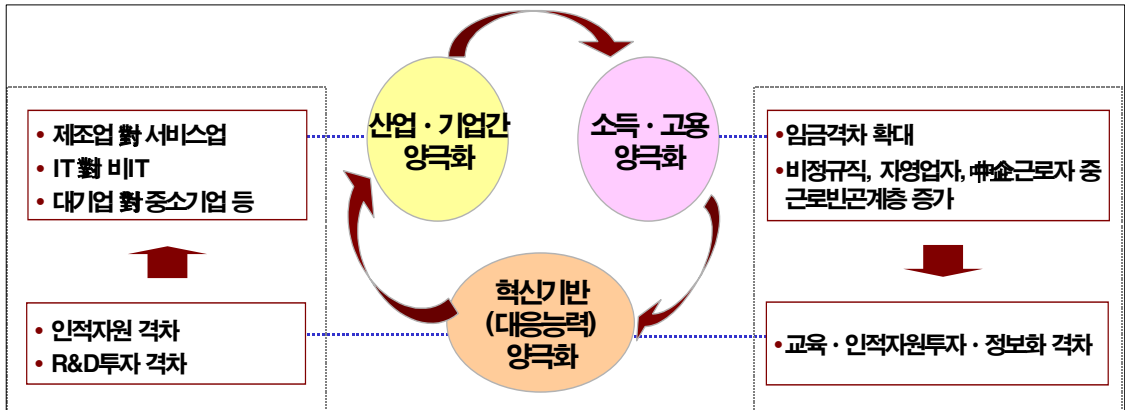
<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일자리수) >



⇒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축률 하락, 생산성 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

③ (양극화 심화) 세계화,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격차로 산업·기업·지역, 고용·소득의 양극화 지속·심화

○ 산업·기업간 격차 → 소득·고용격차 → 혁신기반 격차 → (다시) 산업·기업간 격차로 연결



○ 양극화는 전세계적 추세이나,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편

< 소득 불평등도 추이 >

	'97년	'98년	'99년	'02년	'03년	'04년	'05년
지니계수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0.283	0.316	0.320	0.312	0.306	0.310	0.310
소득 5분위 배율(%)	4.49	5.41	5.49	5.18	5.22	5.41	5.43

\* 통계청, 가계조사연보('05)

< 상대 빈곤율\* 비교 >

(%)

한국 <sup>1)</sup>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18.0	17.1	15.3	11.4	9.8	5.3	10.2 <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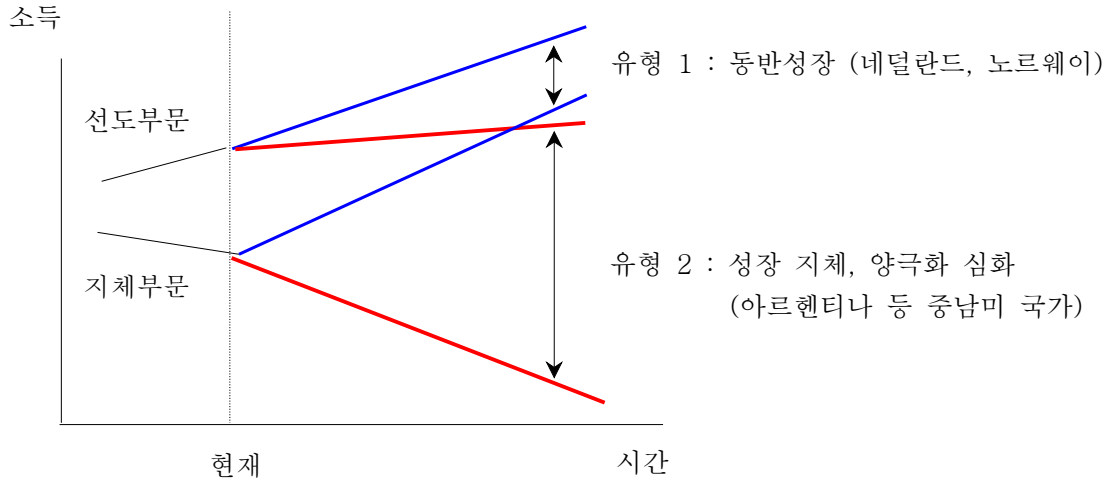
1) 한국은 '05년, 다른 나라는 '00년 기준, 2) OECD 25개국 평균

\*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전체 가구

\* 통계청('05), Förster and Mira D'Ercole, OECD data('05)

- 대응이 지체될 경우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이 고착되어 선도·지체부문의 동반 하향 및 격차 확대 우려(유형 2)

< 성장과 양극화의 진행 유형 >



⇒ 양극화 심화는 사회적 이동성(Upward Social Mobility) 기회를 박탈하여 빈곤의 악순환 초래 우려(빈곤의 대물림)

④ (넓은 사회시스템) 넓은 제도와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해집단간 대립과 과도한 권리주장으로 사회갈등 분출

- 최근 합리적 갈등조정 역량이 향상되고 있으나 (예 : 방폐장 부지선정,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아직은 미성숙

\* 기업지배구조(34위), 교육경쟁력(40위), 정부의 행정효율(31위) 등 사회 기본시스템이 취약('05, IMD)

⇒ 넓은 제도와 관행은 복지·노동·교육 등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급한 분야에서 개혁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II-2. 대외적 여건

- ① (세계화·정보화의 급진전) 세계화 및 지역경제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
- 무역·투자자유화,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 등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
    - \* 전세계 총 무역량('05) 중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국가간 거래
  - 세계화의 진전으로 금융의 국제적 동조현상이 심화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며, 기업은 무한경쟁에 직면
  - 세계화에 대한 적응능력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성장이 좌우
-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됨에 따라 기존 산업사회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
- 지식 창출·활용 능력이 혁신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상
  -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가 확대될 가능성
    - \* 과학기술은 자본·노동과는 달리 수확체증적으로 발전

⇒ 무역의존도가 높고 IT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경제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선진국으로의 도약 가능

⇒ 그러나, 세계화·정보화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득불평등, 산업·기업·계층간 혁신격차 확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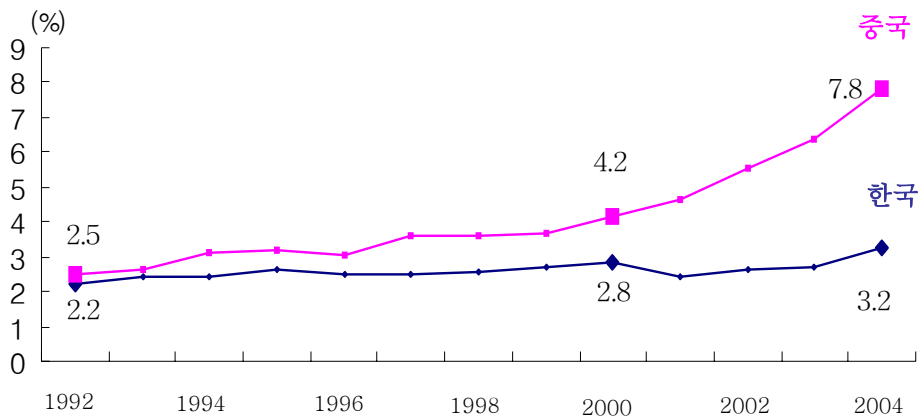
② (BRICs의 급성장)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 세계경제에서 BRICs의 비중이 크게 증가될 전망

\* BRICs GDP 비중 : ('05) 12 → ('20) 25 → ('30) 33% 수준  
(’05.12, Goldman Sachs)

- 특히, 중국의 경제규모는 '20년경 일본을 상회할 것이며 (현재는 일본의 1/3), 정치·경제적 지위도 급상승 전망
- 브라질, 러시아, 인도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진입할 전망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1992~2004)>



\* KDI, UN통계 재구성('05)

⇒ BRICs의 거대한 시장은 커다란 수출시장으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풍부한 저임노동력은 최적의 생산기지를 제공

⇒ 반면, BRICs에 대한 투자확대는 국내투자 위축 및 고용창출 기회감소로 이어지고, 이들 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로 세계시장에서의 경합이 심화



## II-3. 국민의 입장에서 본 불안 요인

---

- ◇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적 심리는 다시 저출산, 저소비, 저성장으로 연결  
\* 국민이 느끼는 3대 불안요인 : 먹거리, 노후, 범죄('05.11, 통계청·사회통계조사)
- 

- ① (일자리) 지식 수명 단축과 사회환경의 급변으로 고용불안
  - 상시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 불안감 증대
  - 대형 유통업체 등장으로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 폐업⇒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개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기대
  
- ② (기본수요)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교육·주거·의료비 부담
  - 가족이 사고를 당하거나 불치병에 걸리면 빈곤층으로 추락
  - 치열한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가중⇒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소요되는 개인 부담의 완화 기대
  
- ③ (노후생활) 은퇴 후 건강, 소득에 대한 불안 가중
  - 치매·중풍 등 노인 질환에 걸릴 경우 치료비, 간병, 가정 붕괴에 대한 불안
  - 연금 수급 등 노후 소득에 대한 우려⇒ 노후생활을 위한 믿을 수 있는 보장체계 구축 기대
  
- ④ (규범·신뢰)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로 사회규범 준수 의식이 떨어져 사회적 불안 증대
  - ‘자신’은 64%, ‘타인’은 28%만이 법을 지킨다고 생각\*
  - 평소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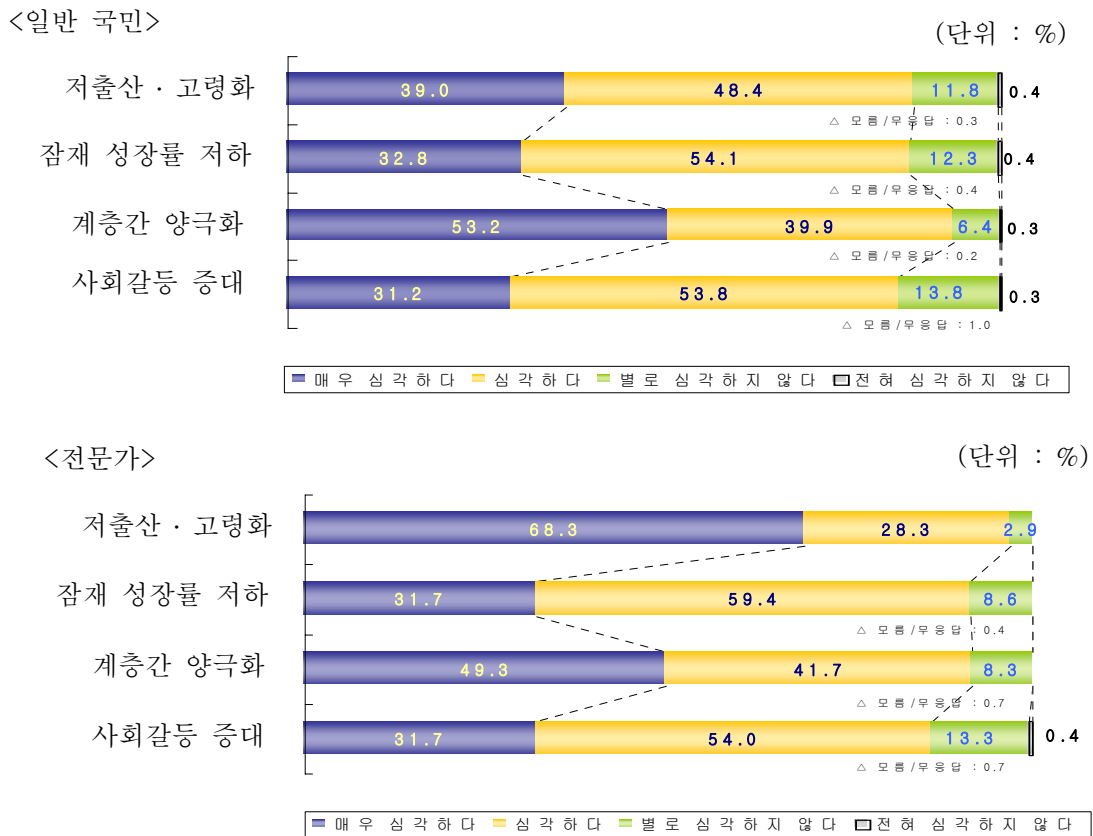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05.11)

⇒ 안전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사회 구현

## < 참고 > 설문조사 주요결과 분석

- ◇ 조사기관 : KDI 경제정보센터
- ◇ 조사시기 및 표본 허용오차 : '06. 1. 17~20일, ±3.1%
- ◇ 대상 : 전문가 281명(이메일), 일반국민 1,030명(전화)

### ① (불안요인) 일반국민들은 ‘계층간 양극화’ 문제를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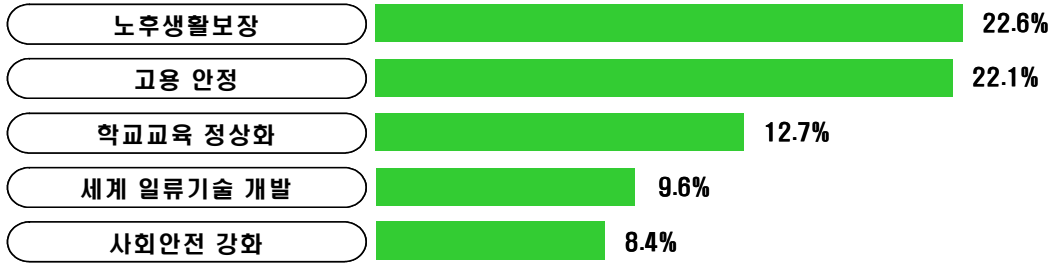


#### ※ 일반국민들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불안요인(복수응답)

- ① 일자리나 사업 등 벌이와 관련한 문제 : 62.4%
- ②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 : 59.6%
- ③ 노후대비 : 38.6%
- ④ 건강 :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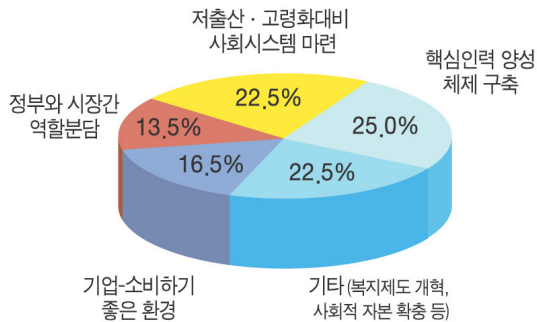
② (우선해결과제) 일반국민은 노후생활보장, 고용안정 등에, 전문가는 핵심인력 양성, 기술개발 투자확대 등에 높은 관심

<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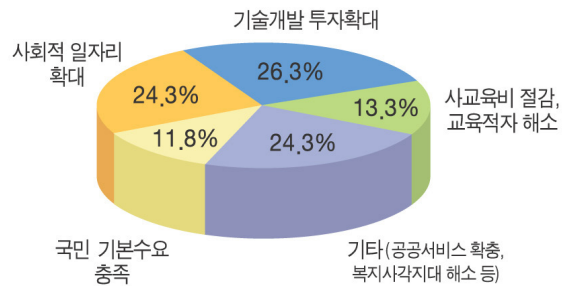


< 전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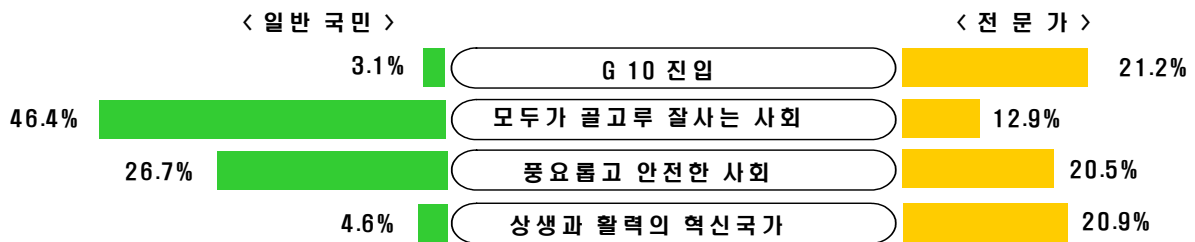
( 제도혁신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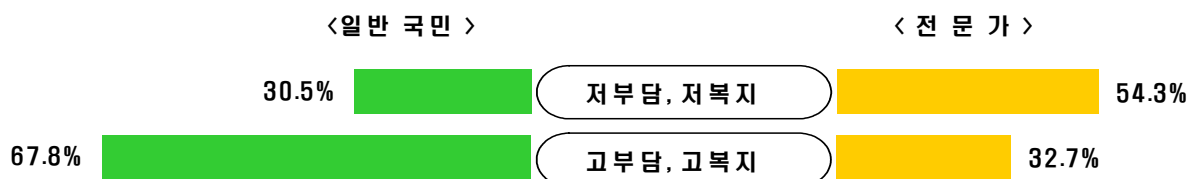
( 선제적 투자 분야 )



③ (바람직한 미래상) 일반국민은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전문가는 ‘G 10 진입’을 가장 선호



④ (부담-혜택 선택문제) 일반국민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를, 전문가는 반대의 경우를 선호



### Ⅲ.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 요 약

- ◇ (그동안 국가발전과정 회고) 경제규모 등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삶의 질 등 질적 향상은 미흡
  - ▶ 외환위기 이전
    - 정부주도 성장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달성했으나 불균형 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외환위기 초래
  - ▶ 외환위기 이후
    -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국민의 정부)  
→ 혁신·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모형 정립(참여정부)
  
-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반성장 추진
  - ▶ 성장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이자 불가분의 관계
    - 성장을 통해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복지수준 향상
    - 복지수준 향상으로 사회적 이동성 제고, 생산요소의 양·질 개선으로 성장에 기여
    -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 뒷받침

### Ⅲ-1. 그동안 국가발전과정 회고

#### (1) 외환위기 이전

- ① (여건) 빈약한 부존자원, 전쟁으로 인한 인프라 파괴, 농업중심의 경제구조, 해외원조 의존 등 전반적으로 열악
- 60년대 : 1인당 소득이 100불 이하('60년 81불)인 빈국, 영세한 농업위주의 낙후된 산업구조
  - 70년대 : 보호무역주의 경향 대두, 1차 오일쇼크
  - 80년대 : 60~70년대 고도성장의 부작용 발생, 2차 오일쇼크
  - 90년대 : 동·서간 이념대결이 종식되면서 국제경쟁이 본격화, 민주화 과정에서 지나친 욕구·갈등 분출
- ② (전략) 국가가 7차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내·외자, 정책금융 등)을 총동원하여 경제개발에 집중
- 60년대 : '자립경제달성·공업화 기반구축'의 목표 하에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채택
  - 70년대 : 중화학공업 집중 육성
  - 80년대 : 통화팽창 억제, 정부지출 축소 등 경제 안정화와 공정거래법 제정('80) 등 산업정책 전환
  - 90년대 : 경제제도 개혁·산업경쟁력 향상·국민생활 여건 개선과 국제교역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

③ (주요성과) 빠른 경제성장과 수출증대로 ‘한강의 기적’을 달성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소득 1만불 달성

- \* 1769(영국 산업혁명) → 1987 : 218년 소요
- 1850(미국 산업화) → 1978 : 128년 소요
- 1867(일본 메이지유신) → 1981 : 114년 소요
- 1962(한국 경제개발계획) → 1995 : 33년 소요

○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제공하는 보기 드문 사례

▪ 식민지 60개국 중 해외원조 제공국 : 한국, 대만, 체코, 폴란드

- \* '62년 공적개발원조(ODA) 개시, '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 \* 올림픽 개최('88), UN가입('91), WTO가입('95), OECD가입('96)

< 주요 경제지표 >

지 표	'60	'65	'75	'85	'95
· 실질성장률(%)	1.2	5.7	5.9	6.8	9.2
· 1인당 GNI(불)	79	105	602	2,039	11,432
· 수출(백만불)	33	175	5,081	30,283	125,058
· 수입(백만불)	343	463	7,274	31,136	135,119
· 총인구(만명)	2,501	2,871	3,528	4,081	4,509

④ (한계) 정부주도의 불균형 압축성장에 따른 후유증 노정

○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의 자생적 발전이 지연

○ 삶의 질, 국민의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

○ 불균형 성장의 결과 지역간, 업종간, 계층간 양극화 단초 제공

→ 결국 압축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구조적 문제, 대외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부족, 개혁의 지연 등으로 외환위기 초래

## (2) 국민의 정부

### ① (여건) 압축·불균형 성장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외환위기 상황 속에서 출범

- 정부주도형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구조의 부실과 사회 각 부문에 걸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만연
- 1990년대 이후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이 지연됨에 따라 국제경쟁력 약화
- 금융자유화·자본시장 자유화는 급속히 진행된 반면, 이에 부합하는 금융 감독체제의 구축이 미흡

### ② (전략)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현안과제 해결에 주력

- 외환유동성 부족 해결과 외환·금융시장의 안정
-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의 토대 구축
- 생산적 복지 확충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

### ③ (주요성과) 단기간 내에 경제를 정상궤도로 회복,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반 마련

-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세계 4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
  - IMF 차입금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전액 상환
    - \* 외환보유고 : ('97.12) 39 → ('02.12) 1,214억불
    - \* 대외채권 : ('97.12) △541 → ('02.4) 454억불
- 국가신용등급을 위기 이전의 수준인 A등급으로 회복
  - \* S&P : ('97.10) AA<sup>-</sup> → ('97.12) BBB<sup>-</sup> → ('02.7) A<sup>-</sup>

-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고 '98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빠른 경제 회복

< 주요 경제지표 >

	'96	'97	'98	'99	'00	'01	'02
· 실질성장률(%)	7.0	4.7	△6.9	9.5	8.5	3.8	7.0
· 1인당 GNI(불)	12,197	11,176	7,355	9,438	10,841	10,162	11,493
· 실업률(%) <sup>1)</sup>	2.0	2.6	7.0	6.3	4.4	4.0	3.3
· 경상수지(억불)	△231	△83	404	245	123	80	54

1) '00년부터 고용통계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기준으로 변경

④ (한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나 단기개혁에 따른 후유증 노정

- 급속히 도입된 글로벌 스탠더드가 기존 시스템과 마찰
  - 오너중심의 경영행태가 바뀌지 않고 단기성과에 치중
  - 부실기업 지원, 신용불량자 대책 등  
현안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
- 성장동력 둔화, 양극화·세계화·저출산 등  
장기·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한계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질적 향상은 미흡
  - 양적 확충과 응급소요 충족에 우선



### (3) 참여정부

① (여건) 외환위기 이후 경제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화, 복지, 인권 등 새로운 요구가 혼재

-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
-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신용대란 발생
-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미흡
-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부문간,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분출되는 등 사회적 긴장이 고조

② (전략) 참여와 분권, 혁신과 통합을 바탕으로 역동과 기회의 한국 건설을 추진

- 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용으로 선진화를 위한 기틀 마련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시스템 구축

③ (중점 추진과제) 혁신과 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모형 정립 추진

-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체질 개선을 통하여 미래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
  - 경제 각 부문의 구조조정과 함께 능력과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 성장동력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노력 강화
  - R&D 투자를 지속 확대(연평균 8.3%)하는 등 기술혁신을 뒷받침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보육 및 노인복지 지원을 강화
- 참여복지 정책을 추진, 복지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복지과 성장간 선순환구조 정착노력 강화
  - \* 복지재정 지출 : ('00) 35.2 → ('06) 56.0조원

	외환위기 이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도입('88)</li> <li>· 전 국민 의료보험('89)</li> <li>· 고용보험 도입('9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국민 국민연금('99)</li> <li>· 고용보험('98), 산재보험('00)</li> <li>· 전사업장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개혁 추진('03~)</li> <li>· 4대보험 적용·징수 통합 추진('05~)</li> </ul>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수당 도입('9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연금 도입('98)</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상위층 자활사업 확대('04)</li> <li>· 차상위층 의료급여 확대('04)</li> <li>· 장애수당 확대('05)</li> <li>·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06)</li> </ul>

- 정경유착, 권위주의 등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선진 사회 시스템을 구축
  -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과 정치자금 제도 개선

< 참여정부 출범 前·後의 주요 지표 >

	'01	'02	'03	'04	'05
· 실질성장률(%)	3.8	7.0	3.1	4.7	4.0
· 1인당 GNI(불)	10,162	11,493	12,720	14,193	16,291
· 실업률(%)	4.0	3.3	3.6	3.7	3.7
· 경상수지(억불)	80	54	119	282	166
· 외환보유액(억불)	1,028	1,214	1,555	1,991	2,104
· 지니계수	0.319	0.312	0.306	0.310	0.310
· 고용률(%, OECD, 15~64세)	62.1	63.3	63.0	63.6	63.7

## < 참고 1 > 주요 사회정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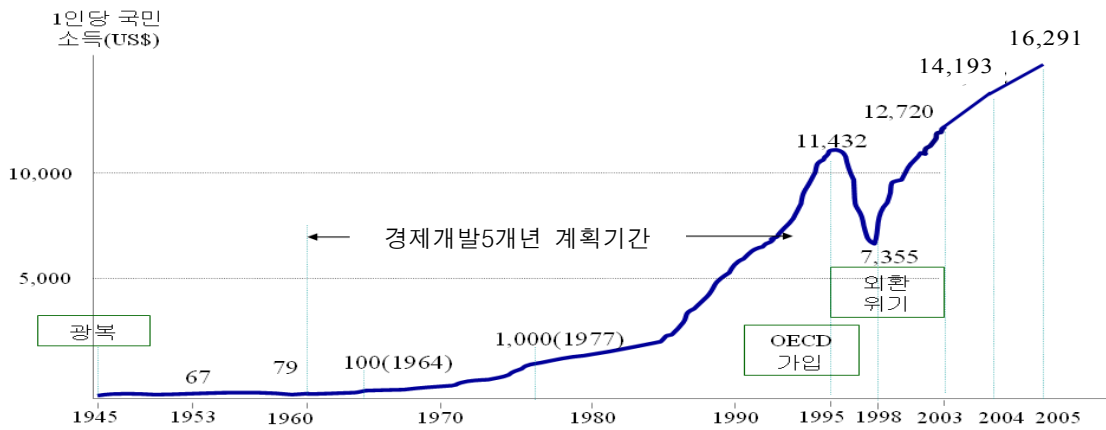
정책과제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 건강보험 변화·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89)</li> <li>▪ 국민 의료접근성 강화</li> <li>* 1인당 병의원 방문일수 : OECD평균 7.5, 한국 10.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통합 ('00 조직통합, '03 재정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보장성 강화</li> <li>▪ 건강보험 적자 해소</li> <li>▪ 중증질환 지원 확대, 식대 지원 등</li> <li>▪ 비교적 낮은 의료비로 선진국 수준의 건강수준 달성</li> <li>*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 OECD 평균 8.7%, 한국 5.6%</li> <li>* 평균수명 증가율 세계 1위 ('77. 64.5세→'03. 77.5세)</li> </ul>
2.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확충 및 기반조성</li> <li>▪ 3개년('95~'97)간 보육시설 7,590개소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0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06) 수립</li> </ul>
3. 서민 주거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건설 확대</li> <li>▪ 주택200만호 건설사업('88~'92)</li> <li>▪ 영구임대주택 도입(19만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li> <li>▪ 근로자 및 도시영세민 주택자금 지원 확대('99)</li> <li>▪ 국민임대주택 건설 개시</li> <li>▪ 최저주거기준 도입('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추진('03~'12)</li> <li>▪ 다가구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04~)</li> <li>▪ 민간 부도임대 대책 마련('05)</li> </ul>
4. 장애인 복지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지원제도 기초 수립</li> <li>▪ 장애인 등록제도 및 의무고용제 도입</li> <li>▪ 장애수당 도입('9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부처 협력 종합계획 최초수립</li> <li>▪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수립('98~'02)</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정('98)</li> <li>▪ 장애아동부양수당 도입('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인권·복지 마스터 플랜 마련</li> <li>▪ 희망한국 21 수립('05)</li> <li>▪ 장애인 종합대책 수립('06)</li> <li>▪ 소득·교육·고용보장, 이동권·정보접근권 보장 등</li> </ul>

정책과제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5. 교육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아, 학교중도 탈락자, 학습부진아, 귀국학생 등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97)</li> <li>▪ 중학생 무상 의무교육,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시작('8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비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직자 자녀('98), 저소득층('00)</li> </ul> </li> <li>▪ 만5세아 무상교육 기반 마련('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저소득층에만 제한적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도시 저소득 지역) 지원('03~)</li> <li>▪ 방과후 활동 확대</li> <li>▪ 만5세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li> <li>▪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국 확대('04)</li> <li>▪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03-'07)</li> </ul>
6.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관계 개혁추진('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등('97)</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정위 출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98)</li> <li>▪ 교원노조 허용 등('9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정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04.2)</li> <li>▪ 공무원노조법 제정('05.1)</li> </ul>
7. 비정규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 통계조사 시작('01.8)</li> <li>▪ 비정규직 범위 합의 ('02.5, 노사정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입법마련(국회 제출, '04),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수립('06.8)</li> </ul> </li>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수립 추진</li> </ul>
8. 문화·체육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시설 확충</li> <li>▪ 동·하계올림픽 10위권 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산 1% 달성</li> <li>▪ 예술창작 인프라, 예술전문인력 양성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적 예술자원 행정체계 정립</li> <li>▪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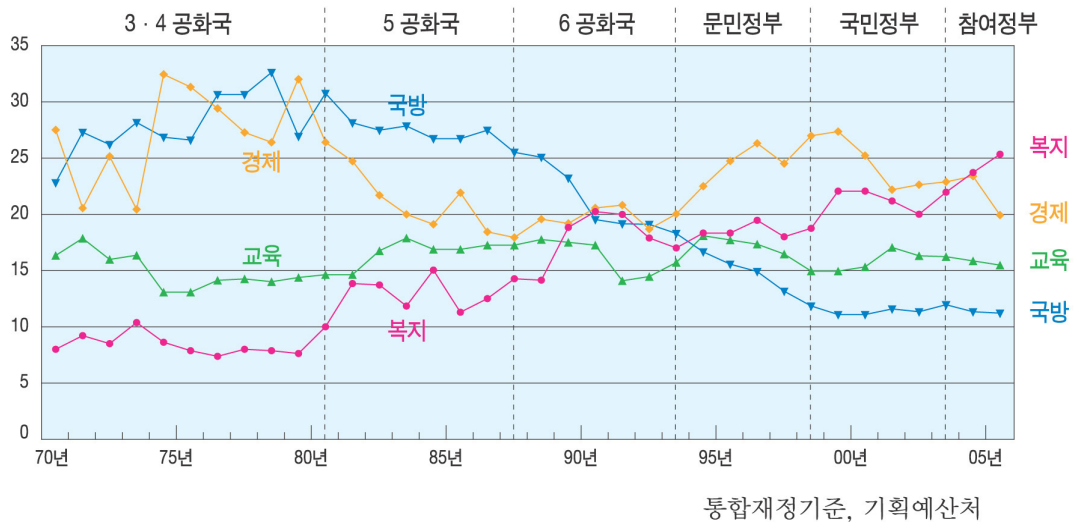
## < 참고 2 >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변천 요약

	← 국가주도 경제개발 →		← 민간주도 전환시기 →		← 참여정부 →		
	'62	'82	'92	'93	'97	'02	'03
계획	1~4차 5개년 계획		5~6차 5개년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	장기계획 부재	국정과제 로드맵
계획의 성격	자원배분		유도형		민·관 협력	단기현안 해결	분야별 비전
계획의 중점	수출, 중화학공업 육성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제화, 자유화	4대 부문 구조조정	사회형평제고 균형발전
계획수립자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	국정과제위원회
슬로건	조국근대화 수출입국 (새마을 운동)		선진조국 민족자존		신한국건설 국제화, 세계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금모으기 운동)	혁신과 통합

<1인당 국민소득 변화 추이>



< 전체 재정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 >



### < 참고 3 > 지표로 보는 한국의 현주소

□ 경제 일부 분야는 10위권 이내이나 나머지는 중하위권 수준

① 종합지표 분야 : 국가경쟁력, 삶의 질 등은 20~40위권 수준

② 경제 분야 : 양적측면은 상위권, 질적측면은 중위권 수준

- GDP·교역 규모,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등은 선진국 수준
- 1인당 GDP, 1인당 외국인투자유치 등은 중위권 수준

③ 사회 분야 : 전반적으로 중하위권 수준

- 연구개발 투자, R&D/GDP 비율은 10위권 이내
- 노사관계, 상대적 빈곤율, 공적의료비 지출 등은 하위 수준

※  은 10위권 이내 지표

		지 표	순 위	우리나라	1위국
총 합	IMD 주요 지표	IMD국가경쟁력('05, 100점)	29/60	64.2	100.0(미국)
		국가이미지('05, 10점)	34/60	6.2	8.9(칠레)
		삶의 질('05, 10점)	41/60	5.3	9.5(호주)
		사회 응집력('05, 10점)	34/60	6.09	8.93(싱가포르)
		사회정의('05, 10점)	35/52	5.71	9.04(바바리아 <sup>1)</sup> )
	기타 지표	WEF 국가경쟁력('05)	17/117	-	핀란드
		UNDP HDI <sup>2)</sup> ('05)	28/177	-	노르웨이
		CATO <sup>3)</sup> 경제자유도('03, 10점)	35/127	7.0	8.7(홍콩)
		TI <sup>4)</sup> 투명성 지수('05, 10점)	40/159	5.0	9.7(아이슬랜드)

1) 독일 바바리아 지방

2) Human Development Indicator(인간개발지수)

3) CATO Institute(민간경제연구소, Washington D.C. 소재)

4) Transparency International(국제투명성기구, 베를린 소재)

		지 표	순위	우리나라	1위국
경제	GDP	명목 GDP <sup>5)</sup> (’05, 억달러)	12/180	7,875	124,860(미국)
		PPP GDP <sup>5)</sup> (’05, 억달러)	14/180	9,876	122,780(미국)
		1인당 GDP <sup>5)</sup> (’05, 달러)	36/180	16,312	75,130(룩셈부르크)
		1인당종합자산(’00, 달러)	25/118	141,282	648,241(스위스)
	인프라	초고속인터넷(’04, 백명당 가입자수)	1	24.8	-
		정보화 지수(’05, 100점)	3/50	91	97(스웨덴)
		전력생산(’03, 십억KWH)	11/212	326	3,891(미국)
	무역	교역규모(’05, 억달러)	12	5,456	26,370(미국)
		수출(’05, 억달러)	12	2,844	9,785(독일)
		수입(’05, 억달러)	13	2,612	17,325(미국)
		세계시장점유율 1위 품목수(’03, 개)	15/71	71	867(중국)
		세계시장1-10위 품목수(’03, 개)	13/109	1,212	4,092(독일)
	해외투자	외국인투자유치(’03, 백만달러)	28/198	47,465	1,159,044(미국)
		해외투자(’03, 백만달러)	25/198	34,531	2,069,013(미국)
	산업	선박수주량(’05, 천CGT)	1	13,571	-
		조강생산량(’05, 백만MT)	5	47.8	349.4(중국)
		DRAM 매출액(’05, 백만달러)	1	12,131	-
		TFT-LCD 매출액(’05, 백만달러)	1	222,300	-
		자동차 생산(’05, 천대)	5	3,699	11,947(미국)
	기업	세계 100대 브랜드(’05, 개)	7	3	57(미국)
		포춘 500대기업(’05, 社)	9	11	176(미국)
		아시아 50대 기업(’05, 社)	3	4	37(일본)

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06.4)

		지 표	순위	우리나라	1위국
사 회	노동	근로자행복지수 <sup>6)</sup> (’05, 유로)	16/56	40,819	47,500(UAE)
		IMD 고용(’05, 인구 대비 비율)	20/61	47.3	68.9(룩셈부르크)
		IMD 노사관계(’05, 10점)	60/60	4.0	8.5(싱가폴)
		생산직근로자 총급여(’03, 달러/시간)	22/29	10.28	32.18(덴마크)
	복지	공공사회지출(’01, GDP비율)	29/29	6.1	29.2(덴마크)
		공적의료비 지출(’03, %)	26/28	49.4	90.1(체코)
		상대 빈곤율(’00, %)	25/26	13.3	4.3(덴마크)
		영아사망률(’02, 명)	22/30	5.3	2.2(아이슬랜드)
		평균수명(’04, 歲)	32/61	77.0	82.0(일본)
	교육	연구개발투자(’04, 억달러)	7/61	194	3,124(미국)
		R&D/GDP(’04, %)	8/61	2.9	4.6(이스라엘)
		학생1인당교육비지출(’01, 달러)	22/30	5,159	11,091(룩셈부르크)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05, 10점 만점)	52/60	4.00	7.97(핀란드)
	환경	1인당실제이용가능 물(’04, m <sup>3</sup> )	134/169	1,454	582,191(아이슬랜드)
		1인당종이소비량(’03, kg)	23/30	171.8	335.4(벨기에)
		산업폐기물(’04, kg/GDP)	11/25	40	10(뉴질랜드, 스위스)
	국제 교류	TOEFL 점수(’04, CBT 300점)	99/147	213	263(덴마크)
		관광객 입국(’03, 백만명)	35	4.8	75.0(프랑스)
		관광수입(’03, 십억달러)	26	5.3	64.5(미국)
		관광지출(’03, 십억달러)	15	8.2	64.7(독일)

6) Forbes, Employee Happiness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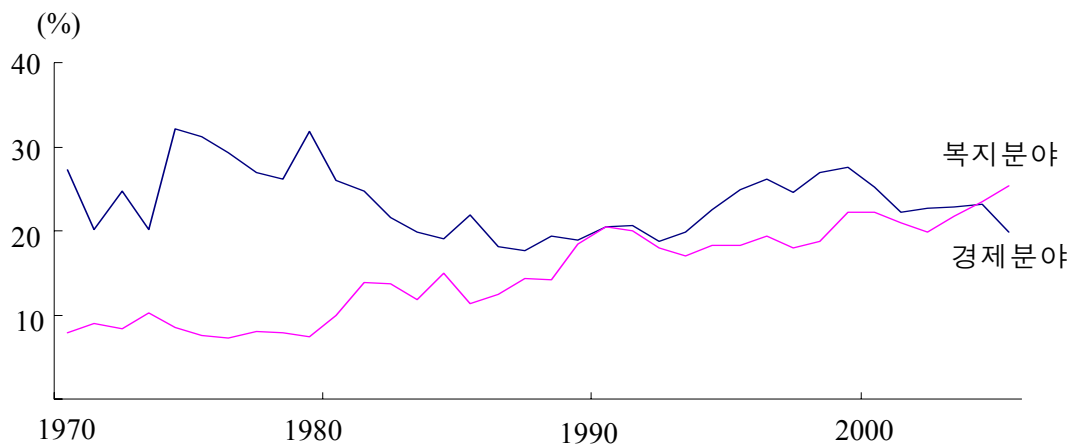


### III-2.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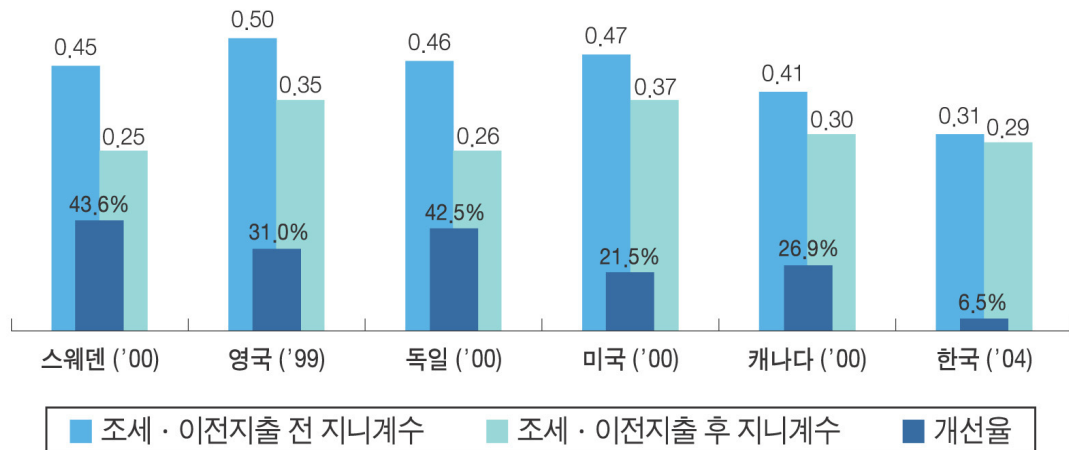
①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발전전략의 패러다임으로  
‘先성장 後복지’ 추진

- 성장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양적 투입 위주, 정부주도, 수출위주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
- 그동안 복지문제는 가족공동체에 의존한 측면이 크고 각종 사회안전망은 외환위기 대응차원에서 도입
- 최근까지도 경제분야 재정지출 비중이 복지분야 비중을 상회

< 경제·복지분야 재정지출 추이 >



- 복지재정지출 규모가 적어 재정의 분배개선 기능도 미약



② 기존 패러다임은 90년대 중반 이후 경제구조가 성숙되고 세계화·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한계 노정

○ 6~8%대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하향세를 보이며 '01~'05년간은 4% 중반대로 하락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및 경기 변동성 증가로 성장의 일자리 창출효과 감소(jobless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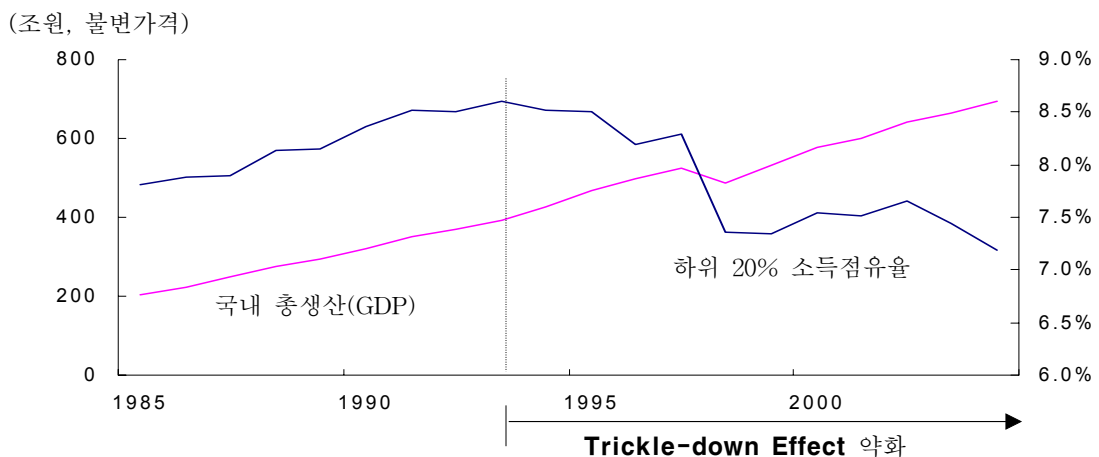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	
	경기확장기	경기수축기	경기확장기	경기수축기
	49.4만명	26.9만명	29.2만명	28.5만명

▪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의 비효율성도 지속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 규제로 인한 경쟁제약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한
- \* 부정확한 소득과약과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등으로 복지체감 수준은 제자리

○ 성장의 분배개선 효과(Trickle-down Effect)도 약화

- \* 분배악화 → 중산·서민층 소비여력 약화, 계층간 불화 심화 → 소비위축·내수악화, 사회불안 → 결국 성장저해 가능성



③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추진

○ 성장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으로 수평적·균형적으로 추진

- 경제정책은 성장을 위한 것이고  
복지정책은 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접근 지양

- 동반성장 전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모든 계층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생산능력 극대화를 지향

⇒ 사회정책을 성장전략의 하나로 간주하여  
경제정책과 통합·추진

○ 성장은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수준 향상 촉진

-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클수록 복지는 크게 개선되며  
세수증가에 따른 교육·복지 투자도 확대 가능

○ 복지수준 향상은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통해 생산요소의 질과 양을 높여 성장에 기여

-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성장을 뒷받침

- 보육서비스 확대, 근로장려세제, 비정규직 대책 등

→ 근로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 공적연금, 공공부조 등

→ 패자부활 기회 제공, 불확실성 완화

④ 인적자본 고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등을 통해 동반성장을 뒷받침

○ 인적자본 고도화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립을 연결하는 핵심요소

- 양질의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의 관건
- 특히, 교육격차 해소는 생산성 제고와 사회적 상향이동에 기여함으로써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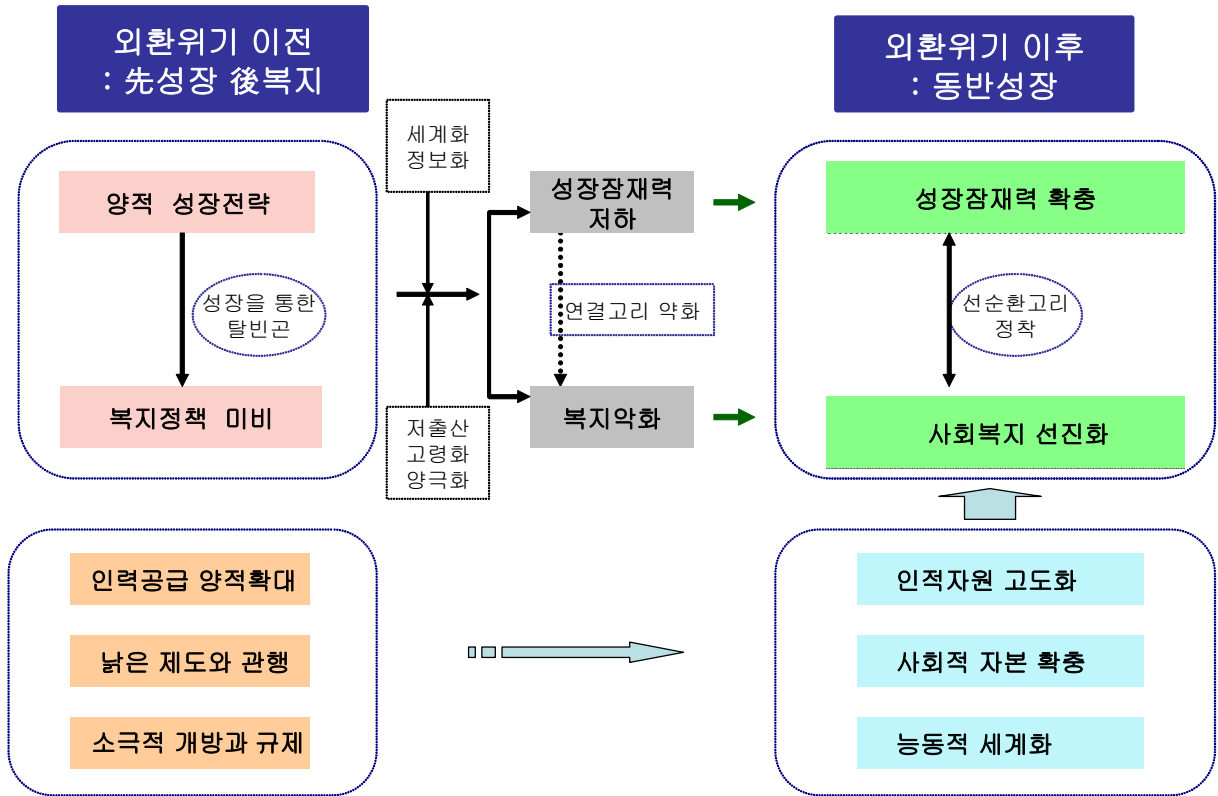
○ 사회적 자본은 물적·인적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복지수준 향상 촉진

- 구성원의 신뢰와 협력 증진, 제도·규범의 합리성 제고, 갈등의 원만한 해결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
- 소속감·정체성 제고, 사회적 안정 확대 등을 통해 복지 향상

○ 전략적·적극적 세계화를 통해 국가이미지와 경쟁력 제고

- 세계화에 따르는 구조조정과 사회양극화 확대 등의 문제는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보완

## < 패러다임의 전환 >



	기존 패러다임	동반성장 패러다임
· 추진 배경	탈빈곤, 성장과 분배의 고리 작동	양극화 심화, 성장과 분배의 고리 약화
· 정부 역할	성장에 집중	성장과 복지의 조화
· 성장 전략	양적 투입위주 · 불균형 성장, 정부 주도	혁신주도형 · 균형 성장, 시장 주도
· 복지 전략	가족 · 공동체에 의존, 구호적 복지	정부의 역할 제고, 미래를 위한 투자
· 투자 중점	物的 자본	人的 · 社會的 자본*

\* 사회적 자본 : 구성원간 신뢰와 협력, 개방성 및 이를 촉진하는 제도·규범·네트워크 등을 의미

## IV. 2030 한국의 구상

---

### 요 약

#### ◇ (비전과 전략)

- ▶ 비전 : 「함께가는 희망한국」 건설
- ▶ 3대 목표 : ①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②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
- ▶ 5대 전략 : ① 성장동력 확충 ② 인적자원 고도화  
③ 사회복지 선진화 ④ 사회적 자본 확충  
⑤ 능동적 세계화

#### ◇ (미래의 모습)

- ▶ 전국민 : 계층이동이 원활하고 다양한 기회가 보장
- ▶ 근로자 :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실업걱정이 완화
- ▶ 기업인 :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
- ▶ 학생/청소년 : 수요자 중심의 교육여건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 여성 : 출산·육아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노인 :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 가능
- ▶ 장애인 : 삶의 질이 향상되고 완전한 사회일원으로 통합
- ▶ 저소득층 : 최소한의 기초생활과 건강이 보장
- ▶ 농어업인 :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

## IV-1. 비전과 전략

### ① (비전) 「함께가는 희망한국」 건설

#### ○ “함께가는” 한국

- 성장과 복지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국가
- 경쟁에서 탈락한 자에게도 재도전의 기회가 제공되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국가

#### ○ “희망” 한국

- 성별·장애·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고 다양한 기회와 계층간 원활한 이동이 보장되는 국가
-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국가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 건설

② **(3대 목표)** 비전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3가지 목표상을 제시

- ⇒ ①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 ②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 ③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

①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제

- 핵심인력 양성으로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선진 지식과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는 경제
-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경제주체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경제

②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다양한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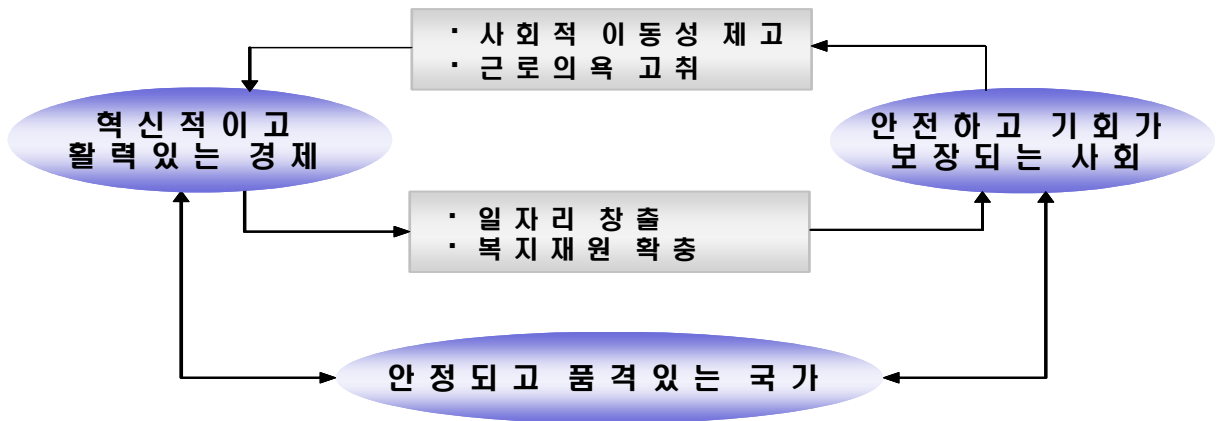
- 생존의 기본조건인 ‘안전’이 보장됨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는 사회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고, 원활한 계층이동성이 보장되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

③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

- 대화와 타협,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과 대립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안정’된 나라
-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나라



< 3대 목표간 상관관계 >



③ (5대 전략) 비전달성을 위해 5대 전략 중점 추진

- ⇒ ① 성장동력 확충 ② 인적자원 고도화 ③ 사회복지 선진화  
④ 사회적 자본 확충 ⑤ 능동적 세계화

① (성장동력 확충) 기술혁신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확보

- 차세대 성장을 이끌어갈 R&D, 서비스·문화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등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② (인적자원 고도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경제·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인력개발 체계 구축

- 적극적 고용전략 추진,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잠재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 대학별 특성화, 대학평가제도 혁신 등 교육시스템 효율화

③ (사회복지 선진화)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구축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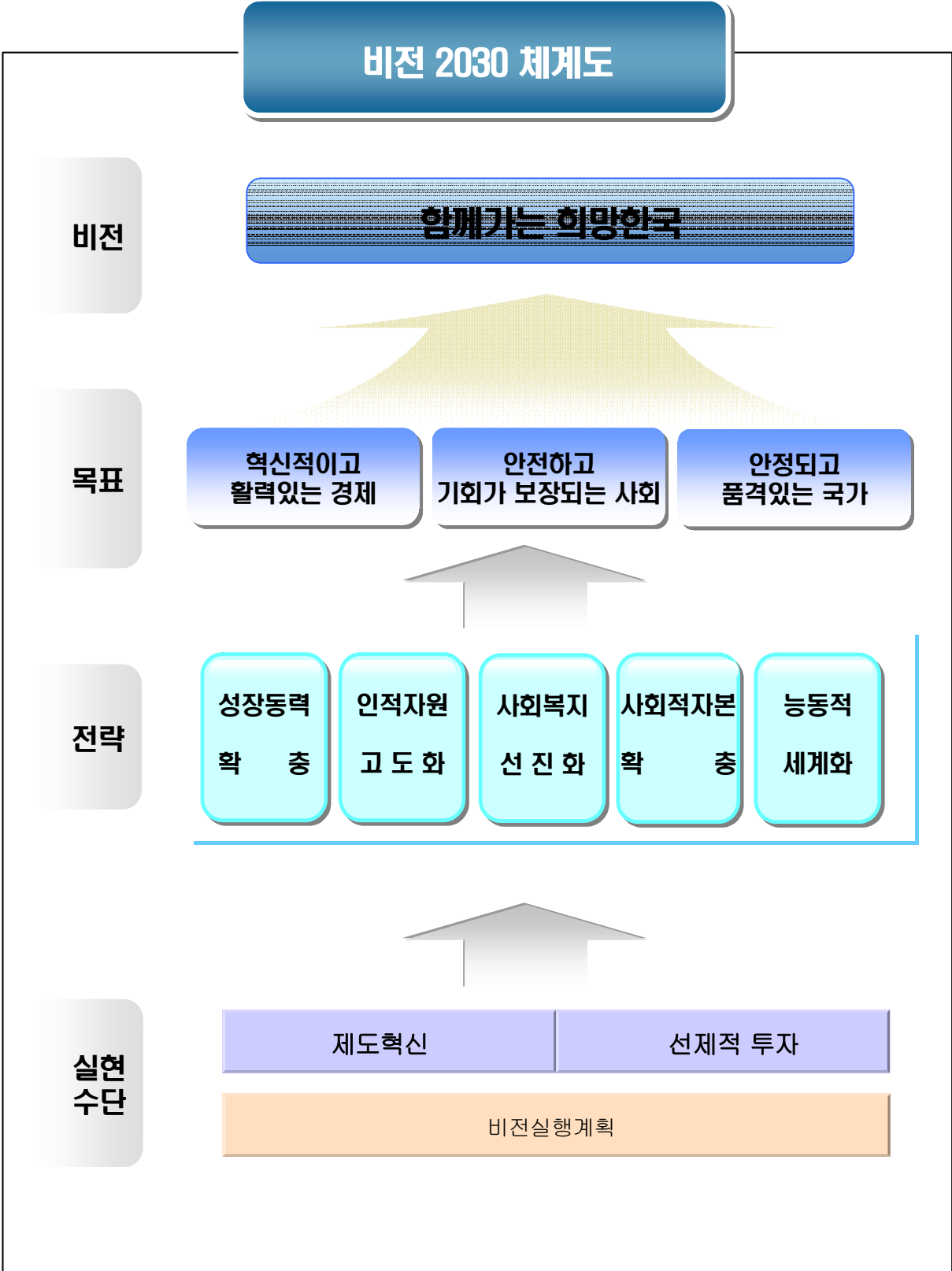
- 연금·건강보험 개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과 복지제도의 효율성 제고
- 보육 서비스 확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주거복지 확충 등 국민기본생활 충족

④ (사회적 자본 확충)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제도, 규범을 토대로 사회 전반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구성원간 신뢰확보와 투명한 조정체제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정부인력의 서비스위주 재배치 등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
- 지역공동체 등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을 통해 공공 복지체계를 보완

⑤ (능동적 세계화) 제도·의식·관행의 국제화를 통해 동북아의 Hub & Gateway로 발전하고 동아시아 전체의 성장에 기여

- FTA 체결 확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능동적인 국제사회 참여를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전
- ODA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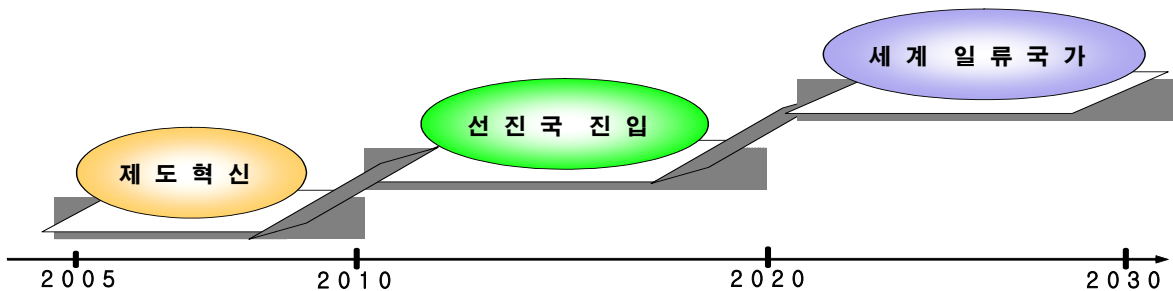


## IV-2. 비전실현을 통한 미래의 모습

### (1) 미래 한국의 모습

#### ① 비전실현을 통해 세계 일류국가 달성

- (제도혁신)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주요 사회·경제 제도의 혁신을 2010년까지 마무리
- (선진국 진입)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
- (세계 일류국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 ② 1인당 GDP와 삶의 질이 큰 폭으로 향상

- 1인당 GDP는 '30년 4만 9천불로서 현재의 스위스 수준 도달

\* 잠재성장률 추계(장기재정전망팀)

'06~'10년 : 4.9%, '11~'20년 : 4.3%, '21~'30년 : 2.8%

- 삶의 질 순위는 '30년 10위로서 현재의 미국 수준 추월

지표명	'05년	'10년	'20년	'30년	비 고('05 기준)
· GDP 규모 <sup>1)</sup> (십억불)	788 (788)	1,122 (1,262)	1,824 (2,567)	2,406 (4,145)	· 미국 12,486    일본 4,571 · 영국 2,201    이태리 1,766
· 1인당 GDP <sup>1)</sup> (천불)	16 (16)	23 (26)	37 (51)	49 (84)	· 스위스 50    미국 42 · 일본 36    프랑스 34
· 국가경쟁력(순위, IMD)	29	20	15	10	· 미국 1위    싱가포르 3위 · 스위스 8위    일본 21위
· 삶의 질(순위, IMD)	41	30	20	10	· 호주 1위    스위스 4위 · 미국 14위    일본 35위

1) 2005년 불변가격 기준, ( )안은 경상가격 기준

## (2) 미래 국민들의 모습

전 국민 : 계층이동이 원활하고 다양한 기회가 보장

- (기본수요) 교육, 주거, 의료 등 기본수요에 대한 걱정·불만이 없는 사회
  - 평생학습 참여율 : ('04) 22 → ('10) 30 → ('20) 40 → ('30) 50%
  - 건강보험 보장률 : ('05) 65 → ('10) 72 → ('20) 80 → ('30) 85%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 ('05) 4 → ('10) 10 → ('20) 20 → ('30) 30%
- (문화생활) 문화관람, 체육 등 기본적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 국민 문화 향유율 : ('03) 62 → ('10) 70 → ('20) 90 → ('30) 95%
- (안전) 식품안전, 치안, 교통안전 등 기초 생활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 WHO 인증 안전도시 : ('05) 1 → ('10) 3 → ('20) 7 → ('30) 10개
- (사회적 자본) 구성원간 배려·신뢰 등이 넘치고 부패없이 투명한 사회
  - 자원봉사 참여율 : ('05) 15 → ('10) 20 → ('20) 30 → ('30) 50%
  - 청렴도 지수(TI, 159개국) : ('05) 40 → ('10) 25 → ('20) 10 → ('30) 5위
- (삶의 질) 국민 개개인이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사회
  - 삶의 질(IMD, 60개국) : ('05) 41 → ('10) 30 → ('20) 20 → ('30) 10위
- (국가경쟁력) 규제완화, 성장동력 확충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사회
  - 국가경쟁력(IMD, 60개국) : ('05) 29 → ('10) 20 → ('20) 15 → ('30) 10위
- (쾌적한 환경) 대기오염 감소, 도심내 녹지공간 확대 등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 수도권 대기오염도 : ('05) 58 → ('10) 55 → ('20) 40 → ('30) 35 $\mu\text{g}/\text{m}^3$

## 근로자 :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실업걱정 완화

- (고용보장)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누구나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
  - 고용률(15~64세) : ('05) 63.7 → ('10) 67 → ('20) 70 → ('30) 72%
- (근로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사회
  - 산업재해율 : ('05) 0.77 → ('10) 0.58 → ('20) 0.37 → ('30) 0.24%
-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으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
  - 기업 교육훈련 비용(총교육훈련비용/총노동비용) : ('03) 1.5 → ('10) 2.2 → ('20) 2.7 → ('30) 3.2%
- (재취업)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사회
  - 실업자훈련 참여자 취업률 : ('05) 49.8 → ('10) 51.0 → ('20) 60.0 → ('30) 65.0%

## 기업인 :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환경)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기업규제가 적은 사회
  - 기업규제(IMD, 60개국) : ('05) 43 → ('10) 30 → ('20) 20 → ('30) 10위
- (협력적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
  -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 ('05) 56 → ('10) 42 → ('20) 26 → ('30) 15일
  - 기업의 사회적 책임(IMD, 60개국) : ('05) 30 → ('10) 25 → ('20) 20 → ('30) 10위
- (산학연계) 대학·연구소의 연구성과가 산업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사회
  - 산학간 지식이전 정도(IMD, 60개국) : ('05) 21 → ('10) 15 → ('20) 10 → ('30) 5위
- (기술향상) 우리 상품과 기술이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회
  - 세계일류상품 : ('05) 505 → ('10) 1,000 → ('20) 1,550 → ('30) 2,000개
  - 부품개발 기술수준(일본=100) : ('05) 84 → ('10) 94 → ('20) 98 → ('30) 105
  - 혁신형 중소기업 : ('05) 1 → ('10) 3 → ('20) 6 → ('30) 9만개
- (대·중소기업 상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사회

## 학생/청소년 : 수요자 중심의 교육여건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정규교육)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내실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 ('05) 32 → ('10) 30 → ('20) 27 → ('30) 23명
- (방과후 활동) 사교육비 부담없이 방과 후에도 양질의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사회
  - 방과후 활동 수혜율 : ('05) 32 → ('10) 67 → ('20) 72 → ('30) 75%
- (교육환경) 입시 압박에서 벗어나고, 학생의 다양한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회
  - 공영형 혁신학교,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 활성화
- (성장환경)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사회
  - 아동안전사고율(아동 10만명당) : ('05) 8.3 → ('10) 7.3 → ('20) 6.0 → ('30) 5.0명
- (대학생활) 대학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사회
  - 대학교육 사회부합도(IMD, 60개국) : ('05) 52 → ('10) 40 → ('20) 20 → ('30) 10위

## 여성/맞벌이부부 : 출산·육아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회생활)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여성권한이 신장된 사회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05) 50.1 → ('10) 55 → ('20) 60 → ('30) 65%
  - 여성권한척도(UNDP, 80개국) : ('05) 59 → ('10) 45 → ('20) 30 → ('30) 20위
- (임신·출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보장되는 사회
  -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당) : ('02) 5.3 → ('10) 4.5 → ('20) 4.0 → ('30) 3.0명
- (육아) 양육비 걱정없이 질 높은 육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 육아서비스 수혜율 : ('05) 47 → ('10) 65 → ('20) 67 → ('30) 74%
  -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 ('05) 62 → ('10) 42 → ('20) 38 → ('30) 37%
- (성평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차별 없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 남녀소득격차(여성소득/남성소득) : ('03) 0.48 → ('10) 0.53 → ('20) 0.60 → ('30) 0.70

## 노인 :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

- (소득보장)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
  - 공적연금 수급률 : ('05) 16.6 → ('10) 30.4 → ('20) 47.0 → ('30) 65.5%
  - '07년부터 역모기지제도 도입·확대
- (고용보장)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는 사회
  - 정년연장 및 정년제 폐지 추진
- (건강보장) 치매·중풍 등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사회
  -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05) 11 → ('10) 35 → ('20) 70 → ('30) 100%
- (주거보장) 노인에게 필요한 안전한 주거공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
  - 공공임대주택 비율 : ('05) 5.1 → ('10) 10.1 → ('20) 16 → ('30) 16%
- (사회생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문화생활 및 사회참여가 활발한 사회

## 장애인 : 삶의 질이 향상되고 완전한 사회일원으로 통합

- (소득보장)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분담하는 사회
- (고용보장)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적극적 사회참여가 가능한 사회
  - 장애인 실고용률 : ('04) 1.3 → ('10) 1.7 → ('20) 2.5 → ('30) 3.0%
  - 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상용근로자 대비) : ('05) 44.5 → ('10) 50 → ('20) 75 → ('30) 90%
- (건강보장)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로 자립기회가 확대되는 사회
  - 국공립 장애인 재활병원수 : ('05) 1 → ('10) 7 → ('20) 16 → ('30) 32개소
- (이동권 보장) 이동과 정보이용에 있어 차별과 불편이 없는 사회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05) 72.7 → ('10) 82 → ('20) 95 → ('30) 100%
  -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 ('05) 36 → ('10) 50 → ('20) 95 → ('30) 100%



## 저소득층 : 최소한의 기초생활과 건강이 보장

- (소득보장)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사회
  - 생계급여 대상자수 : ('05) 151 → ('10) 167 → ('20) 175 → ('30) 173만명
- (건강보장) 의료급여 등으로 기본적인 건강수준이 보장되는 사회
- (자활보장) 빈곤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재기를 돕는 사회
  - '07년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 (주거보장) 최소한의 주거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00) 23 → ('10) 18 → ('20) 9 → ('30) 0%
- (사회통합) 어떤 분야에서도 가난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 농어업인 :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

- (생활환경) 도로·주택·상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이 구축된 농어촌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05) 40 → ('10) 64 → ('20) 76 → ('30) 80%
- (복지환경) 교육·문화·복지 확충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 (소득보장)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어업
  - 쌀 전업농 쌀생산비중 : ('05) 30 → ('10) 41 → ('20) 60 → ('30) 79%
  - 수산자원량 : ('05) 790 → ('10) 880 → ('20) 1,000 → ('30) 1,000만톤

### (3) 정책고객별 · 연령별 미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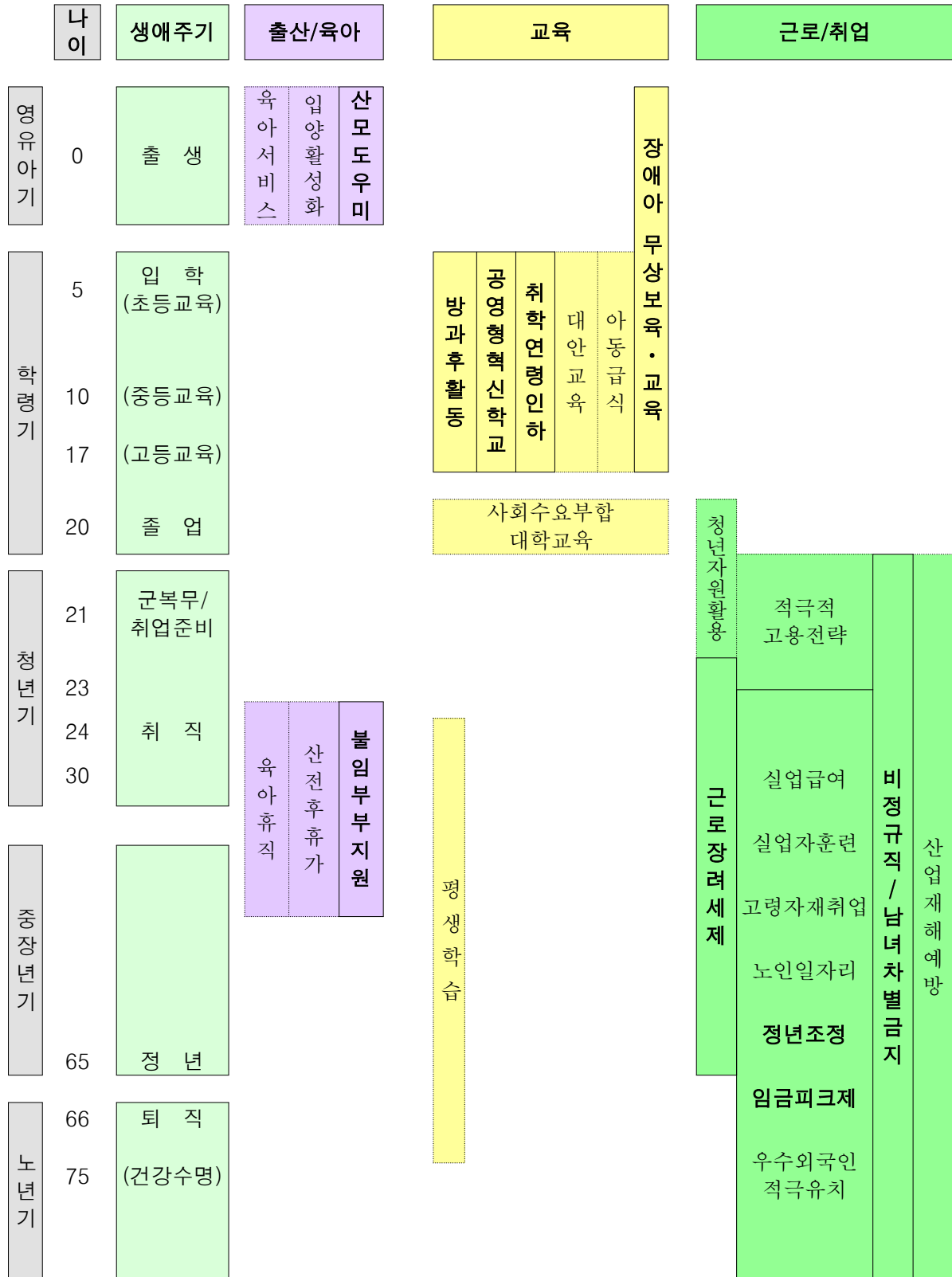
\* 숫자는 ('05) → ('10) → ('20)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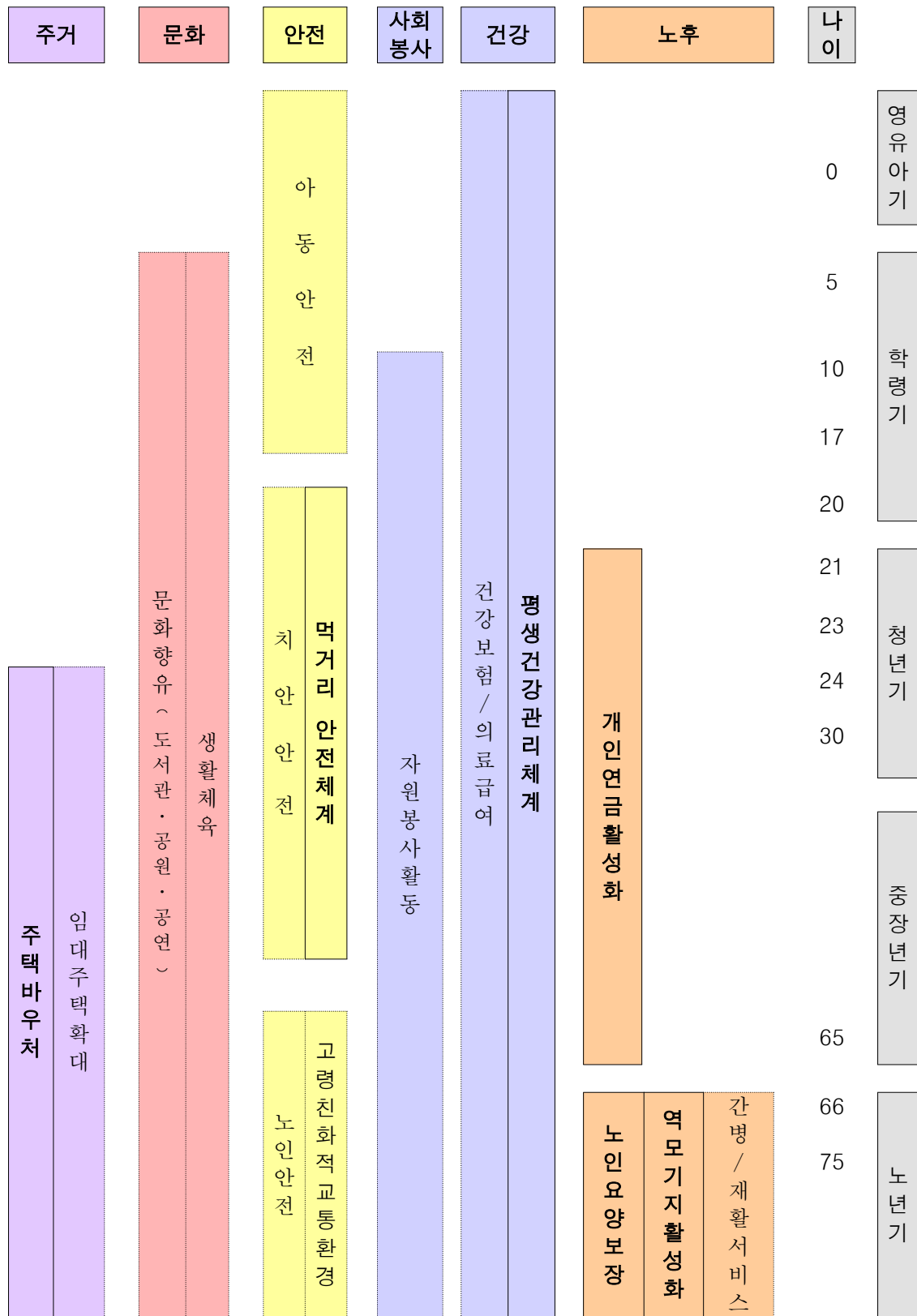
	20대	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 국민				노인, 2/3가 연금혜택 받는다 *연금수급률 17 → 30 → 47 → 66%
				치매 · 중풍노인, 사회에서 책임진다 *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11 → 35 → 70 → 100% * 장기요양병상수(인구천명당) 0.5 → 1.5 → 3 → 4개
	집 걱정,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사회로 삶의 질이 높아진다 * 건강보험 보장률 65 → 72 → 80 → 85%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4 → 10 → 15 → 20% * 삶의 질(IMD, 60개국) 41 → 30 → 20 → 10위 * 공공임대주택 비율 5.1 → 10.1 → 16 → 16%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 국민문화향유율 ('03) 62 → 70 → 90 → 95% *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 9만 → 5만 → 4.5만 → 4만			
	투명하고 상부상조하는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다 * 청렴도 지수(TI, 159개국) 40 → 25 → 10 → 5위 * 자원봉사 참여율 15 → 20 → 30 → 50% * 5대 범죄 발생대비 검거율 72.6 → 73 → 75 → 77%			
근로자	고용,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평생 배우며 일할 수 있다 * 평생학습 참여율 ('04) 22 → 30 → 40 → 50% * 고용률(15~64세) 63.7 → 67 → 70 → 72%			
	비정규직,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다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63 → 70 → 80 → 85%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 0.77 → 0.58 → 0.37 → 0.24%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여가시간은 늘어난다 * 연간실근로시간 2,366 → 2,300 → 2,166 → 2,033시간			
		실업, 재기의 기회가 확대된다 * 실업자훈련 참여자취업률 50 → 51 → 60 → 65%		
기업인	협력적 노사관계, 대·중소기업간 상생,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56 → 42 → 26 → 15일 * 기업의 사회적 책임(IMD, 60개국) 30 → 25 → 20 → 10위			
	공정한 시장경쟁, 대학연구성과,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진다 * 산학간 지식이전 정도(IMD, 60개국) 21 → 15 → 10 → 5위			
	우리 기술과 상품, 세계 어디서나 인정 받는다 * 부품개발 기술수준(일본=100) 84 → 94 → 98 → 105 * 혁신형 중소기업 1 → 3 → 6 → 9만개 * 세계 일류상품 505 → 1,000 → 1,550 → 2,000개			

	20대	30대	40~50대	60대 이상
학생 / 청소년		우리 아이들, 달라진 교육환경에서 공부한다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2 → 30 → 27 → 23명		
		방과후 아이들, 사교육비 부담없이 안심하고 맡긴다 * 방과후 활동 수혜율 32 → 67 → 72 → 75%		
		우리 아이들, 사고없이 안전하게 성장한다 * 아동안전사고율(10만명당) 8.3 → 7.3 → 6.0 → 5.0명		
	학교에서 배운 지식,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다 * 대학교육 사회부합도(IMD, 60개국) 52 → 40 → 20 → 10위			
여성 / 맞벌이 부부		일하는 여성, 남녀차별 없이 능력으로 인정 받는다 * 여성권한척도(UNDP, 80개국) 59 → 45 → 30 → 20위		
		아이, 건강하게 낳아 걱정없이 키운다 * 영아사망률(천명당) ('02) 5.3 → 4.5 → 4.0 → 3.0명 * 육아서비스 수혜율 47 → 65 → 67 → 74%		
장애인		장애인, 원하는 직업에서 자아를 실현한다 * 장애인 실고용률 ('04) 1.3 → 1.7 → 2.5 → 3.0% * 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상용근로자 대비) 44.5 → 50 → 75 → 90%		
		신속하고 편리하게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국공립 장애인 재활병원수 1 → 7 → 16 → 32개소		
		더 이상 이동과 정보이용에 불편은 없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2.7 → 82 → 95 → 100% *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36 → 50 → 95 → 100%		
저소득층		최소한의 생활, 국가가 보장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0) 23 → 18 → 9 → 0%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3,800 → 3,320 → 2,160 → 1,000명		
농어업인		농어업인, 일하기 좋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40 → 64 → 76 → 80%		
		규모화·전문화로 농어업 경쟁력이 확보된다 * 쌀전업농 쌀생산비중 30 → 41 → 60 → 79% * 수산자원량 790 → 880 → 1,000 → 1,000만톤		

#### (4) 비전 2030에 따른 미래둥이 가족의 모습

\* 굵은 글씨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도입되었거나 도입 추진 중인 지원 프로그램





## V. 비전 2030 실현

---

### 요 약

◇ (비전 실현수단) ‘함께가는 희망한국’의 비전과 전략은 제도혁신·선제적 투자와 비전실행계획을 통해 실현

#### ①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 ▶ 제도혁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고 선제적 투자도 곤란
- ▶ 성장기반 확충·기본수요 충족 분야와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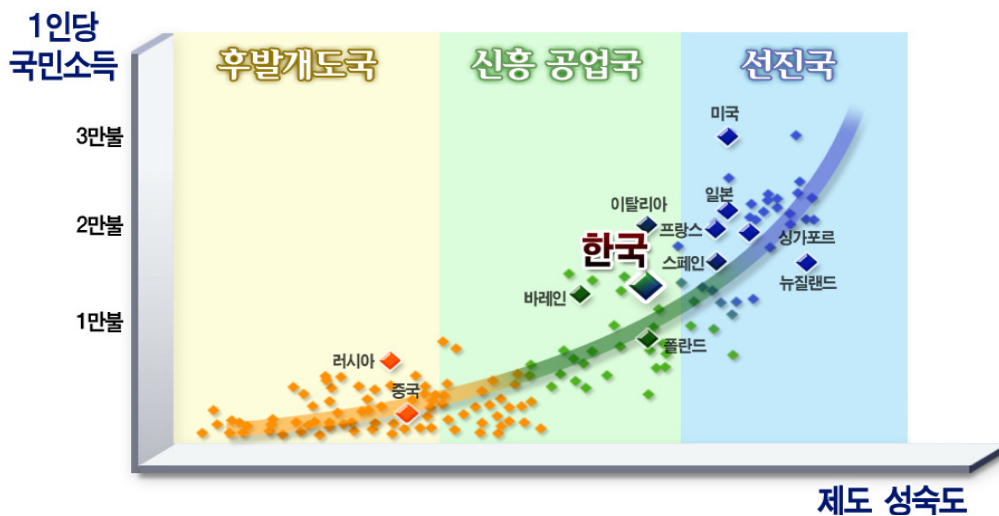
#### ② (비전실행계획)

- ▶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표, 국제비교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실행계획(Vision Action Plan) 수립·시행
- ▶ 실행계획에 제시된 과제 중 시급도·중요도를 감안, 50대 핵심과제 선정

## V-1.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 ① (제도혁신)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혁신없이 선제적 투자가 곤란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
- 현행 성장시스템으로는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곤란
    -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체제 정비
    - 생애 생산성 극대화 :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등
  - 잘못 설계된 제도 유지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재정투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 체감도는 제자리
    - 재정 위험요인 사전제거 : 국민연금·직역연금 개혁 등
    - 복지제도 효율성 제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 낮은 시민의식, 불투명한 공적제도로는 선진국 진입이 요원
    -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등

< 제도성숙도와 소득의 상관관계 >



\* IMF 자료(Economic Outlook, '03) 재구성

② (선제적 투자) 단기·소극적 재정운용에서 탈피하여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 도모

○ 활력있는 경제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성장동력 확충 분야

▪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해외 고급인력 활용 등

○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양극화 해소 및 국민통합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

▪ 방과후 활동 확대, 주거복지 확충,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 국가안전, 예상치 못한 통일대비 등의 분야

▪ 국방개혁, 통일 인프라 구축 등

\* 선제적 투자과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 선제적 투자의 전달경로

○ 초기 5년간 제도혁신 + 우선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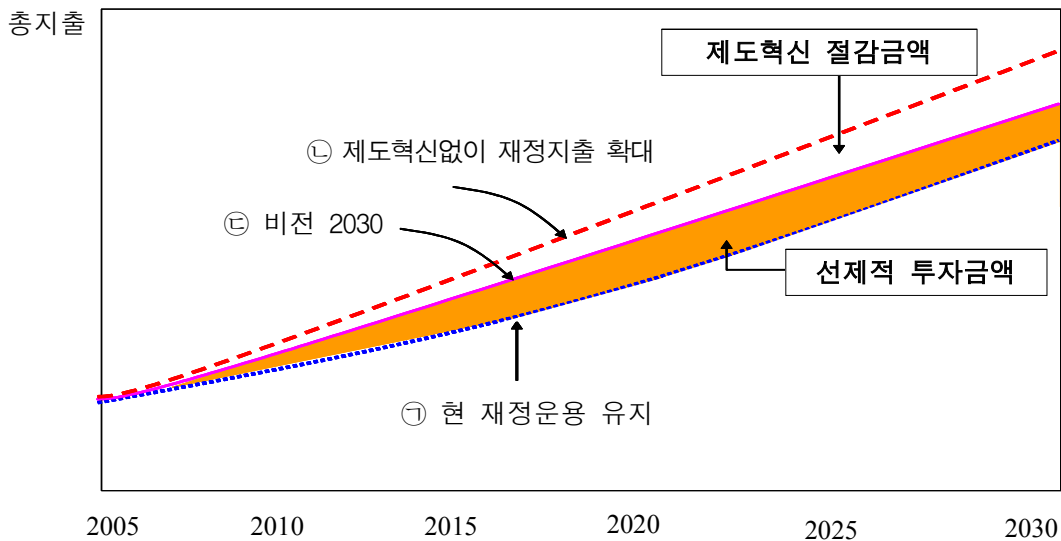
→ 성장잠재력 확충 + 시스템 효율성 제고

→ 성장 촉진 + 분배 개선

→ 재정수입 증가 + 공공서비스 확충



## < 참고 1 >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圖式



### ○ 비전 추진 여부에 따라 장래 재정지출 결정

- ㉠ : 현 재정운용 기조 유지시  
고령화·양극화 심화로 미래 지출소요가 급격히 증가
- ㉡ : 제도혁신 없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초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재정이 감당 불가능
- ㉢ :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병행하는  
비전 2030을 추진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안정

### ○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는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대안

- A 부분 : 제도혁신을 통한 재정 절감분
- B 부분 : 선제적 투자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 V-2. 비전실행계획

### (1) 작성원칙

#### ① (계획의 구성) 비전 달성을 위해 전략별로

정책목표, 실천과제, 계량적 지표, 국제비교 등을 제시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 네덜란드의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양식에 지표를 보완, 발전

#### ② (작성원칙) 종합적, 체계적, 계량적으로 접근

- ① 종합적 접근 : 5대 전략 외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여타분야(환경, 문화체육, 치안 등)도 포괄

- ② 체계적 접근 :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목표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 ③ 계량적 접근 :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모습을 선진국과 비교

#### ③ (수정·보완) 여건 변화, 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실천과제, 지표 등을 수정·보완할 계획

< 비전실행계획 예시\* >

전략	항목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표						근거/국제비교	
				지표명	'95	'00	'05	'10	'20		'30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보협	노후소득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민 연금수급</li> <li>연금 개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적연금 수급률(%)</li> </ul>	1.1	6.6	16.6	30.4	47.0	65.5	* 미국 93, 영국 91, 일본 84('03)
	사회서비스	출산·육아 부담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4세 무상보육·교육</li> <li>차등보육료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서비스 수혜율(%)</li> </ul>	20	31	47	65	67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저출산대책</li> <li>'20년: 만4세 무상보육·교육</li> <li>'25년: 유아 100% 수혜</li> </ul>
		교육양극화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층 방과후 활동 지원 확대</li> <li>방과후 활동간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과후 활동 수혜율(%)</li> </ul>	36 (96)	40	32	67	72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과후 학교 참여율(교육부 계획) 반영</li> <li>* ('05) 31 → ('10) 65 → ('20) 70%</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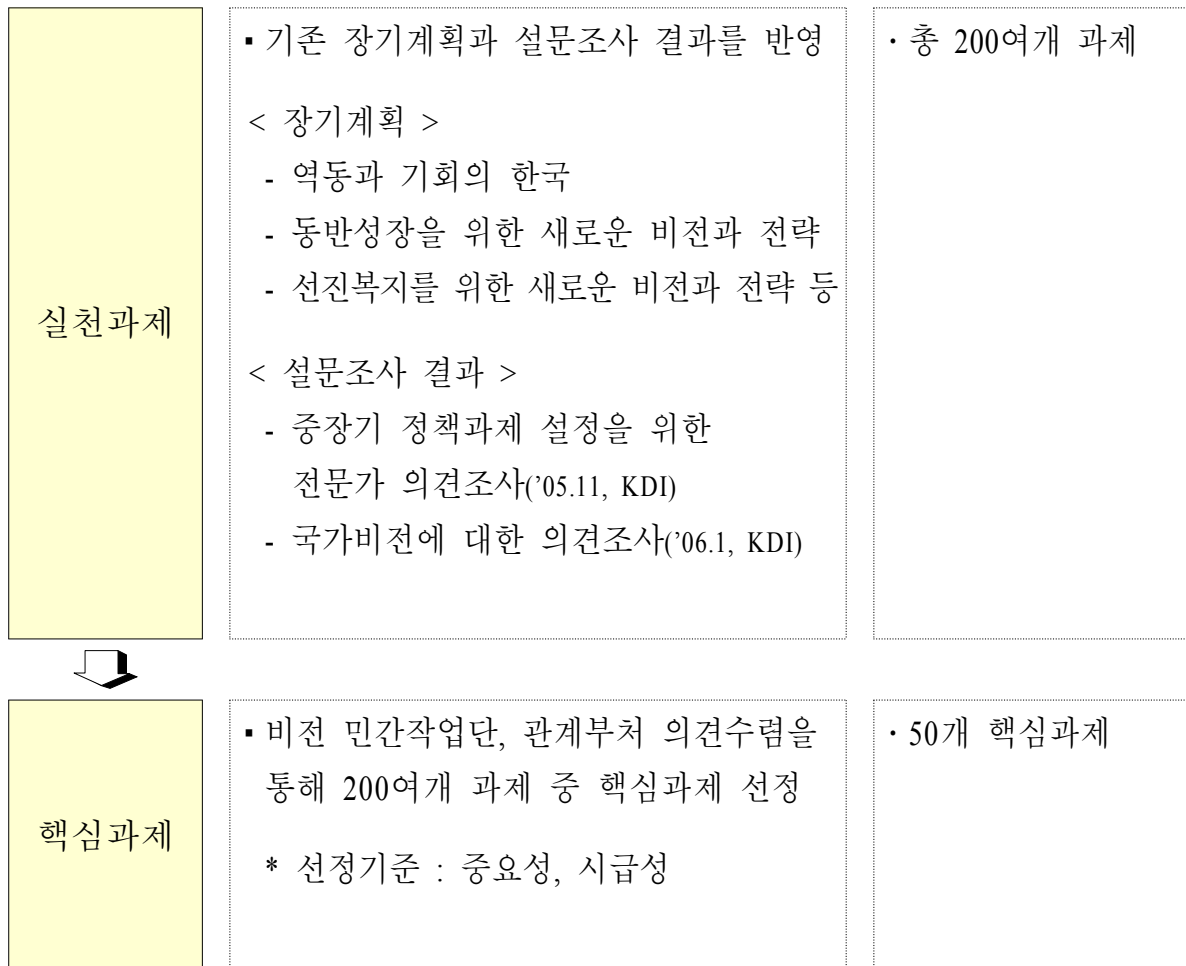
\* 전체 비전실행계획은 참고 1에 수록

## (2) 실천과제

### 1] 과제의 선정

- 기존 장기계획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대 전략별로 정책목표에 따른 실천과제 선정
  -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천과제 중 50대 핵심과제 선정

#### <과제 선정 경로>



## < 참고 2 > 50대 핵심과제

구 분	제도혁신(26개)	선제적 투자(24개)
성장동력 확충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li> <li>②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li> <li>③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li> <li>④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li> <li>⑥ R&amp;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li> <li>⑦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li> <li>⑧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li> <li>⑨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li> </ul>
인적자원 고도화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⑩ 대학평가제도 혁신</li> <li>⑪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li> <li>⑫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li> <li>⑬ 학제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⑭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li> <li>⑮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li> <li>⑯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li> <li>⑰ 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li> <li>⑱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li> </ul>
사회복지 선진화 (1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⑲ 국민·지역연금 개혁</li> <li>⑳ 건강보험 개혁</li> <li>㉑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li> <li>㉒ 의료급여제도 개편</li> <li>㉓ 비정규직 대책</li> <li>㉔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li> <li>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li> <li>㉖ 부동산 가격 안정화</li> <li>㉗ 영세자영업자 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㉘ 방과후 활동 확대</li> <li>㉙ 보육 서비스 확대</li> <li>㉚ 식품안전 보장 강화</li> <li>㉛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li> <li>㉜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li> <li>㉝ 주거복지 확충</li> <li>㉞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li> <li>㉟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보건 강화</li> <li>㊱ 농어촌 활력증진</li> </ul>
사회적 자본 확충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㊲ 갈등관리시스템 구축</li> <li>㊳ 사법제도 개혁</li> <li>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li> <li>㊵ 지방행정체제 개편</li> <li>㊶ 지역공동체 등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㊷ 국방개혁</li> <li>㊸ 전자정부 구현</li> <li>㊹ 정부인력의 서비스 위주 재배치</li> </ul>
능동적 세계화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㊺ FTA 체결 확대</li> <li>㊻ 경제자유구역 활성화</li> <li>㊼ 외국인력정책 마련</li> <li>㊽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㊾ ODA 규모 확대</li> <li>㊿ 통일 인프라 구축</li> </ul>

\* 일부과제는 제도혁신 과제群과 선제적 투자 과제群에 모두 해당  
이 경우 동 과제는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群에 분류

## ② 50대 핵심과제 주요내용

### 성장동력 확충

- ◇ 성장 선도부문과 성장 지체부문의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 혁신주도형 산업구조 실현
  - 선도 대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선진 외국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시장 경쟁환경 조성
  - 부품소재 기업을 육성, 핵심자본재 수출국으로의 입지 확보
  - 동북아의 서비스업 강국으로 도약

### ▶ 제도혁신

- 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영세 자영업 중심의 개인 서비스업 위주  
→ 교육, 의료, 관광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
- ②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 융자 등 금융지원 중심의 지원  
→ 경영컨설팅, 인력양성 등 콘텐츠 중심 지원으로 전환
- ③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
  -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및 산업 인프라를 구축
-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 ▶ 선제적 투자

###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보육, 간병, 방과후 활동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적극 창출로 선진국 수준의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설치('06. 7)

### ⑥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성과평가제도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정부·민간간 역할분담 원칙 정립 등 효율성 제고노력 강화

### ⑦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

-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

### ⑧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

-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투자로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고 조기 산업화의 기반을 확충

### ⑨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

- 핵심기술 확보업체 지원, 선진기업 유치 지원 등을 통해 산업연관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적극 육성

## 인적자원 고도화

◇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육성

- 유망 선도분야 및 기초 학문분야 고급인적자원 육성 기반 마련
- 대학구조조정 등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시스템 효율화 추진
- 교육복지 확충 등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양극화 해소
- 여성 등 잠재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

### ▶ 제도혁신

#### ⑩ 대학평가제도 혁신

- 독립적인 범부처 차원의 통합 평가기관 설립,  
평가정보 통합 DB 구축 등 평가시스템 전면 개편

#### ⑪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

- 대학간 통·폐합,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가능한 대학부터 특수 법인화 전환을 유도

\* 대학구조개혁 방안('04.12)마련, 「국립대학운영체제관한특별법」 추진

#### ⑫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 중고령자 인력활용을 확대하고  
능력이 있는 한 평생 일할 수 있는 안정적 근로조건 마련

#### ⑬ 학제 개편

- 학교급별 수업연한 조정(5-3-4제, 6-4-2제 등) 및  
가을 학기제 도입

## ▶ 선제적 투자

### ⑭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 고용유발형 성장 및 사회통합을 위해 여성, 중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용의 질 개선

### ⑮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

- 대학별 강점 분야 중심의 구조개혁,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 ⑯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 청년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겨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생애 근로기간을 확대
  - \* 취학·입대연령 하향조정, 학제개편, 언제든지 대학진학이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

### ⑰ 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

- 교육·복지투자가 많은 지자체에 교부세·교육교부금 배분 등 인센티브 부여

### ⑱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 해외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 고급인력 유치에 위한 제도적·환경적 기반 마련



◇ 기본수요 충족과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 구현

- 공공부조는 기초수요별 급여로 세분화하고 근로유인을 강화
-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사회연대강화와 일자리 창출
- 공적연금·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개별 복지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세대간 형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

▶ 제도혁신

①9 국민·지역연금 개혁

- 적정부담·적정급여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지역연금은 특수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개혁추진

②0 건강보험 개혁

- 포괄수가제, 선별적 약제등록 방식,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 등

②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 고객 중심의 One-stop 통합서비스 전달체제로 혁신

②2 의료급여제도 개편

-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 및 본인부담 등을 통해 의료급여 지출 효율화

②③ 비정규직 대책

- 비정규직 관련 입법 마무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교육훈련 강화

\* 비정규직 임금('05.8, 통계청) : 정규직 대비 62.6% 수준

②④ 사회보험 적용 · 징수체계 효율화

- 4대 사회보험의 부과기준 · 징수방법 일원화 및 적용 · 징수업무 통합을 통해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②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 통합급여방식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분리 지원

②⑥ 부동산 가격 안정화

- 기존 「8·31」 대책을 견지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②⑦ 영세자영업자 대책

- 지역 · 업종별 상권정보 제공, 컨설팅-교육-자금의 연계지원 등 직접 지원보다는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집중

▶ 선제적 투자

②⑧ 방과후 활동 확대

- 방과후 학교 등 활성화로 교육양극화 · 사교육비 문제 완화

②⑨ 보육 서비스 확대

-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육아부담 완화

③⑩ 식품안전 보장 강화

-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안전기준 설정 및 위해성 평가 강화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

③⑪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 EITC 도입으로 근로 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유도

\* '06년 입법, '07년 도입('08년부터 급여 지급)

③⑫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장애수당 인상, 특수교육지원 확대,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 종합적 지원대책 강구

③⑬ 주거복지 확충

-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③⑭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치매, 중풍 노인('30년 전체노인의 12.1% 추정)에 대한 개인, 지자체, 국가 공동책임의 수발보험제도를 '08년부터 도입

③⑮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보건 강화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제의 단계적 시행, 수생태계와 국민건강 중심의 물관리 및 환경보건증진 추진

③⑯ 농어촌 활력증진

- 농어업 경쟁력 향상, 소득 안전망 구축, 복지·교육지원 강화 등을 통해 살기좋은 농어촌 구현

## 사회적 자본 확충

- ◇ 참여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는 성숙한 사회건설
  -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갈등조정체제 확립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정부인력의 서비스 위주 배치 등 공공제도 선진화를 통한 신뢰 제고
  -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을 통한 공공 복지체제 보완

### ▶ 제도혁신

#### ③7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합리적 갈등조정체제(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전문가 양성 등)로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응집력 제고

#### ③8 사법제도 개혁

- 사법서비스 체계를 개편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제고
  - \* 국선변호 확대, 공판중심주의,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참여제도 도입 등
  - \*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 조속 통과 추진('06. 8, 19건)

#### ③9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운영시스템 혁신
  - \* 범위설정 및 기관 재분류, 외부감독·평가시스템, 내부 견제·균형장치 보강, 공정한 임원인사시스템 구축

④⑩ 지방행정체제 개편

- 자치계층 축소여부, 광역·기초간 기능분리, 시군통합 방안 등 검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06. 7. 1)

④⑪ 지역공동체 등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

- 가족·시민·지역 등 공동체의 기능회복을 통해  
공적 복지지원 체제를 보완

▶ 선제적 투자

④⑫ 국방개혁

- 병력위주 양적 군구조 → 정보 중심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

④⑬ 전자정부 구현

- 공급자·기관 중심 서비스 → 수요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 '07년까지 전자정부 로드맵 차질없이 추진

④⑭ 정부인력의 서비스 위주 재배치

-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對국민서비스 분야로 재배치

## 능동적 세계화

- ◇ 사회·문화의 폭넓은 개방으로 돈·사람·정보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열린사회 조성
  - 능동적 FTA, FDI 전략을 통한 개방형 통상국가 실현
  - 남북 공동번영, 동북아 경제통합 추진

### ▶ 제도혁신

#### ④5 FTA 체결 확대

- FTA 체결 확대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 등 선진통상국가 기반 마련

#### ④6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여 글로벌 일류기업의 비즈니스·물류거점으로 육성

#### ④7 외국인력정책 마련

- 통제 중심의 외국인력 관리 → 각종 차별 해소·권익 증진 도모

#### ④8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

- 고부가가치형 금융·물류 허브 구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 선제적 투자

### ④9 ODA 규모 확대

-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ODA 증액을 통한 국제 신인도 향상 및 국제사회 참여도 제고

\* ODA/GNI : ('05) 0.09 → ('15) 0.25%

### ⑤0 통일 인프라 구축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단계별 지원 다양화

\* 지원규모/GDP : ('05) 0.1 → ('30) 1.0%

## VI. 장기 재정전망

### 요 약

- ◇ (재정투자방향) 동반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중점을 두되 제도혁신을 통해 지출증가를 최소화
- ◇ (재정전망) 비전 2030추진시 추가 재원소요는 향후 25년간 총 GDP의 2% 수준
- ◇ 재원대책에 대한 국민적 논의 필요
  - ▶ 2010년까지는 증세없이 추진
  - ▶ 2011년 이후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국민적 논의 필요
    - 국가채무로 충당
    - 조세로 충당
    - 국가채무와 조세로 나누어 충당

### VI-1. 재정전망의 전제

- ① (잠재성장률) 2010년까지 4.9%, 2010년대에는 4.3%, 2020년대에는 2.8%, '06~'30년간 기간에는 3.8%로 전망

	'06~'10	'11~'20	'21~'30	'06~'30
▪ 잠재성장률(%)	4.9	4.3	2.8	3.8

\* 비전 2030 장기재정전망팀('06.5)

- ② (인구)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05.1) 결과를 반영
- 생산가능인구는 '16년, 총인구는 '20년을 정점으로 감소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18년에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 '26년 초고령사회(20%)로 진입 전망



## VI-2. 비전 2030 투자방향

### 기본방향

- ◇ 동반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중점
  - ▶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R&D, 고등교육 등에 대한 투자 강화
  -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지원확대
  - \* 복지지출(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20년경 '01년의 美·日수준,  
'30년경 '01년의 OECD 평균수준 도달 목표
- ◇ 투자확대에 선행하여 제도를 혁신, 재정지출 소요를 최소화
  - ▶ 국민·직역연금 개혁,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등
- ◇ 시장과의 역할 분담이 가능한 경제 분야는 민간 역할 강화
  - ▶ SOC 투자,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 1] 사회복지 선진화

-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 '07년), 노인수발보험제도('08년), 주택바우처 등 도입
  - \* 수발급여대상(노인인구 대비) : ('05) 1.4 → ('10) 4.1 → ('20) 8.9 → ('30) 12.1%
- (사회서비스 확충) 보육지원 강화 및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간병·재활서비스 등 확대
  - \*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 ('05) 62 → ('10) 42 → ('20) 38 → ('30) 37%
- (사회보험 개혁) 4대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및 지출효율화 추진
  - \* 건강보험 보장률 : ('05) 65 → ('10) 72 → ('20) 80 → ('30) 85%

## ② 성장기반 강화

- (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협력 촉진 등 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원
  - \* 고등교육 재정 투자(GDP 대비) : ('06) 0.41 → ('20) 0.68 → ('30) 1.00%
- (성장잠재력 확충) R&D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신서비스 산업 육성
- (시장역할 강화)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한 금융지원, 수익시설 등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속도 조절
  - \* 경제분야 투자(GDP대비) : ('06) 5.6 → ('10) 4.4 → ('15이후) 4.0%

## ③ 사회적 자본 확충 및 능동적 세계화

- (국방개혁) 점진적인 병력감축, 복무여건 개선 및 전력투자 강화 등 국방개혁에 필요한 소요를 뒷받침
- (통일 인프라) 남북협력 강화,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막대한 통일 재정부담 완화
  - \* 통일분야 지출(GDP대비) : ('05) 0.1 → ('30) 1.0%
- (국제사회 참여) 경제규모에 상응한 ODA 증액을 통한 국제 신인도 향상 및 국제사회 참여도 제고
  - \* ODA/GNI : ('05) 0.09 → ('15) 0.25%

## ④ 제도혁신 및 지출구조조정 추진

- (제도혁신) 연금 개혁, 건강보험 효율화 등 제도혁신 및 경제분야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지출소요 최소화

< 참고 > 비전 2030 주요 투자계획

		현재도 유지	비전 2030
①사회 복지 선진화	공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li> <li>· 국민연금 60%</li> <li>· 직역연금 7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연금 개혁</li> <li>·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li> <li>· 보험료를 상향 조정</li> </ul>
	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성 현행 유지(6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성 확대(85%)</li> </ul>
	기초생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급여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급여 방식</li> </ul>
	근로장려 세제(EI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가구의 21.2%까지 단계적 확대</li> </ul>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10년 수준(42%)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37%로 축소</li> </ul>
	사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수준 유지 (0.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재활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확대</li> </ul>
	노인수발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인구 12.1%까지 적용확대</li> </ul>
② 성장 기반 강화	R&D *정부+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진적 확대</li> <li>(’04) GDP대비 2.9 → (’30)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고수준의 R&amp;D 기반 확보</li> <li>(’04) GDP대비 2.9 → (’30) 5.3%</li> </ul>
	초중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인구 감소에 따른 투자규모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인구 감소효과 + 교육복지·환경개선 투자 확대(’30년 GDP대비 0.37%)</li> </ul>
	고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투자수준 유지</li> <li>(’05) GDP대비 0.4 → (’30) 0.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별 특성화, 산학협력 촉진 등 투자확대</li> <li>(’05) GDP대비 0.4 → (’30) 1.0%</li> </ul>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투자수준 유지)</li> <li>(’05) GDP대비 0.04 → (’30) 0.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li> <li>(’05) GDP대비 0.04→(’30) 0.10%</li> </ul>
③세계화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 수준 유지</li> <li>(’05) GDP대비 0.15 → (’30) 0.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 대폭 확대</li> <li>(’05) GDP대비 0.15 → (’30) 0.29%</li> </ul>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폭 확대</li> <li>(’05) GDP대비 0.1 → (’30) 0.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인프라 충실화</li> <li>(’05) GDP대비 0.1 → (’30) 1.0%</li> </ul>

## VI-3. 재정전망

### ① 비전 2030 추진시 추가 재원소요

- 총 GDP의 2% 수준

	<u>'06~'10년</u>	<u>'11~'30년</u>
· GDP 대비 연평균 추가소요	0.1%	2.1%

### ② 재원대책

#### ① 2010년까지는 증세없이 추진

-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축소 및 과세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요재원 충당

#### ② 2011년 이후에는 추가재원 조달방안에 대하여 국민적 논의 필요

- 국가채무로 조달하는 방안

- 국가채무의 누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약화
- 현세대 부담없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

※ 외국사례 : 일본은 장기불황 탈출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재원을 주로 국채로 조달

- 조세로 조달하는 방안

- 세율인상 또는 새로운 세목 신설 필요
- 항구적 재원조치로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가능

※ 외국사례 : 뉴질랜드는 국가채무비율을 30%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금위주로 재원조달

- 국채와 조세로 나누어 충당하는 방안

- 세율인상폭은 다소 줄어들이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나 미래세대의 부담은 증가

※ 외국사례 : 독일은 통일 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  
통일 후 소요재원을 국가채무와 조세로 조달

### ③ 비전 2030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 동반성장 실패로 저성장 및 양극화가 확대

- R&D, 고등교육 등에 대한 투자확대가 곤란하여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하락

(GDP 대비)

	R&D (정부+민간)		고등교육	
· 비전 추진시	(’05) 2.9	→ (’30) 5.3%	(’05) 0.4	→ (’30) 1.0%
· 비전 未추진시	(’05) 2.9	→ (’30) 4.0%	(’05) 0.4	→ (’30) 0.4%

- 복지지출 규모가 중진국 수준에 불과하여 사회통합기반 약화 우려

	2020년	2030년
· 비전 추진시	現 미국·일본 수준	現 OECD 평균 수준
· 비전 未추진시	現 중진국 수준	現 중진국 수준

#### < 비전 未추진시 복지의 모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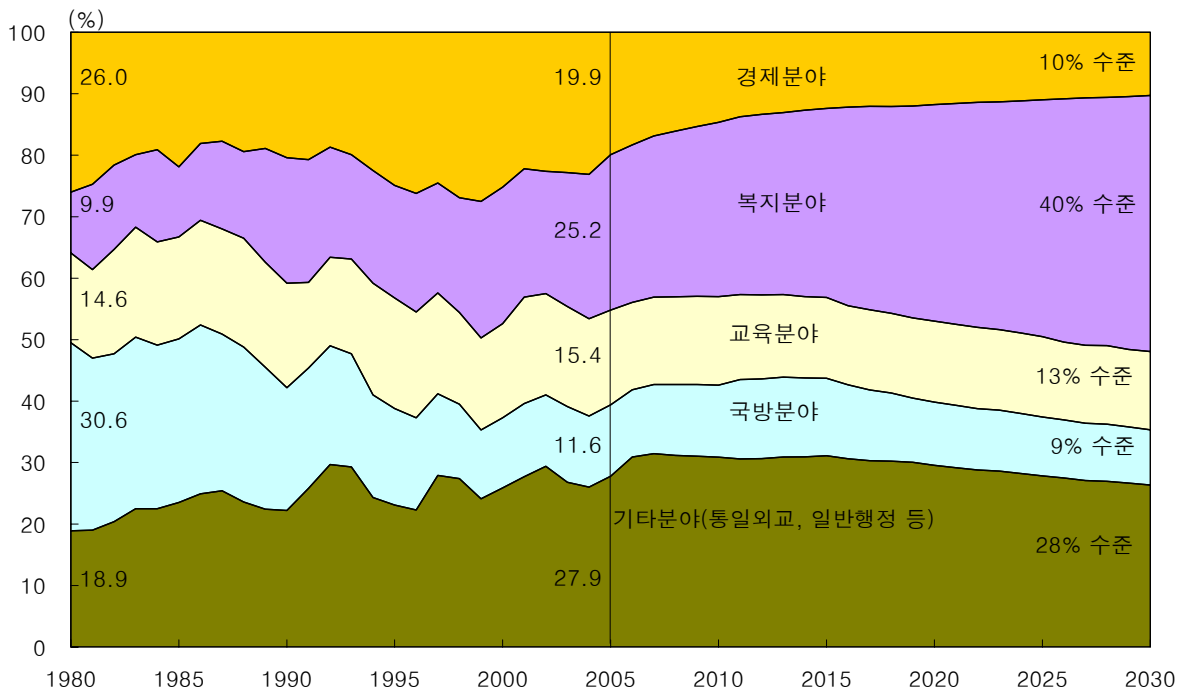
- **(빈곤의 대물림)** 패자부활의 기회가 사라져 가난이 대물림 될 수 있는 사회
  - \* 소득 상위 20%가구와 하위 20%간 사교육비 지출격차 6.9배(통계청, ’05)
  - \* 부모의 학력·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진학률 증가(KDI, ’05.12)
- **(노후 불안)** 치매·중풍 등 건강 문제, 연금고갈로 인한 소득 걱정 등으로 불안하고 고단한 노후 생활 걱정
  - \* 수발필요노인 : (’05) 55 → (’10) 68 → (’20) 98 → (’30) 144만명
  - \* 국민연금의 경우 ’36년 적자 전환, ’47년 기금 고갈
- **(출산 기피)** 과도한 육아부담,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아 경제의 활력 저하
  - \* 초저출산세대(’01년생~)가 가임기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더 이상 저출산 추세를 돌이키기 곤란
- **(일자리 감소)**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고용 불안심리가 확산되나 재취업의 기회는 매우 제한
  - \* 괜찮은 일자리(대기업·공기업·금융회사 취업자) 수 : (’97) 158 → (’04) 131만명

#### 4 2030 재정지출 구조(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

○ 전체재정 대비 복지재정 지출은 '30년에 40% 수준

	한 국		호주	스웨덴	미국	이태리	OECD평균
	('05)	('30)	('04)	('03)	('04)	('03)	
▪ 복지재정/전체재정 (%)	25.2	40% 수준	52.0	54.1	57.2	49.3	54.7
▪ 경제재정/전체재정 (%)	19.9	10% 수준	6.4	9.9	6.5	3.9	9.1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05)



## VI-4. 2030년 한국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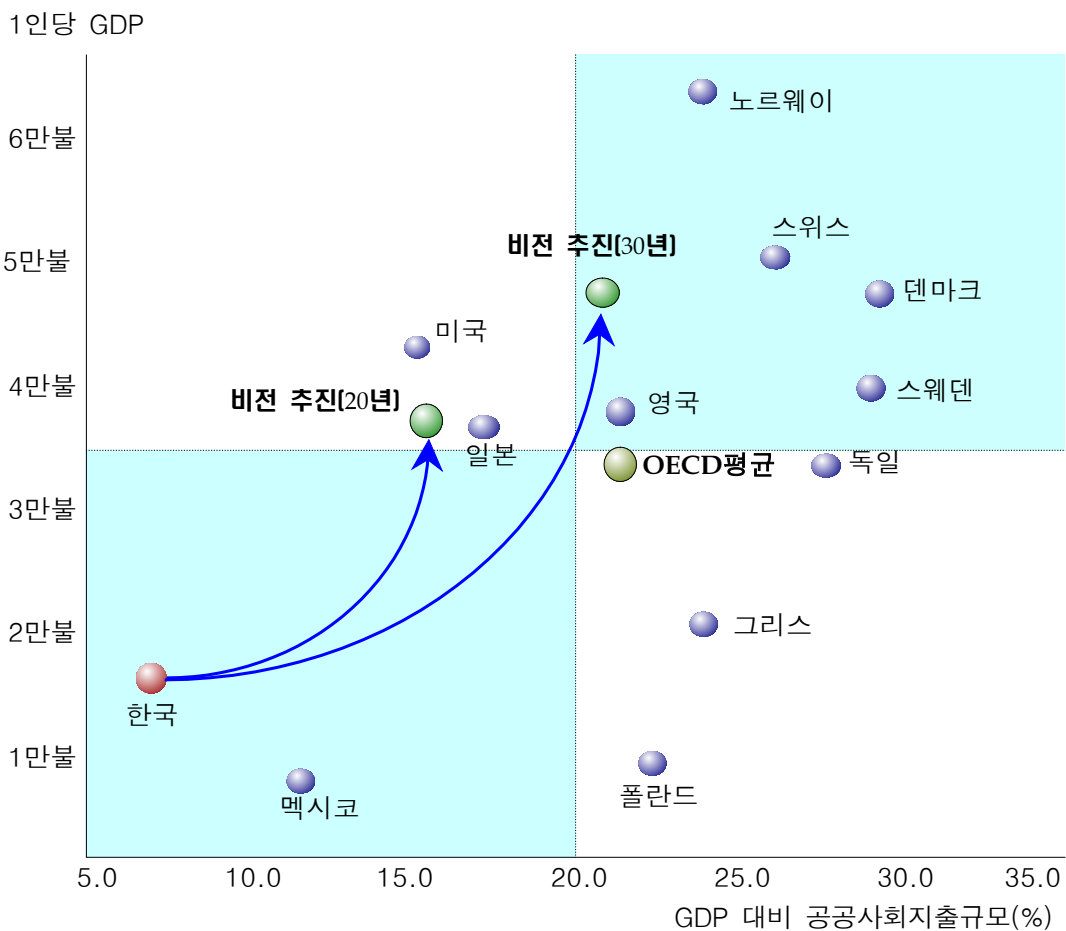
### ① 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동반성장

#### ○ (1인당 GDP)

- '20년 37천불('05년 불변가격),  
'30년 49천불로 '05년 스위스 수준 도달

#### ○ (복지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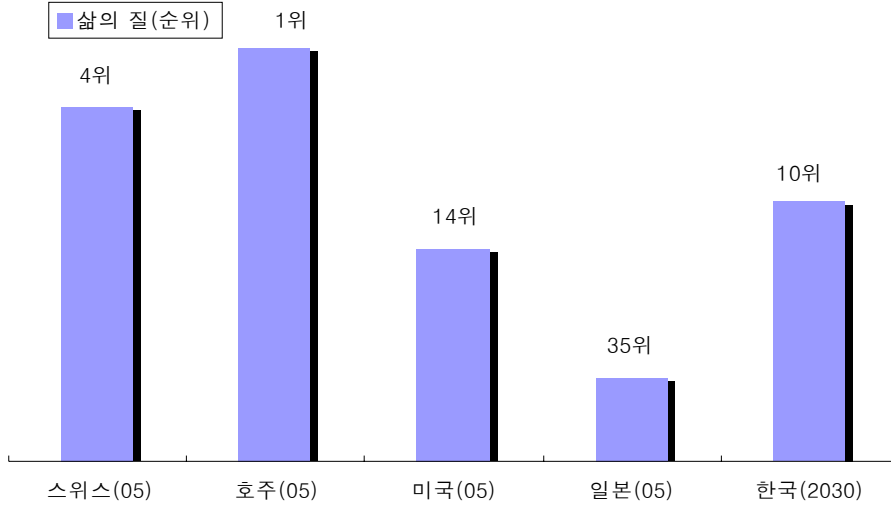
- '06년~'30년간 연평균 9.8%씩 증가하여  
'19년 15%('01년 미국 수준), '24년 17%('01년 일본 수준) 도달
- '30년에 21%로 '01년 OECD 평균(21.2%)에 이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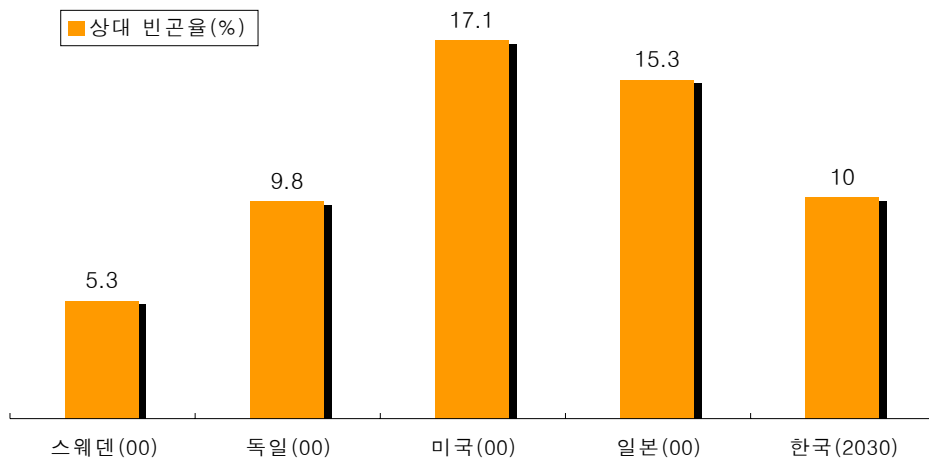
\* 1인당 GDP('05년 기준 ; IMF, World Economic Outlook('06.4))  
공공사회지출규모('01년 기준 ; OECD, Social Indicators('05))

## ② 주요 복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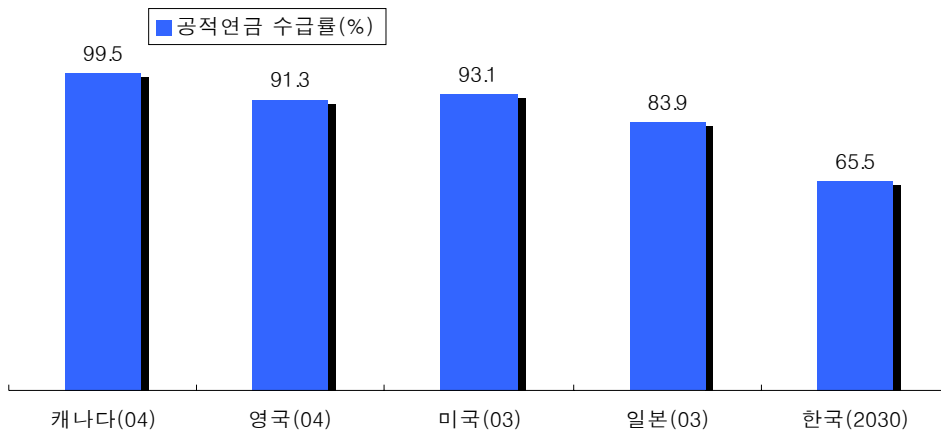
○ 삶의 질 : 살기 좋은 나라 세계 10위 진입



○ 상대 빈곤율 : OECD 평균('00년 10.2%) 수준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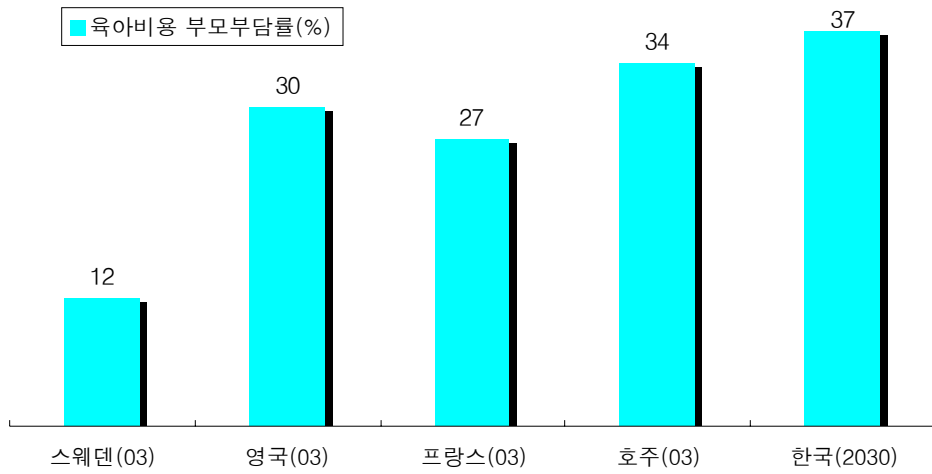


○ 공적연금 지급률 : 제도성숙에 따라 65.5%까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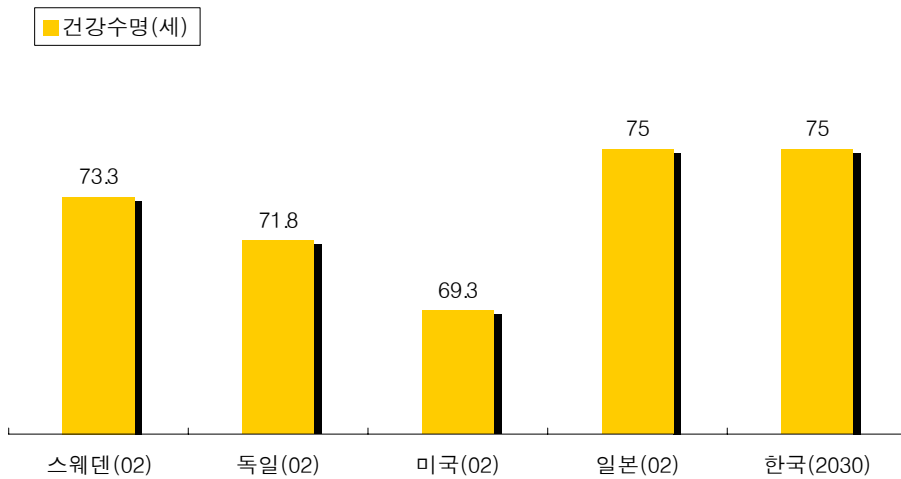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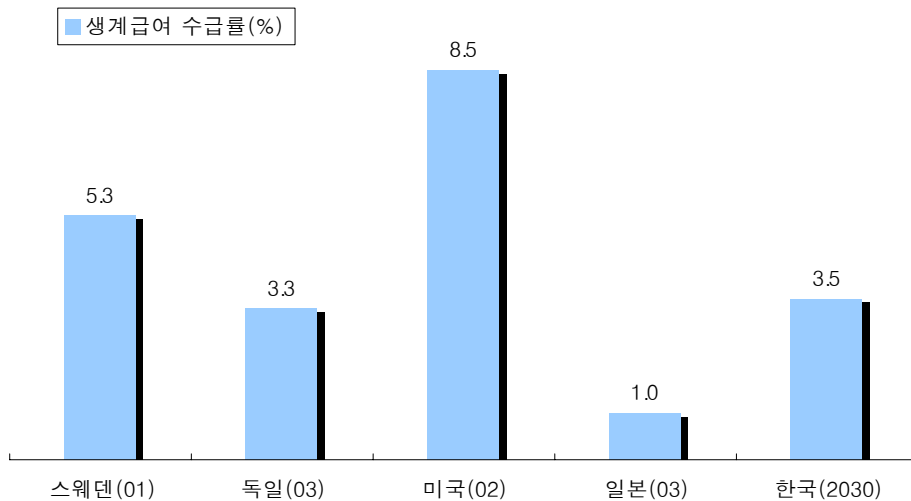
○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 육아지원 확대를 통해 30% 대로 완화



○ 건강수명 : 보건의료 선진화를 통해 세계최고수준까지 연장



○ 생계급여 지급률 : 3%대에서 관리하고 사회서비스 등으로 보완





참고자료 1

# 비전 실행 계획



전략	항목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 표 명	'95	'00	'05	'10	'20		'30
성장동력 확충	경쟁력	국가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혁신</li> <li>기업규제 완화</li> </ul>	국가경쟁력(순위)	26 (48 개국)	29 (47 개국)	29 (60 개국)	20	15	10	* 미국 1위, 싱가포르 3위, 스위스 8위, 일본 21위('05,IMD)
			R&D 투자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amp;D 투자 지속 확충</li> <li>국가기술혁신 체계 확립 (성과평가 등 관리체제 개선)</li> <li>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li> <li>지적재산권 보호 강화</li> </ul>	GDP 대비 R&D투자(%) *정부+민간	2.4	2.4	2.9 (04)	3.0	4.3	5.3
	원천기술 특허 (건/연구원 천명당)	-		-	45	100	200	300	* 미국 13.7, 일본 20.4, 독일 27.4, 스위스 35.8, OECD 평균 14.2('02)		
	연구원수 (명/경제활동인구 천명당)	4.8		4.9	6.7 (04)	7.2	8.0	10.0	* 미국 9.0('99), 일본 10.1('03) 핀란드 15.9('03), 독일 6.7('03)		
	국제특허출원 건수(백건)	5		16	47	65	100	150	* 미국 451, 일본 251, 독일 158 프랑스 55('03)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li> <li>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li> <li>에너지이용 효율화</li> </ul>		에너지원단위(%) *에너지소비 /총부가가치	0.36	0.38	0.36	0.33	0.25	0.20	* 미국 0.22, 일본 0.11, 프랑스 0.20, OECD평균 0.20('03)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내실화</li> </ul>	차세대산업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	5	7	11	15	* 미국 32.8(항공), 일본 23.1(광학), 독일 21.7(자동차). ('03)	
산업	서비스업의 신성장 동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개선 및 개방 확대</li> <li>산업적 접근을 통한 교육·의료 서비스 발전</li> <li>서비스업의 지식기반 확충</li> </ul>	GDP대비 서비스업 생산(%)	51.8	54.4	56.3	58.7	62.3	6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연구원 전망 ('30년 : 일본수준으로 확대)</li> <li>* 일본 68.0, 프랑스 75.9, 미국 76.5('03)</li> </ul>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미국=100)	-	-	45	55	70	90			

전략	항목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 표 명	'95	'00	'05	'10	'20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생산구조 중심권 진입	(주력제조업) ▪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 ▪ 서비스/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	▪ 세계일류상품수(개) *세계점유율 5위 (10%내외)이내 시장규모 5천만불 이상 수출규모 500만불이상 상품	-	120	505	1,000	1,550	2,000	
			▪ 부품개발 기술수준 (일본=100)	-	-	84.3	93.9	98.0	105.0	
		(신기술융합산업 및 첨단제조업) ▪ 응용기술 집중육성 ▪ IT기반 융합기술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신기술기반산업 트렌드 주도	▪ IT 기술수준 (세계수준=100)	-	-	83.9	89.2	100.0	100.0	▪ '10년 : 동반성장 비전과 전략 (국민경제자문회의) 근거 ▪ '20~'30년 : 세계 수준 달성 목표
			▪ BT 기술수준 (세계수준=100)	-	-	61.9	75.7	90.0	100.0	
			▪ NT 기술수준 (세계수준=100)	-	-	58.1	74.5	85.0	100.0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백명당 명)	-	16	24	25	28	30	
		▪ 설비투자 대비 IT투자(%)	20	39	39	40	45	50		
	문화관광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문화산업) ▪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 문화산업 매출액 규모(조원)	-	-	51	96	500	1,950	▪ 연평균 성장률 18%유지
		▪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 문화산업 수출규모(억불)	-	-	10	60	300	2,700	
		(관광산업) ▪ 관광자원·관광지 개발 ▪ 관광시설 현대화	▪ 외래관광객수 (만명)	375	532	600	1,000	1,400	2,000	
기업	중소· 벤처 기업 육성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벤처기업 육성	▪ 혁신형 중소기업 (천개)	-	-	11	30	60	90	▪ 전체 중소기업(300만개)중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 : '10년 1%, '20년 2%, '30년 3%수준
			▪ 중산기금 정책자금 중 창업 및 기술 개발자금 비중(%)	-	11	14	23	30	34	

전략	항목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 표 명	'95	'00	'05	'10	'20		'30
성장동력	기업	친기업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mp;A 활성화 및 창업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li> <li>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환경(순위) *세계은행, '05</li> </ul>	-	-	27	20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질랜드 1위, 싱가포르 2위, 미국 3위, 캐나다 4위, 노르웨이 5위, 일본 10위</li> <li>* 홍콩 1위, 싱가포르 2위, 스위스 16위, 일본 21위, 미국 23위(IMD, '05)</li> <li>* 선진국 평균 20.5, EU 31.7, 미국 12.6('0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규제(순위)</li> </ul>	-	-	43	30	2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DP대비 FDI Stock(%)</li> </ul>	2	14	8	10	15	20		
	지역혁신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 클러스터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R&amp;D비중(%) *수도권, 대전 제외</li> </ul>	-	-	25	32	40	45		
확충	지역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균형발전 실천</li> <li>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li> <li>공공기관지방이전</li> <li>혁신도시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인구집중도(%)</li> </ul>	44	46	48	49	48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인구집중 상한선 관리 : 50% 이하</li> <li>'30년에 '9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상수도 보급율(%) *농어촌 급수지역 인구/ 농어촌 인구</li> </ul>	16	28	40	64	76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여건을 고려, '30년 80%보급 달성</li> </ul>	
인적자원 고도화	교육	전 국민 학습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규모학교 구조조정</li> <li>학교유형 및 운영 방식의 다양화</li> <li>취학연령 하향 조정(만 6→5세)</li> <li>학제 개편</li> <li>소외계층 교육복지 강화</li> <li>대학생 학자금 지원·보증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명)</li> </ul>	36	36	32	30	2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유지</li> <li>'20년 : 통계청 인구 추계 반영</li> <li>'30년 : 학령아동 감소 고려, OECD 평균 수준 목표</li> <li>* 미국 22, 프랑스 23, 영국 26, 일본 29, OECD 평균 23('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li> <li>대학·교육훈련 기관 등의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학습참여율(%) *평생학습(직업훈련, 학원수강 등) 참여 가구원 수/총 가구원 수(15~64세)</li> </ul>	17	17	22	30	4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제2차 국가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06~'10) 반영</li> <li>'20년 : 캐나다 수준 목표</li> <li>'30년 : OECD 상위수준 목표</li> <li>* 핀란드 65, 영국 54, 미국 48, OECD 평균 44('0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교육훈련 비용(%) *총교육훈련비용/총노동비용</li> </ul>	1.5	1.5	1.5	2.2	2.7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미국 수준 목표</li> <li>'20년 : 캐나다 수준 목표</li> <li>'30년 : 호주 수준 목표</li> <li>* 일본 1.2, 미국 2.2, 캐나다 2.7, 호주 3.2('02)</li> </ul>	

전략	항목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 표 명	'95	'00	'05	'10	'20		'30
인 적 자 원 고 도 화	교육	고급 인적 자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지원방식 개선 (기관별 지원→ 프로그램 · 학생별 재정지원)</li> <li>조기진급 · 졸업제도 활성화 등 수월성 교육 확대</li> <li>지식서비스 분야 전문대학원 정착</li> <li>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등 첨단 과학 분야 핵심 인력 양성</li> <li>산학연 협력 · 연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교육 사회 부합도(순위)</li> </ul>	-	43 (47 개국)	52 (60 개국)	40	2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독일 수준 목표</li> <li>'20년 : 스웨덴 수준 목표</li> <li>'30년 : 산학협력이 우수한 북부유럽국가 수준 달성 목표</li> <li>* 핀란드 1위, 미국 4위, 벨기에 10위('05, IM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간 지식이전 정도(순위)</li> </ul>	-	-	21	15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산학협력사업 활성화 목표</li> <li>'20년 : 네덜란드 수준 목표</li> <li>'30년 : 상위수준(캐나다) 목표</li> <li>* 핀란드 1위, 미국 3위, 네덜란드 10위('05, IM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CI 논문(순위)</li> </ul>	24	16	12	10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제2차 국가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반영</li> <li>'20년 : 논문수 3만편 이상 수록</li> <li>'30년 : 세계5위권 달성 목표 (논문수 5만편 이상)</li> <li>* 미국 1위, 프랑스 5위, 캐나다 8위, 호주 10위('0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 시장개방</li> <li>대학교구조개혁을 통한 대학별 특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유학생 비중(%)</li> <li>*국내 대학(원)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수 / 전체 대학생수</li> </ul>	0.1	0.1	0.5	2.2	6.4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일본 수준 목표</li> <li>'20년 : OECD평균 수준 목표</li> <li>'30년 : 프랑스 수준 목표</li> <li>* 일본 2.2, 스웨덴 6.4, 프랑스 10.5, 영국 11.2, OECD 6.4('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 평가체제 구축</li> <li>성과평가 중심 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획기적 확대</li> <li>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100위권내 대학수(개)</li> </ul>	-	-	1	2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200위권 대학 100위권 진입</li> <li>* KAIST(143위) 고려대(184위)</li> <li>'30년 : 아시아 최고 수준</li> <li>* 일본 3개, 중국 4개, 영국 13개 (05, The Times)</li> </ul>



전략	항목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 표 명	'95	'00	'05	'10	'20		'30
인 적 자 원 고 도 화	교육	교육 주체의 자율과 책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과정 권한 단위 학교로 위임</li> <li>단위학교 의사결정 체계 재구성</li> <li>지방교육 자치 제도 개선</li> <li>국립대 특수법인화 등 대학 지배 구조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MD 교육 경쟁력(순위)</li> </ul>	22 (48 개국)	28 (47 개국)	40 (60 개국)	30	2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일본 수준 목표</li> <li>'20년 : 프랑스 수준 목표</li> <li>'30년 : 미국 수준 목표</li> <li>* 핀란드 1위, 미국11위, 일본 28위 ('05, IM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기 교원 수급대책 마련</li> <li>교원평가제 정착</li> <li>교원 양성·연수 체계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 천명당 초등 교원수(명)</li> </ul>	35	35	49	55	65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통계청 인구 추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전제하 교원 증원(38만 → 40만명)</li> <li>'20년 : 미국 수준 목표</li> <li>'30년 : 프랑스 수준 목표</li> <li>* 일본 60.2, 미국 64.5, 프랑스 70.2, OECD평균 72.8('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교육 재정 구조 개편</li> <li>지역간 교육격차 해소</li> <li>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li> </ul>								
	고 용	고용조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리적 임금 정책</li> <li>비정규직 대책법 제·개정 등 제도 보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3개월 임금평균</li> </ul>	-	64 (01)	63	70	80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정착 및 확산</li> <li>'30년 : 비정규직 제도 안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선</li> <li>주 5일제 근무 정착 지원</li> <li>근로감독·지원 활동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실근로시간 (시간)</li> </ul>	261 (94)	250	236	230	216	203	*미국 1,824, 일본 1,789, 영국 1,669, 독일 1,443, 네덜란드 1,357('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일) (근로자 1천명당)</li> </ul>	30.4	79.3 (01)	55.8	42.4	25.7	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노사관계 선진화제도 정착</li> <li>'20년 : 미국수준 도달</li> <li>'30년 : 영국수준 도달</li> <li>* 미국 31.5, 영국 20.5('03), 독일 9.7('02)</li> </ul>

전략	항목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 표 명	'95	'00	'05	'10	'20		'30
인 적 자 원 고 도 화	고 용 확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극적 고용전략 강화</li> <li>직업교육·훈련 강화</li> <li>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li> <li>일자리 창출지원</li> <li>사회서비스 공급 확대</li> <li>사회적 일자리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률(%) *15~64세 취업자/ 생산가능인구수</li> </ul>	62.8	61.5	63.7	67	70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아일랜드 수준 목표</li> <li>'20년 : 일본 수준 목표</li> <li>'30년 : 미국 수준 목표</li> <li>* 미국 71.5, 일본 69.3, 독일 65.5, 아일랜드 67.1, 영국 72.6('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li> <li>실업자 직업교육 훈련 강화</li> <li>청년실업대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자훈련 참여자 취업률(%) *훈련자중취업자수 /실업자훈련수료자수</li> </ul>	-	32.3	49.8	51.0	60.0	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연간 0.5%p 증가</li> <li>'20년 : 연간 1%p 수준 증가</li> <li>'30년 : 연간 0.5%p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인력 직업훈련 강화</li> <li>신기술 훈련 인프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능인력양성(천명) *우선선정직종 훈련자수 + 기능사양성훈련자수</li> </ul>	-	-	20	35	5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년 : 기능인력 수요조사 결과('05, 국토연구원) 반영</li> <li>중소제조업 기능인력 부족 인력양성('05년 14.6% → '20년 36.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고령자 정년 연장</li> <li>임금피크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고령자 고용률(%) *55~64세 취업자수 / 55~64세 전체인구</li> </ul>	62.9	58.3	58.7	61	63	65	* 일본 63, 미국 59.9, 스위스 69.5, 영국 56.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재 예방시설 확충</li> <li>안전·보건 교육 및 자료개발·보급</li> <li>안전 취약 사업장 기술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입재해율(%) (재해자수/근로자수)</li> </ul>	0.99	0.73	0.77	0.58	0.37	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영국 수준</li> <li>'30년 : 세계 상위(일본수준) 도달</li> <li>* 일본 0.26('03), 영국 0.56('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 취약 사업장 기술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수(명)</li> </ul>	3.08	1.49	1.26	0.73	0.56	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04년 대비 50% 감소 목표</li> <li>'30년 : 일본 수준 도달 목표</li> <li>* 일본 0.32, 영국 0.07, 미국 0.40('03)</li> </ul>		

전략	항목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 표 명	'95	'00	'05	'10	'20		'30
사회복지선진화	일반	삶의 질 향상	▪ 선제적 투자	▪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비율(%)	3.6	5.6	8.6 (잠정)	10.9	15.3	20.6	* 미국 14.8, 일본 16.9, 스웨덴 28.9, 영국 21.8, OECD 평균 21.2('01)
			▪ 복지지출 확대, ▪ 환경·문화·체육정책 추진	▪ 삶의 질(순위)	28 (48 개국)	33 (47 개국)	41 (60 개국)	30	20	10	* 호주 1위, 스위스 4위, 미국 14위, 일본 35위('05, IMD)
			▪ 상대 빈곤율(%)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전체가구	9.0 (96)	13.3	18.0 (잠정)	17.0	15.0	10.0	* 호주 11.2, 독일 9.8, 일본 15.3, 미국 17.1('00)	
	공공부조	최저기본수요충족	▪ 통합급여 → 개별급여	▪ 생계급여 수급률(%) *수급자/전체인구	0.9	3.2	3.0	3.4	3.5	3.5	* 독일 3.3('03), 일본 1.0('03), 스웨덴 5.3(01), 미국 8.5('02)
			▪ 저소득층에 대한 다층적 안전망 구축	▪ 생계급여 대상자수(만명)	39	149	151	167	175	173	▪ 수혜율 × 인구전망
			▪ 주거급여 분리 ▪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 주거급여 수급률(%) *주거급여 수급가구/전체가구	-	3.2	3.0	3.4	5.3	5.3	*영국 Housing Benefit 17.5('03), 미국 Housing Voucher 5.0('99)
			▪ 의료급여제도 개편								
	근로복지	근로복지 실현	▪ EITC 도입	▪ 전체가구대비 적용가구(%)	-	-	-	5.3	8.8	21.2	* 미국 18.6('05)
			▪ 영세자영업자 대책								
			(여성) ▪ 일·가정의 양립 지원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 직장보육시설 확대 ▪ 직장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48.4	48.8	50.1	55	60	65	* 스웨덴 76.6, 호주 66.3, 미국 69.2, 일본 60.2, OECD 평균 60.1('04)
			▪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	▪ 남녀소득격차 *여성소득/남성소득	-	0.45	0.48 (03)	0.53	0.60	0.70	▪ '10년 : 네덜란드 수준 목표 ▪ '20년 : 미국, 영국 수준 목표 ▪ '30년 : 스웨덴 수준 목표 * 네덜란드 0.53, 미국 0.62, 영국 0.62, 스웨덴 0.69 ('03)

전략	항목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 표 명	'95	'00	'05	'10	'20		'30
사 회 복 지 선 진 화	노후소득 보장	노후소득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민 연금수급 보장사각지대 해소 등</li> <li>국민연금 개혁</li> <li>직역연금 개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적연금 수급률(%)</li> <li>*수급자/65세이상 노인수(경로연금 제외)</li> </ul>	1.1	6.6	16.6	30.4	47.0	6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공단 추계치 반영</li> <li>* 미국 93, 영국 91, 일본 84('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장급여·적정부담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 소득대체율(%)</li> <li>*국민연금소득/생애 평균소득</li> </ul>	70	60	60	50	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43.6('00), 일본 40('00), 미국 40('99)</li> </ul>
	전국민 의료보장	전국민 의료보장 및 보험요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 개혁</li> <li>적용범위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수명(세)</li> </ul>	-	66	67.8 (02)	72	74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반영</li> <li>'20년 : 스웨덴 수준 목표</li> <li>'30년 : 일본 수준 목표</li> <li>* 스웨덴 73.3, 일본 75, 독일 71.8, 미국 69.3, OECD 평균 70.2('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범위 확대</li> <li>보험요율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 보장률 (%)</li> <li>*건강보험 부담액/총진료비</li> </ul>	-	-	65	72	80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8년까지 보장율 70%</li> <li>'30년까지 보장율 85%</li> <li>* 독일 91, 일본 88('97), 프랑스 73('00)</li> </ul>
	노인요양 공적보장 강화	노인요양 공적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 및 대상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li> <li>*수혜 노인수/치매·중풍노인수</li> </ul>	0.6	5	11	35	7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수발보험법 정부제출안 반영</li> <li>- '08년 : 제도 도입 (1~2등급)</li> <li>- '10년 : 대상 확대 (1~3등급)</li> <li>- '30년 : 수발이 필요한 모든 노인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요양보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적노인요양 보호비율(%)</li> <li>*수혜 노인수/전체 노인수</li> </ul>	0.1	0.6	1.4	4.1	8.9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10.1, 일본 8.7, OECD 평균 13.9('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요양시설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요양 병상수 (개/인구천명당)</li> </ul>	-	0.2	0.5	1.5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50, 영국 35('03), OECD 평균 40</li> </ul>

전략	항목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 표 명	'95	'00	'05	'10	'20		'30
사회복지선진화	사회서비스	출산·육아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4세 완전 무상보육·교육 실시</li> <li>차등보육료 지원 확대(저소득층 → 중산층)</li> <li>영아 현물급여제도 도입·확대</li> <li>국공립 보육시설 확충</li> <li>보육료 자율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서비스 수혜율(%)</li> <li>*육아시설이용 영유아 / 전체 영유아</li> </ul>	20	31	47	65	67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저출산대책 반영</li> <li>'20년 : 만4세 완전 무상 보육·교육 실시('17~)</li> <li>'25년 : 유아 100% 수혜('05년 : 70%)</li> <li>'30년 : 영아 56% 수혜('05년 :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 현물급여제도 도입·확대</li> <li>국공립 보육시설 확충</li> <li>보육료 자율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비용 부모부담률(%)</li> <li>*부모부담비용 / 총 육아시설 이용비용</li> </ul>	-	-	62	42	38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저출산대책 반영</li> <li>'20년 : 영아현물급여 도입('12~) 및 만4세 완전 무상 보육·교육 실시('17~)</li> <li>* 호주 34, 영국 30, 프랑스 27('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li> <li>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li> <li>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li> <li>불임부부 및 산모도우미 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계출산율(명)</li> <li>*가임여성 1인당 평균 출산자녀수</li> </ul>	1.65	1.47	1.08	1.3	1.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일본(1.29), 이태리(1.33) 수준</li> <li>'20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06-'10)의 출산율 목표 반영</li> <li>* OECD 평균(1.6, '03) 수준</li> <li>'30년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최소인구규모(46천만명) 달성에 필요한 출산율 수준 도달</li> <li>* 프랑스 1.90, 독일 1.37, 일본 1.29 이태리 1.33, 영국 1.74('0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 강화</li> <li>무상예방접종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사망률 (명/출생아 천명당)</li> </ul>	7.7 ('96)	6.2 ('99)	5.3 ('02)	4.5	4.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호주 수준 목표</li> <li>'20년 : 프랑스 수준 목표</li> <li>'30년 : 일본, 스웨덴 수준 목표</li> <li>* 호주 4.5, 프랑스 3.9, 스웨덴 3.1, 일본 3.0('03), OECD 평균 6.5('02)</li> </ul>	
	교육양육화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 아동 방과후 활동 지원 확대</li> <li>방과후 학교 전면 실시</li> <li>방과후 활동간 연계·조정시스템 구축 (지역별 협의체 구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과후 활동 수혜율(%)</li> <li>*방과후 활동 참여 아동·청소년 / 전체 아동·청소년 (만 6~17세)</li> </ul>	36 ('96)	40	32	67	72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6년부터 방과후 학교 전면 확대</li> <li>방과후 학교 참여율(교육부) 반영 : ('05) 31 → ('10) 65 → ('20) 70%</li> </ul>	

전략	항목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 표 명	'95	'00	'05	'10	'20		'30
사회복지선진화	장애인 자립 자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의무고용제</li> <li>* 50이상 사업체 2% 장애인 고용의무</li> <li>장애인 자활근로 사업장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실고용률 (%)</li> <li>*장애인 종사자/ 민간부문 총종사자</li> </ul>	0.4	1.0	1.3	1.7	2.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3.6(중증장애인 대상, '03), 프랑스 4.11('94), 일본 1.49('00)</li> <li>* 장애인고용 할당비율(%) : 프랑스·폴란드 6, 독일 5(중증), 이태리 8, 스페인 2('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 건물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li> <li>*편의시설수 / 의무설치대상수</li> </ul>	47.4	50.0	72.7	82	95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시설증진법('98)에 근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 장애인 생활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li> <li>*상용근로자 대비</li> </ul>	42.5	43.1	44.5	50	75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91.8, 호주 93.0, 영국 83.6 OECD 평균 90('90년대 후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인터넷 이용률(%)</li> </ul>	-	6.9	36	50	95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 인터넷 100% 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재활병원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립 장애인 재활병원수 (개소)</li> </ul>	1	1	1	7	16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 16개 시·도당 2개 확충</li> </ul>
	주거 중심의 복지정책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종합계획 (03-'12)</li> <li>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li> <li>부동산 가격 안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임대주택비율(%)</li> <li>*공공임대주택가구/전체가구</li> </ul>	-	2.3	5.1	10.1	16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21, 덴마크 19('01)</li> <li>* '05년은 사업계획 승인물량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li> </ul>	-	23	23	18	9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면적기준(m<sup>2</sup>) : 한국 37, 일본 44, 프랑스 56</li> <li>* '05년은 산출된 통계가 없어 최근 통계치인 '00년 통계치 원용</li> </ul>	
	생활안전 보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명)</li> </ul>	1,508	1,046	3,800	3,320	2,16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2,100, 영국 280, 호주 800명('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안전, 공중위생, 교통안전 등 생활 안전 보장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O 인증 안전도시(개)</li> </ul>	-	-	1	3	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 현재 추진중인 도시중 2개 추가</li> <li>* 제주, 원주, 서울(자치구), 경남(시) 등</li> <li>* '30년 : 세계 5위권 이내 도달</li> <li>* WHO인증 안전도시 총 78개('04) 스웨덴 14개(1위), 노르웨이 13개(2위), 호주 9개(3위)</li> </ul>

전략	항목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 표 명	'95	'00	'05	'10	'20		'30
사 회 적 자 본 확 충	공 동 체	지역 공동체 육성	▪ 자발적 복지체제구축	▪ 자원봉사 참여율 (%) *자원봉사참가자수 /총인구	-	13 (99)	15	20	30	50	* 일본 20, 미국 50('03)
			▪ 시민의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시민의식(순위)	-	-	26	20	15	10	* 스웨덴 10위, 독일 15위, 일본 20위 (04, World Bank)
			▪ NGO지원 활성화	▪ NGO활동(순위)	-	-	23	15	10	5	* 독일 5위, 스웨덴 10위, 덴마크 15위 (03, LSE)
	법 · 제 도 혁 신	작업현장 사회적 자본 확충	▪ 투명경영과 기업구조선진화 ▪ 유연한 근로 시스템 도입 ▪ 보육시설 확충	▪ 기업의 사회적 책임(순위)	13 (48 개국)	39 (47 개국)	30 (60 개국)	25	20	10	* 핀란드 4위, 캐나다 13위, 일본 27위 (05, IMD)
			▪ 민간 참여 법령위원회 설치 ▪ 공직윤리 종합정보 시스템 확대 ▪ 부패방지시스템 확대	▪ 정부정책의 투명성(순위)	27 (48 개국)	41 (47 개국)	34 (60 개국)	15	10	5	* 핀란드 1위, 싱가포르 3위, 뉴질랜드 5위('05, IMD)
			▪ 사법제도 개혁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 정치인 신뢰도 (순위)	-	48 (39 개국)	28 (77 개국)	20	15	10	* 스웨덴 10위, 독일 15위, 일본 20위 (03, WEF)
	사 회 적 자 본 확 충	다양성 수용 시스 템 구 축	▪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 전자정부 구축 ▪ 지방행정체제 개편 ▪ 정부인력의 서비스 위주 재배치	▪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건) *총 민원 종류 4,900건('05)	-	-	590	1,000	1,500	2,000	* 아일랜드 1위, 싱가포르 5위, 미국 17위, 일본 21위('04, TI)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 사회응집력(순위)	-	37 (47 개국)	34 (60 개국)	15	10	5	* 싱가포르 1위, 덴마크 3위, 캐나다 5위 (05, IMD)
			▪ 여성의 정치, 정책 과정 참여 활성화	▪ 여성권한척도(순위) *여성정치·경제 활동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정도	50 (116 개국)	63 (70 개국)	59 (80 개국)	45	30	20	* 노르웨이 1위, 미국 12위, 일본 43위 (05, UNDP)



전략	항목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 표 명	'95	'00	'05	'10	'20		'30
능 동 적	국 제 적 위 상	국가 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이미지 개발</li> <li>한국문화 상징물 설치 확대</li> <li>한국문화상품발굴 · 보급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이미지 경쟁력지표(순위)</li> </ul>	19	35	34	24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대만 수준 도달</li> <li>'30년 : 세계 5위권 도달</li> <li>* 칠레 1위, 호주 5위, 싱가포르 3위, 스위스 11위, 대만 24위 ('05, IMD)</li> </ul>
			국제협력 강화 및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DA/GNI 비중 (%)</li> </ul>	0.03	0.05	0.09	0.11	0.25	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반영(1억불)</li> <li>'15년 : DAC평균 도달('05, 0.25)</li> <li>* 네덜란드 0.74, 일본 0.19, 캐나다 0.26, OECD평균 0.25('04)</li> </ul>
		제도 및 관행의 국제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분야 외국인 투자 제고방안 수립 ·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DI 제한 지수 (서비스업분야 순위)</li> </ul>	-	19	25	15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스페인 수준 도달</li> <li>'30년 : 세계 상위권 도달</li> <li>* 영국 1, 아이슬란드 5, 스페인 15 ('03, Glo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사관계법 및 제도의 선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경직성 지수</li> </ul>	-	-	45	15	1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0, 미국 3, 아일랜드 29, 네덜란드 43, 독일 55 ('03, World Bank)</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기준 정립</li> <li>투명경영관행 정착</li> <li>소비자 보호 강화</li> <li>외국인력정책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배구조 선진화 지수</li> </ul>	-	-	5.8	6.0	6.7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7.5, 홍콩 6.7, 말레이시아 6.0, 대만 5.5 ('04,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li> </ul>
	세 계 화	FTA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 확대</li> <li>경제권역별 경험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 (개, 누계)</li> </ul>	-	-	2	15	25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미국, ASEAN</li> <li>'30년 : 동아시아 경제통합 실현</li> <li>* 싱가포르 24('05), 일본 15('10 계획)</li> </ul>
		통일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핵문제 해결 및 평화 체제구축</li> <li>남북교역과 대북 투자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한교역 규모(억불)</li> </ul>	2.8	4.2	10.5	20	50	200	
		금융업 생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허브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업 GDP 기여율(%)</li> </ul>	-	6	8	10	14	20	
		고부가 가치형 물류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 · 물류시설 확충</li> <li>물류산업 선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컨테이너 화물 처리량 (만TEU/년)</li> </ul>	490	912	1,322	2,400	4,740	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년 '05 대비 4배 수준 증가</li> <li>* 중국 6,162, 미국 3,264, 싱가포르 1,844('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물류부가가치 비중(%)</li> </ul>	-	-	81	90	110	110	
경제자유 구역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투자 경영 · 생활환경 개선</li> <li>해외 R&amp;D 센터, 다국적기업 본사 유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인구 대비 고급 외국인 이민자수(%)</li> </ul>	-	-	0.19	3.0	4.5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독일 수준 도달</li> <li>'30년 : OECD 평균 도달</li> <li>*스위스 19.16, 호주 16.82, 미국 4.25, 독일 2.70 OECD평균 6.91('02)</li> </ul>		



분야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 표 명	'95	'00	'05	'10	'20		'30
국 방	21세기 첨단 정보 과학군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감시 및 지휘·통제능력 강화</li> <li>부대수 및 병력수 감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투자 비중(%) *전력투자비용/국방분야 지출</li> </ul>	28.2	27.4	25	35	4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개혁 2020상 연차별 소요반영</li> <li>20년 이후, 이상적인 국방비 구조 지향 (경상운영비 : 전력투자비=4:6)</li> </ul>
	가고 싶은 군대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영시설 개선</li> <li>자기계발기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영생활관 개선율(%) *개선정도/목표치</li> </ul>	-	-	34	91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개혁 2020상 연차별 소요반영</li> <li>12년 이후 100% 달성 (침상형 내무반 → 침대형 생활관)</li> </ul>
치 안	安心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수사시스템 확충 (인력증원, 전문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대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li> </ul>	89.3	73.9	72.6	73	75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신수사절차 강화 등을 통해 '10년 73%로 목표 설정 → 매 10년 단위로 2%씩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안 미비지역 파출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2 순찰차 5분 이내 현장출동률(%)</li> </ul>	90.9	92.0	80.0	96	96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까지 매년 출동률 3%씩 상향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안전시설 개선</li> <li>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의식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사고 사망자수 (명, 자동차 1만대당)</li> </ul>	9.4	7.4	3.4	2.5	2.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30년 : 선진국수준 달성 목표 * 미국 1.85, 일본 1.1, 영국 1.14, 독일 1.23('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안전시설 개선</li> <li>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안전사고율 (명, 아동10만명당)</li> </ul>	-	14.8	8.3	7.3	6.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OECD평균 수준 달성</li> <li>'20년 : 일본 수준 달성</li> <li>'30년 : 독일 수준 달성 * 일본 5.8, 독일 5.0, 영국 3.8, 미국 10.2, OECD평균 7.3 ('96~'00년 평균)</li> </ul>
문 화 체 육	문화적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계층 문화생활 지원</li> <li>문화시설(공연장, 지방 문예회관 등) 기반확충</li> <li>박물관·도서관 건립 지원</li> <li>BTL 이용·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물관 1관당 인구수(만명)</li> </ul>	25 ('97)	17 ('02)	12	8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일본의 절반수준 목표</li> <li>'30년 : 캐나다 수준 목표 * 미국 6, 프랑스 4.6, 캐나다 2.2, 일본 3.7('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만명)</li> </ul>	15	11	9	5	4.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3, 일본 4.8, 터키 4.7('0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문화향유율(%) *연간 1회 이상 관람자수/총인구</li> </ul>	67 ('97)	55	62 ('03)	70	90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년 : 90%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육 시설 확대</li> <li>생활체육 관련 홍보 강화</li> <li>생활체육 지도자 양성·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육 참여율 (%) *주2~3회 생활체육 참가자수/총인구수</li> </ul>	38 ('94)	33	40	50	60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 인구 절반 수준 목표</li> <li>'20년 : 일본 수준 목표</li> <li>'30년 : 프랑스 수준 목표 * 일본 60, 미국 67, 프랑스 73('03)</li> </ul>		

분야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 표 명	'95	'00	'05	'10	'20		'30	
농림수산	농가 소득 안정	직접지불제 확대	직불제 투입자비율(%) *직불투용자 /농림투용자	0.2	0.6	12.4	20.7	25.0	30.0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라 직불비중 확대 * EU 69, 미국 26('0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 확대	재해보험 가입률(%)	-	-	23.4	26.0	31.0	36.0	매년 0.5% 증가 * 일본 25('01), 미국 72.7('00)	
	농업체질 강화	쌀 전업농 육성	쌀전업농 쌀생산비중(%) *쌀전업농쌀생산면적 /전체농가쌀생산면적	3	18	30	41	60	79	* 일본 44('00), 60%('10계획)	
		친환경농업 확대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율(%)	0.1 ('99)	0.2	4	10	15	20	'11년 이후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만 인증	
	생산기반 유통개선	재해대비 안전 영농을 위한 생산기반정비	배수개선율(%)	341	521	688	813	100	100	전국의 상습침수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배수개선 완료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전문조직 처리비중(%)	-	-	26.8	40.0	60.0	80.0	'30년까지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전체물량의 80% 처리	
	수산업 경쟁력 제고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사업 자원회복·관리사업	수산자원량 (만톤)	794	768	790	880	1,000	1,000	'15년 1,000만톤 수준 확보 후 유지	
	농어촌 생활 서비스 기반확충	농어촌 활력증진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주거 등 생활인프라 확충	농어촌마을개발 (권역)	-	-	36	216	1,000	1,000	'17년까지 1,000권역 착수	
	환경보호	자연환경 보호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사업	자연보호지역비율 (%)	2.8	4.7	9.6	11.0	15.5	16.5	* OECD 평균 16.4('04)
			생태면적률 확대	도시내 일인당 공원면적 (m) *공원면적/도시인구수	-	-	8.2	9.8	12.5	15.0	* 런던 25.7, 뉴욕 14.1, 파리 10
대기질 개선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및 감시 강화	수도권(서울기준)내 대기오염도(μg/m <sup>3</sup> )	78	65	58	55	40	35	* 동경 32('02), 런던 27('04)	
수질 인프라 확충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 물수요 관리강화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 구역내 인구 / 총인구	45	71	83	90	95	96	* 독일 94.5('04)	
환경 보건		통합위해성평가 관리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구축	환경오염위험 인구비율 ('05=100기준)	-	-	100	75	50	30	* 환경보건 수준 OECD 최하위권	

참고자료 2

## 50대 핵심과제



## 1. 그간의 성과와 한계

□ 60년대 이후 요소투입·수출·제조업 위주의 발전정책에 의한 비약적 성장을 통해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도달

\* GDP 규모 : 12위(7,875억불, '05년), 교역규모 : 12위(5,456억불, '05년)

○ 90년대 들어서는 R&D 투자확대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함께 IT, 자동차 등 대표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

\* DRAM 매출액 : 1위(121억불, '05년), TFT-LCD 매출액 : 1위(2,223억불, '05년), 자동차 생산 : 5위(370만대, '05년) 등

\* 세계 500대 기업에 11개 포함('05년, 국가별 순위 : 9위)

□ 이러한 전략은 90년대 말까지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경기둔화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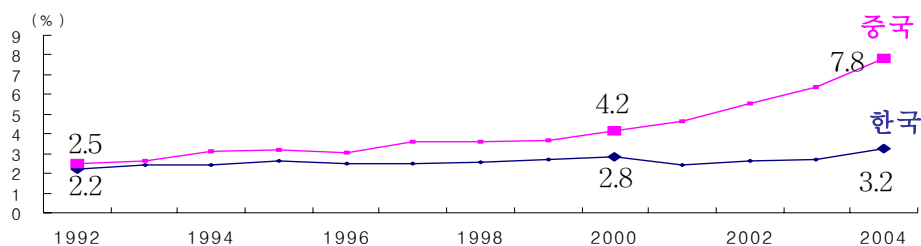
○ R&D 투자규모의 급격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의 연구개발 성과는 미흡

\* 원천기술 특허건수(연구원 천명당, '02) : 한국 4.5, 미국 13.7, 일본 20.4, 독일 27.4, 스위스 35.8, OECD 평균 14.2

○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시장개척 노력 부족 등에 의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약세

\* 중국 대비 기술격차 : 가전 1~2년, 자동차부품 2~3년, 금형 3~5년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1992~2004)>



\* KDI, UN통계 재구성('05)

## 2.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원천 확보

-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연구개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성장동력의 기초를 확보

\* GDP 대비 R&D 투자(정부+민간) : ('04) 2.9 → ('20) 4.3 → ('30) 5.3%

### □ 산업의 기초체력 강화 및 새로운 선도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동력의 골격을 형성

- 생산·고용유발 등 연관효과가 크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품소재, 문화 및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

- 고용창출의 원천이며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

\* 혁신형 중소기업 : ('05) 11 → ('20) 60 → ('30) 90천개

-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신성장산업 발굴·육성

### □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민들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함께 고용창출도 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

\*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 ('05) 13.1 → ('20) 21.0 → ('30) 25.0%

-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이용을 통해 성장에 대한 외부충격을 최소화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균형발전·성장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건설

### 3. 2030년 미래의 모습

□ GDP는 '05년 대비 5배 증가하여 세계 8~9위권 진입

○ 잠재성장률은 2% 후반대까지 떨어지나 경제·사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질적 측면(국가경쟁력, 삶의 질 등)은 크게 향상

\* 국가경쟁력(IMD) : ('05) 29 → ('20) 15 → ('30) 10위  
 삶의 질(IMD) : ('05) 41 → ('20) 20 → ('30) 10위

□ IT, BT, NT, 나노 등 최첨단 기술의 핵심강국으로 부상하여 벤치마킹하고 싶은 나라로 위상 제고

\* 세계일류 상품수 : ('05) 505 → ('10) 1,000 → ('30) 2,000개  
 BT 기술수준(세계수준=100) : ('05) 61.9 → ('10) 75.7 → ('30) 100.0

지표명	'05	'10	'20	'30	근거/국제비교
▪ GDP 규모 <sup>주)</sup> (십억불)	788 (788)	1,122 (1,262)	1,824 (2,567)	2,406 (4,145)	· 미국 12,486    일본 4,571 · 영국 2,201    이태리 1,766
▪ 1인당 GDP <sup>주)</sup> (천불)	16 (16)	23 (26)	37 (51)	49 (84)	· 스위스 50    미국 42 · 일본 36    프랑스 34
▪ 원천기술 특허 (연구원 천명당)	4.5	10	20	30	· 미국 13.7,    일본 20.4, · 독일 27.4,    스위스 35.8, · OECD 평균 14.2('02)
▪ 차세대산업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5	7	11	15	· 미국 32.8(항공, '03) · 독일 21.7(자동차, '03)
▪ 부품개발 기술수준 (일본=100)	84.3	93.9	98.0	105.0	· '10 : 동반성장(국민경제자문회의)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04년 · '20~'30 : 세계수준 달성
▪ GDP대비 서비스업 생산(%)	56.3	58.7	62.3	66.3	· 산업연구원 전망 * 일본 68.3,    독일 70.2, · 미국 77.4('03)

주) 2005년 불변가격 기준(장기재정전망팀 추계), ( )안은 경상가격 기준

## 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 우리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 등 전반적인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
  - \* 서비스산업의 GDP 생산비중('03) : (미)76.5, (일)68.0, (프)75.9, (한)57.2%
- 서비스산업 구조를 지식기반서비스 등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 재편
  - \* 서비스산업의 GDP 생산비중을 ('05) 56 → ('30) 66%로 확대
  - 통신, 금융, 광고 등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은 대형화·전문화
  -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도 대외 개방 및 경쟁원리 확대
  - 콘텐츠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 문화, 레저산업의  
고급화·다양화 추진
  -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유통·개인서비스 부문은 구조조정 촉진
  -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미국=100) : ('05) 45 → ('20) 70 → ('30) 90

## ②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 외환위기라는 특수상황이 극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는 급증
  - 한계기업 퇴출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저금리 추세 등으로 인해 정책자금의 실효성 감소
  - \* 정책자금 규모(잔액) : ('96) 3.5 → ('98) 6.1 → ('02) 10.2 → ('04) 11.3 → ('05) 12조원
- 융자 등 금융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경영컨설팅, 기술인력 양성 등 콘텐츠 위주 지원으로 전환
  - 정책자금은 혁신형 기업 위주로 지원
  -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05) 1 → ('10) 3 → ('20) 6 → ('30) 9만개
  - 경영·기술 컨설팅을 강화하고, 기능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한편  
경쟁력 상실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전직·재교육 강화



### ③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

- 문화산업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기반은 미흡

- \* 국내 문화산업 시장규모는 50조원 수준('05년, 세계시장의 1.5% 내외)

- \* '05년 문화산업 수출은 약 10억불(영화 등 핵심분야는 매년 20% 수출증가)

- 글로벌 수준의 문화산업 진흥기반을 확충, 문화강국 지향

- 한류의 지속·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최우선화 추진
  -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창작소재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 CT 핵심기술 개발 및 기획인재 양성 등 산업 인프라 구축

###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 수도권(국토면적의 11.8%)의 인구·경제력 집중현상 심화

- 수도권 삶의 질 저하, 지역간 격차 심화,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 : 100대 기업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위치

-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 대덕단지 클러스터화와 연계하여 충청권에 경제·행정중심도시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 \* 사업기간 : '05~'30, 총사업비 : 8.5조원

- 공공기관(175개)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하여 혁신도시 건설을 체계적으로 지원
  -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
- \* 혁신도시건설지원법 제정 및 도시별 기본구상안 마련('06년), 사업착공('07년), 공공기관 이전('10~'12년)

##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 필요

- 현재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

한국 OECD평균 일본 영국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04, %) 12.7    21.7    16.0    26.9    25.0    34.2    31.3

- 사회서비스 수요조사('06.3) 결과 91만개 일자리 부족

□ 국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적극 창출

- 정부내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설치·운영('06.7)

- 보육, 간병, 방과후 활동 등 선진국 수준의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 : ('05)13.1 → ('10)16.7 → ('20)21.0 → ('30)25.0%

## ⑥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국제적 수준의 R&D 투자 비중에도 불구하고, 투자효율성 미흡

\* GDP 대비 R&D 비중 : 한국 2.85, 미국 2.68, 독일 2.49('04), 일본 3.15%('03)

\* 기술수지 적자 규모 : ('99) 25 → ('04) 27억 달러

□ R&D 투자확대가 성과와 직결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노력 강화

○ 성과평가제도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 성과평가결과와 연계한 세출구조조정 강화, 연구비관리 인증제 정착 등

○ 정부·민간간의 역할분담으로 자원배분구조 개선

\* 민간의 수익창출이 예상되는 실용화사업의 경우 민간부담 강화

\* 정부는 국방, 방재, 보건의료, 환경 등 안전 및 삶의 질 관련 분야에 중점 투자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전략분야 등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제시를 위한 로드맵 마련 추진

## ⑦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

□ 우리나라는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성,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등이 낮은 수준

\* 에너지 원단위('03) : 한국 0.36, 미국 0.22, 일본 0.11, OECD 평균 0.20

□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

○ 유전개발펀드 도입 및 유전참여 등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 태양·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활성화

○ 기술혁신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 ⑧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현행 제조업 위주의 성장으로는 한계,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이 절실
  - 신기술을 기반으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선정('03.8)
    - \* 10대 산업: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PDP, LCD),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신약/장기
  - 기계, 정밀화학, 농생명산업 등 파급효과가 높은 부문으로 확대 검토
    - \*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고도화 전략을 동시에 추구
- 전략적 기술개발 투자로 성과창출 가속화, 조기산업화 기반확충
  - 기술수준과 국내역량을 고려한 민·관간 역할분담
    - \* 민은 실용기술, 官은 원천기술에 중점 투자
  - 부처간 전략적 역할분담에 따른 범부처적 추진 강화
  - 기업(특히,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조기 산업화 기반을 확충

## ⑨ 부품소재산업의 전략적 육성

-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흑자('01, 28→'05, 227억불)가 개선되고 있으나, 핵심 첨단소재는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
- 부가가치·고용유발 등 산업연관 효과가 큰 중추산업으로 육성
  - 일정규모와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부품소재 「중핵기업」 확보
    - \* 중핵기업(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불을 초과) 수 : ('05) 146 → ('10) 300개
  - 중국, 미국 등 개도국과 선진국에 부품공급기지화 달성
  - 독일·일본 등 부품소재분야 선진기업 국내 유치
    - \* 부품개발기술수준(일본=100) : ('05) 84.3 → ('20) 98.0 → ('30) 105.0
  - 부품소재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부품소재 혁신인프라 구축

## 1. 그간의 성과와 한계

-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풍부한 인적자원 공급 기반 마련
  - (초중등교육)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04) 실시 등 양적 성장과 더불어 국제평가에서도 학업 성취는 최상위 수준
    - \* 중등학교 취학률(IMD) : ('04) 10위(94.7%) → ('05) 6위(97.2%)
    - \* PISA('03) :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 (대학교육) 대학설립 준칙주의('97), 대학정원 자율화('98) 등 대학교육 기회 확대
    - \* 대학진학률('04) : 한국 81.3, 미국 63.4, 일본 49.1%
  -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정('99), 평생학습도시('01), 평생학습 축제('02)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 평생학습 참여율: ('96) 17 → ('04) 22%
-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 미흡, 고급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 체계적인 인적자원의 개발·활용 부족
  - 공교육에 대한 불신 증가 및 지역·소득 계층간 양극화 심화
    - \* 사교육비('03) 13.6조원, 조기 유학자수('04) 16천명
  -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약화,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 공급 부족 및 분야별 수급 불균형 심각
    - \* 대학 교육의 사회요구 부합도('05, IMD) : 60개국중 52위
  - 여성·중고령자 등 잠재인력 뿐 아니라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미흡으로 사회적 낭비 초래
    -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95) 48.4 → ('04) 49.9%, OECD 평균 60.1%( '04)

## 2.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유망 선도분야, 기초 학문분야 등에서 국가 발전을 견인할 고급인적자원 육성 기반 마련
  - 대학별 특성화 등 고급 인적자원 수요에 대응한 대학교육 혁신 및 첨단산업·지식서비스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
  
-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시스템 효율화 추진
  -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제 개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주체의 자율과 책무 강화
  - 대학구조개혁, 대학평가제도 혁신, 고등교육 시장개방, 산학연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 강화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양극화 해소
  - 방과후 활동 등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 대안교육 정착, 대학생 학자금 지원·보증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잠재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 보육제도 정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 및 취업·전업 촉진
  - 근로자 직업능력 확충을 위한 직업훈련·평생학습 체제 혁신
  - 청년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겨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생애 근로기간을 확대

### 3. 2030년 미래의 모습

#### □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육성

○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육성 및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확립

\* 세계 100위권내 대학수 : ('05) 1 → ('30) 6개(아시아 최고 수준)

\* 평생학습 참여율 : ('04) 22 → ('30) 50%(OECD 상위 수준)

#### □ 교육경쟁력을 확보, 세계 10위권의 인적자원 강국 실현

\* 교육시스템 경쟁력 : ('05) 40 → ('20) 20 → ('30) 10위

핀란드 1위, 미국 11위, 일본 28위('05)

지표명	'05	'10	'20	'30	근거/국제비교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명)	32	30	27	23	· 프랑스 23, 일본 29, 영국 26, OECD 평균 23('03)
▪ 대학교육의 사회 수요 부합도(순위)	52	40	20	10	· IMD(60개국,'05), 핀란드 1위 벨기에 10위, 스웨덴 22위
▪ 세계 100위권내 대학수(개)	1	2	4	6	· The Times('05), 일본 3, 중국 4, 영국 13
▪ SCI 논문 순위	12	10	8	5	· 미국1위, 일본2위, 프랑스 5위, 캐나다 8위, 호주 10위('04)
▪ 평생학습 참여율(%)	22 ( '04)	30	40	50	· 핀란드 65, 영국 54, 미국 48, OECD 평균 44('04)
▪ 기업의 교육훈련 비용(%)	1.5 ( '03)	2.2	2.7	3.2	· 일본 1.2, 미국 2.2, 캐나다 2.7, 호주 3.2('02)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0	55	60	65	· 스웨덴 76.6, 미국 69.2, 일본 60.2, OECD 평균 60.1('04)
▪ 고용률(%,'15~64세)	64	67	70	72	· 영국 72.6, 미국 71.5, 일본 69.3, 아일랜드 67.1('05)
▪ 중고령자 고용률(%)	59	61	63	65	· 일본 63, 미국 59.9, 스위스 69.5, 영국 56.2('04)
▪ 산업 재해율(%)	0.77	0.58	0.37	0.24	· 일본 0.26('03), 영국 0.56('02)

## ⑩ 대학평가제도 혁신

- 현재 전문성·독립성이 결여된 평가기관들에 의한 분산적·비체계적 평가로 대학교육에 대한 체계적 질 관리 미흡
  - \* 기관평가 : 대학교육협의회, 재정사업평가 :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
  - 학문평가 : 대학교육협의회, 공학교육인증원 등
- 대학교육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체제 도입
  - 고등교육평가원을 설치하고, 정부·대학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
  - 평가의 질을 표준화하여 이를 고등교육평가원이 통합 관리
  - 국제평가기구와 연계를 통해 국제수준의 평가체제 구축

## ⑪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

- 양적 성장에 걸맞는 대학교육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 필요
  - 현행 국립대는 정부기구 형태로 경직적 운영  
(예산회계법에 의해 재정운영, 국고회계·기성회계 분리 운영)
-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로 대학의 질적 도약 계기 마련
  - 국립대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09년까지 15% 감축, 8.3만명→7.1만명)
  -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 \* '10년까지 서울대·울산국립대·인천시립대 등 5개 내외 대학 법인화 추진
    - \* '06년중 「국립대학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아시아 최고 수준의 대학 육성
    - \* 세계 100위권 대학수(The Times) : ('05)1 → ('10)2 → ('20)4 → ('30)6개



## ⑫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 급격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정년이전의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이 증가하여 인적자원 낭비 초래
  - 국내기업의 평균정년 단축(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 \* ('00) 57.2 → ('01) 56.7 → ('02) 56.6 → ('03) 56.7 → ('04) 56.8세
- 능력이 있는 한 평생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로조건 마련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중고령자 인력활용 확대
    - \* 중고령자 고용률 : ('05)58.7 → ('10)61 → ('20)63 → ('30)65%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고령자 고용안정 프로그램 컨설팅 비용지원('06.1.1 실시) 확대

## ⑬ 학제 개편

- 현행 학제는 교육-노동시장 연계, 국제이동 등 환경 변화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
  - 효율적인 직업기술 교육 및 진로교육 부재로 대학 진학 과다
    - \* 대학진학률 : 한국 33.2('90) → 82.1%('05), 미국 59.9('90) → 61.7%('01)
  - 세계화에 따른 유학생 수 급증('01년 15 → '05년 19만명)  
→ 학기 불일치에 따른 혼란과 낭비 초래
- 종합적 학제개편을 통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
  - 학교급별 수업연한(5-3-4제, 6-4-2제 등) 조정, 취학연령 하향조정 검토 등을 통해 入職연령 인하로 개인 생애 생산성 극대화
  - 학위·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제고하도록 가을 학기제 도입
    - \* 교육경쟁력(IMD, 60개국) : ('05) 40 → ('20) 20 → ('30) 10위

## ⑭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 고령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투입의 감소가 잠재성장률 저하의 주요원인

-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고용시장 비진입자(청년, 중고령자, 여성 등)의 고용시장 진입유도가 긴요
- 또한 고용없는 성장, 산업고도화에 따른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

<OECD 국가의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률 현황>

구 분	(단위: %)			
	한 국	미 국	스 웨 덴	일 본
▪ 청 년(15~24세)	31.2	53.9	51.5	40.0
▪ 중고령자(55~64세)	58.5	59.9	69.5	66.0
▪ 여 성	52.2	65.4	71.8	57.4

\* OECD Employment Outlook ('04)

□ 고용 유발형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 직장-가정 양립정책 추진, 적극적 직장알선 등으로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최대한 활용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05) 50 → ('30) 65%

- 산업수요에 맞게 대학교육, 평생교육 등을 개선  
→ 노동력의 질적 향상 추진

## ⑮ 대학별 특성화·산학연 연계 강화

- 직업 현장의 인력 수요는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으나  
현행 고등교육체제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
  - \* 청년실업자 중 대졸이상 학력자 비중(통계청) : ('98) 25.6 → ('04) 37.3%
  - \*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중소기업중앙회) : ('01) 4.0 → ('05) 5.5%
  
- 대학별 특성화·산학연 연계 강화로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 대학별 강점 분야로 자원이 재배치되도록 구조개혁 성과관리 강화
    -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및 특수법인화 등 운영체제 개선
    - \* 대학특성화 지원 관련 법적근거 마련·추진중
  
  -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효율적인 유인체제 마련
    - \* 대학교육 사회부합도(IMD, 60개국): ('05) 52 → ('10) 40 → ('20) 20 → ('30) 10위

## ⑯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 청년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에 한계가 있고 개인의 생애 생산성 제고도 제약
  - \* 남자 入職연령('00, 교육부) : 한국 27.2, 미국 22.0, 독일 22.2, OECD평균 22.0세
  
- 입직연령 인하 및 청년 고용 촉진방안 추진
  - 취학·입대연령 하향조정, 학제개편, 언제든지 대학진학이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입직연령 인하
  
  - 산학협력 활성화, 직업교육체제 혁신 등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육성 및 해외취업, 사회적일자리 등 일자리 공급기반 확충

## 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

- 행정-교육자치 이원화로 일반지자체의 교육투자는 매우 미미
  - 지자체의 복지·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재정체계 필요
  - 일반·교육자치 통합 등 근본적인 자치구조 개편도 필요
- 복지·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 확대
  - 복지 : 교부세 배분기준을 복지 중심으로 개편
    - 복지 투자 확대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규모 확대
  - 교육 : 일반-교육자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자체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 강화 → 주민선호가 반영된 교육서비스 공급
    - \* 중앙정부는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
    -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부담은 경감

## ⑱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Global Brain Network)

-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 해외유학 후 해외에 잔류하는 고급인재 증가
  -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 전문인력 유입은 부족한 상황
    - \* 순 두뇌유입률 : ('90) △1.3 → ('00) △1.4%(OECD 평균 1.6%)
- 국적과 국경을 초월한 고급인재 개발과 활용
  - 통합 D/B 등 글로벌 인력 관리체제 구축, 인센티브 마련 등 해외 인적자원 활용 인프라 구축
  -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취업연계 지원, 해외 우수기관 유치 등 제도적·환경적 기반 마련
    - \* 외국인 유학생 비중 : ('05) 0.5 → ('20) 6.4 → ('30) 10.5%

1. 그간의 성과와 한계

□ '90년대 이후 4대 사회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장애수당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증가

○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95~'05 동안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 9.7%를 상회하는 연평균 13.2% 증가하여 '05년 약 45.2조원 수준

\* 4대 사회보험 전면 확대 : 건강('89), 고용('98), 국민연금('99), 산재('00)

< 사회복지 지출 증가추이(통합재정 기준, '95~'05) >

(조원)

	'95	'00	'05	평균증가율 ( '95~'05, %)
사회복지 지출	13	28	45.2	13.2
전체 재정지출	71	127	179	9.7

□ 복지 지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수준, 전달체계 등 전반적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황

○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

(%, '01년 GDP 대비)

	한국		일본	스웨덴	미국	독일	OECD 평균
	'01	'05					
공공사회지출	6.1	8.6 <sup>1)</sup>	16.9	28.9	14.8	27.4	21.2

1) '05년 추계(중앙·지방 + 사회보험)

- 고령화 진전에 따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보험의 재정안정성 위협
-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빈곤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빈곤노인, 빈곤아동, 차상위계층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저하

## 2.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다층적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및 빈곤탈출 동기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통합급여 → 욕구특성별 개별급여), 저소득층 임차가구 주거지원 확대, 장애인 복지종합대책 수립
- 보육, 노인수발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강화로 기본욕구 충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방과후 활동 확대, 보육서비스 확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사회보험제도의 세대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건강보험 개혁
-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 추진

### 3. 2030년 미래의 모습

□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구축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로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 실현

○ GDP 대비 복지지출은

'19년에 '01년 미국수준, '24년에 '01년 일본수준에 도달

지표명	'05	'10	'20	'30	근거/국제비교
▪ 공적연금 수급률 (%, 65세이상 노인중)	16.6	30.4	47.0	65.5	· 미국 93, 영국 91, 일본 84('03)
▪ 건강보험 보장률(%)	65	72	80	85	· 독일 91, 일본 88('97), 프랑스 73('00)
▪ 방과후 활동 수혜율(%)	32	67	72	75	· '06년부터 방과후 학교 전면 확대
▪ 육아서비스 수혜율(%)	47	65	67	74	· '10년 : 저출산대책 반영 · '20년 : 만4세 완전 무상 보육·교육 실시('17~) * '12~'17년 : 취학연령 하향조정 · '25년 : 유아 100% 수혜('05, 70%) · '30년 : 영아 56% 수혜('05, 20%)
▪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62	42	38	37	· '10년 : 저출산대책 반영 · '20년 : 영아현물급여 도입('12~) 및 만4세 완전 무상 보육·교육 실시('17~) · 호주34, 덴마크30, 프랑스27('03)
▪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11	35	70	100	· '08년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1~2등급) · '10년 : 대상확대(1~3등급) · '30년 : 수발이 필요한 모든 노인 대상

## ⑱ 국민연금·지역연금 개혁

-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조로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곤란
  - 국민연금 미 개혁시 '36년 수지적자, '47년 기금고갈 전망
    - \* '03년 국민연금법 정부 개정안 제출, 현재 국회 계류중
  -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발생으로 정부에서 보전('05, 1.5조)
    - \* 공무원 연금 : '93년부터 적자, 군인연금 : '73년부터 적자
  - 사학연금은 '20년경 적자전환 및 '26년경 기금고갈 전망
- 국민연금은 금년 하반기 중 개혁을 완료하고  
지역연금은 특수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개혁안 마련

## ⑳ 건강보험 개혁

- 고령화로 인해 향후 공공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
  - 현행 지출제도(행위별수가제, 네거티브방식의 약제관리)로는 의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 곤란
    - \* 공공의료비 지출 전망(OECD, GDP비중) : ('05) 3.3 → ('50) 11.9%
- 재정지원방식 합리화 및 건강보험 지출제도 개혁 추진
  - 재정지원기준 변경(급여비 → 보험료)
    - \* 지원액 일부를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여 재정지원의 체감도 향상('07)
  - 지출효율화를 통한 국민부담(조세+보험료) 축소
    - 국공립병원부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 포지티브방식에 의한 약제관리('06)
    - 건강보험공단의 소규모 지사 통폐합 및 구조조정 추진



## ㉑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사회복지 재정투자는 50조원을 넘어섰으나,  
전달체계는 20년전 시스템 유지 →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자리
- 고객 중심의 One-stop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혁신
  -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
    - $\frac{1\text{단계('06.7~)}}{53\text{개 시·군·구}} \rightarrow \frac{2\text{단계('07.1~)}}{\text{모든 시·군}} \rightarrow \frac{3\text{단계('07.7~)}}{\text{모든 군}}$
  -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연계하고,  
중앙부처 서비스의 중복 기능 통폐합 및 지방이양 추진
  -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 주민서비스혁신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운영(행자부)

## ㉒ 의료급여제도 개편

- 일부 차상위계층 보호 확대 등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의료급여지출 급증
  - \* 의료급여 총진료비(국비+지방비) : ('02) 2.0 → ('05) 3.2 → ('06) 3.5조원
- 의료급여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적정 의료이용 및 제공 유도
  - 의료급여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부과로 과잉진료 억제
    - 주치의제 도입시 주치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과 등 검토
  - 특별시·광역시외의 區도 지방비 부담 검토
    - \* 시·도의 시·군·구는 현재 지방비 부담(4~6%)

## ㉓ 비정규직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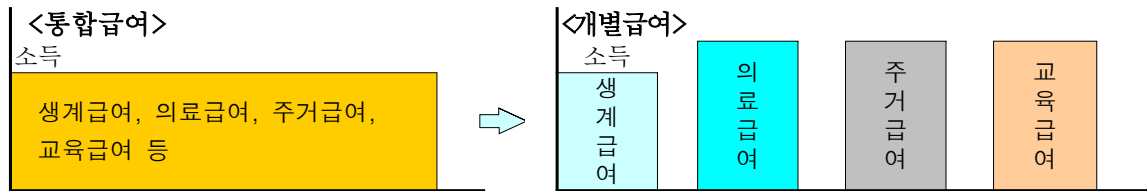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인건비 절감,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증가, 임금·근로 조건 차별, 불법파견 등으로 사회문제화
  - 비정규직 관련 3법 국회제출('04.11), 현재 법사위 계류 중
    - \* 노동위원회법(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간제근로자법(사용기간 2년 제한), 파견근로자보호법(불법파견 고용의무 부과)
- 관련법 국회통과 추진,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위한 지원 강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차별여부 실태조사('06.6) 후 종합대책 수립('06.8)
    - \*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06.3): 전체인원 155만명 중 31.2만명(20.1%)
  -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가능하도록 교육훈련 강화
    - 차별없는 훈련기회 제공, 임금, 사회보험 등 차별해소노력 강화
  - 고용보호 법규를 고용·해고를 동시에 촉진시키는 유연성·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개편

## ㉔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

- 4대 사회보험별로 징수기관 및 징수방법·기준이 달라 국민불편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 초래
  - 각 공단별로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통합 추진
  - 보험료 부과기준, 징수방법, 관리단위 등 S/W 일원화
    - '06~'07년중 법령개정, 전산시스템 보완후, '08년이후 시행
  -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H/W 개편방안 강구

## 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나, 넓은 사각지대 존재
  - \* '03년 차상위층(잠재빈곤층+비수급 빈곤층) 규모 : 전체 인구의 5.5%
  - 수급자에게만 생계, 주거 등 7개급여 모두 지급(all or nothing)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급여방식 개편
  - 통합급여 방식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분리 지원



## ㉖ 부동산 가격 안정화

- 부동산 시장 불안 및 가격상승은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과 금융·실물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
  - 90년대 중반까지 안정추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은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후 '00년 이후 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
- 보유세·양도세 강화 및 주택·택지공급 확대 등 기존 8.31 대책을 견지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 \* 8.31 대책 기본방향 : ① 부동산 거래 투명화 ② 보유세·양도세 강화를 통한 투기이익 환수 ③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공영개발 확대
  - 장기적으로 초과이익 환수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경제주체의 기대를 조정하게 하고, 건전한 대체투자 수단 개발 등을 추진

## ㉗ 영세자영업자 대책

-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자영업자가 급증, 공급과잉과 경기부진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어 양극화 심화 우려
  - 과잉창업,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산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경계선상에 있는 자영업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 필요
    - \* 자영업취업자 비중 : 미국 7.4, 일본 10.4, 멕시코 29.6, 한국 27.1%
    - \* 적자운용 26.4%, 겨우 생계유지 64%, 수익실현 8.3%('06.5 중기특위)
- 직접지원보다 자생력 있는 자영업자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주력
  - 지역·업종별 상권정보 제공(소상공인지원센터 활용) 및 홍보를 통한 과잉진입 방지
  - 지역중심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체제를 구축, 점포별 특성에 따라 경영안정 지원·사업전환 및 퇴출 유도
    - \*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컨설팅본부 설치
    - \* 퇴출된 자영업자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전직훈련·재취업 알선

## ㉘ 방과후 활동 확대

- 방과후 활동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
  -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이 상당한 수준(전체 아동의 36.3%)
- 4개부처(5개사업)에서 분산 운영 → 운영체계도 비효율적

- 교육양극화 및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방과후 활동 확대
  -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5년내에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
  - 저소득 아동 등에 대한 방과후 교육 기회 제공 확대
    - 2030년에 전체 아동·청소년의 3/4에게 서비스 제공 추진
  - 방과후 활동간 연계·조정 등 운영시스템 개선 병행 추진
    -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 및 방과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지역공동체(복지관, 병원, 경찰, 교회 등)와의 연계 강화
    -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제도 도입

## ㉨ 보육 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 위주 지원으로 중산층 가정의 보육부담 과중
  - 보육료 가격규제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도 낮은 수준
    - \* 보육료 지원대상('06) : 도시가계 평균소득의 70%이하 계층
    - \*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51.5%가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평가('05)
- 보육부담 완화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서비스 확대
  -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확대
    - 2030년에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30%대로 완화
    - \* 육아서비스 수혜율 : ('05) 47 → ('30) 74%
    - \*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 ('05) 62 → ('30) 37%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자율화 병행 추진
  - 장기적으로 만4세 완전무상보육 및 영아현물급여 실시 검토

### ③⑩ 식품안전 보장 강화

-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로 국민 불안 및 정부 불신 증폭
  - 급식사고, 기생충 김치, 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
  -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8개 부처와 지자체로 다원화
    - \* 식약청, 농림부(축산물 등), 교육부(학교급식), 환경부(먹는샘물), 산자부(천일염) 등
- 생산부터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적·체계적 식품관리 강화
  -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생산지·수입업자 직접 관리 강화
    - \* 현재 8개 부처 → 식품안전처로 통합 관리('06년 말 개편추진)
  - 안전기준 설정, 위해성 평가 강화 및 신속한 식품사고 대응체제 구축

### ③⑪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근로빈곤층이 최근 다시 증가

	'98	'02	'03	'04
▪ 중위소득 50%이하 근로자 비율(% , 전체근로자 대비)	8.9	7.6	8.3	9.3

\*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으로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 제고와 빈곤탈출 지원
  - 소득 파악률이 높은 근로자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 '06년 입법, '07년 도입('08년부터 급여지급)

### ㉔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각종 장애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체인구의 약 4.4%인 약 215만명)의 전반적 복지수준 미흡
  - 최저생계비이하 장애인 빈곤가구는 전체 장애인 가구(194만)의 13% 수준(비장애인 빈곤가구 6.8%)
  -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는 GDP의 0.26% 수준('05)
-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마련
  - 장애인 의무고용률(현행 2%) 상향조정, 장애수당 인상, 의료, 특수교육, 이동권 등 지원 확대

### ㉕ 주거복지 확충

- 물량중심의 주택공급정책 결과 전반적인 주거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은 미흡
  - 전국 주택보급률 : '95년 86 → '04년 102.2%
    - \* 임대주택 재정투자 : ('95)1.25→('00)3.59→('05)3.84조원
  - 소득대비 주거비부담(RIR)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00년 현재 전체 가구의 23%
    - \* RIR(임대료/월소득) : 한국 24('05), 미국 22('03), 캐나다 21('01), 일본 11('04)
    - \* 장기공공임대주택비율 : 한국 2.7('05, 재고물량기준), 일본 7('00), 영국 22('00), 독일 20('00)
-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 '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12년, 전체 주택재고대비 12%)
  - '11~'13년간 주택바우처 시범 실시, '14년부터 본사업 추진

### 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치매·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은 65세이상 노인(경증포함)의 12.1%인데 반해, 공적 서비스 수발 수혜자는 1.4%에 불과('05)
  - 향후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수발필요 노인 급속히 증가 전망
- 개인, 지자체, 국가 공동책임(사회연대원리)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08.7월 시행 예정)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부양부담 완화
  - 수발대상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 수발대상(노인인구 대비) : ('05) 1.4 → ('10) 4.1 → ('20) 8.9 → ('30) 12.1%
    -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추진현황
      - 시범사업 실시('05. 7~'08. 6)
      - 노인수발보험법안 국회제출('06. 2. 16)

### ㉕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보건 강화

- 산업화·도시화의 진전과 화학물질 노출 증가로 환경오염 심화 및 환경성 질환자 급증
  - \* 미세먼지( $\mu\text{g}/\text{m}^3$ ) : 서울 58('05), 런던 27('04), 동경 32('02)
  - \* 어린이 1/4이 아토피, 천식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연간 4.1조원
-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 도시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 도모 및 환경성 질환 사전예방체계 구축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제의 단계적 시행, 수생태계와 국민건강중심의 물관리정책 추진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06~'15)의 단계적 이행을 통해 국민환경보건 증진



## ㉔ 농어촌 활력증진

- '90년대 후반이후 노령화·시장개방에 따른 적응력 차이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

\* 농가소득/도시근로자소득: ('95) 95.1 → ('00) 80.6 → ('04) 77.6 → ('05) 78.2%

- 의료, 교육, 기초생활여건이 도시에 비해 크게 미흡

- 농어업·농어촌종합대책을 여건변화에 맞게 보완 발전

- 전업·준전업 농어가는 규모화, 컨설팅, 고품질생산 기반확충  
등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위험관리 프로그램 보강

\* 쌀전업농의 쌀생산비중 : ('05) 30 → ('20) 60 → ('30) 79%

- 중소·고령농어가는 농외소득원 확충 등 소득안전망 구축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복지·교육지원을 강화

## 1. 그간의 성과와 한계

- 낡은 제도와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해집단간 대립과 과도한 권리주장으로 사회갈등 분출
  - 합리적 갈등조정 역량이 향상되고 있으나(예 : 방폐장 부지선정,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아직은 미성숙
- 성숙하지 못한 사회시스템은 정부, 기업과 개인의 원활한 경제 및 사회활동에 걸림돌로 작용
  -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여 사회갈등 해결에 많은 비용 소모
    - \* 사회응집력 : ('03) 39 → ('04) 46 → ('05) 34위
    - \* 6개 대규모 국책사업 중단 손실규모: ('05) 4.7조원
  - 선진화되지 못한 법과 제도로 인해 정부신뢰도는 낮은 수준
 

	'00	'01	'02	'03	'04	'05
▪ IMD 정부정책 투명성 순위	41	36	31	41	41	34
▪ OECD 30개국 중 청렴도 순위	27	24	24	24	24	22
  - 사회단체 참여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원봉사 등 자발적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미흡
    - \* 사회단체참여율: ('99) 23.1 → ('03) 44.8%
    - \* 자원봉사참여율: ('91) 5.4 → ('99) 13.0 → ('03) 14.6%

## 2.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합리적인 갈등조정 체제구축으로 사회적 갈등을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
  - 갈등전문가 양성,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효율적 사법서비스 체계 마련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정부 인력의 서비스위주 재배치 등 공공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정부신뢰 회복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의무화, 1, 2단계 지배구조 혁신
  - 상시적·전문적 조직진단, 인력 재배치, 총액인건비 시행 등
-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을 통한 공공복지체제 보완
  - 시민공동체의 모범사례 발굴·지원, 지자체와 공동체 간 연계 등

## 3. 2030년 미래의 모습

-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제도, 규범을 토대로 구성원간의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극대화

지 표 명	'05	'10	'20	'30	근거/국제비교
▪ IMD사회응집력(순위, 60개국)	34	15	10	5	· 싱가포르 1위, 캐나다 5위
▪ IMD국가경쟁력(순위, 60개국)	29	20	15	10	· 미국 1위, 호주 9위, 일본 21위
▪ 자원봉사참여율(%)	15	20	30	50	· '10년 일본, '30년 미국 수준

### ③⑦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사회갈등을 대립과 물리적 충돌 등으로 해결 시도  
→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이 소요되고 사회통합 저해  
\* 대규모 국책사업 중단 손실규모('05) : 4조 7천억원(6개 SOC사업)
-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갈등관리기본법 조기 제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계류 중
    - \* 美 갈등관리지원기관(FMOS, '47년) 설립, 행정분쟁해결법('90) 제정
  -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시민교육 등을 담당하는 「갈등관리 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 美 : National Association for Community Meditation
    - 英 : Meditation UK

### ③⑧ 사법제도 개혁

-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설치('05. 1~'06. 12)
  - 국선변호대상 대폭 확대, 공판중심주의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제도 도입 추진
- 관련 법률안 국회 조속통과 및  
미해결 과제에 대한 지속적 개혁 논의 필요
  - '06. 7월 현재 형소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19건
    - \* 국회 기통과 법률 2건(범죄피해자 구조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 미해결 과제 : 하급심 강화, 주민소송 도입, 법률구조개선  
방안 마련, 형벌체계 재정립 등

### 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운영시스템 혁신방안 마련('04.6 ~ '06.3)
  -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 모든 기관(314개)에 경영공시 의무화
  - 1단계 지배구조 혁신 : 94개(정투법·정산법·민영화법 대상) 기관
    - \* '06년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7년 시행목표
    - 이사회·감사 등 내부건제·균형장치의 보강
    - 정부감독체계 개편·평가 강화 등 외부지배구조 개선
  - 2단계 이후 지배구조 혁신 : 나머지 220개 기관
    - '08년부터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단계적 추진

### ㉕ 지방행정체제 개편

-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자치계층의 기능중첩 및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문제 발생
  - \* 시도(16) - 시·군·자치구(230) - 읍·면·동(3,265) : 행정 3계층
  - ↳ 일반구(26) - 동(320) : 행정 4계층
- 책임성 확보 곤란, 중첩에 따른 비용 및 파생적 업무 증대, 지자체간 갈등 및 격차심화 등 비효율 발생
- 지방의 경쟁력 강화, 주민 편의증진 등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 자치계층 축소여부, 광역·기초간 기능분리, 시군통합 방안 등 검토
  -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는 기초지자체 폐지('06. 7. 1)

#### ④① 지역공동체 등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

- 최근 개인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원봉사 등 자발적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미흡
- 가족·시민·지역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  
→ 공적 복지체제 보완
  - 지역공동체의 모범사례 발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 자발적 복지사례 : 대전시의 ‘복지만두레’
  -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간 연계를 통한 교육·복지 기능 강화
    - \* 경기도 안산시의 ‘위 스타트(We Start)’ 프로그램

#### ④② 국방개혁

- 선진정예 강군의 군구조로 변모하기 위해  
부대수는 축소하면서도 안보여건에 필요한 국방력 확보 필요
- 국방개혁을 통해 병력위주의 양적 군구조를 정보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
  - \* '06~'20년 중 621조원(순수개혁소요 67조원)의 재원소요
  - 상비군의 단계적 감축 : ('05) 68.1 → ('20) 50만명
  - 전력구조 : 정보·감시 능력 강화하에 육·해·공 균형발전
  - 국방관리 : 방위사업 투명성·효율성 확보 및 아웃소싱 확대
  - 복지지원 : 침대형 내무생활관, 대대단위 복지시설 보완, 사병봉급 현실화 등

#### ④③ 전자정부 구현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업무별 정보화는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수요자 중심의 대민 온라인 통합서비스는 아직 미흡
  - \* 초고속인터넷 가입율 세계 1위(100명당 23.3%)
  - \* 조달·특허부분 정보화는 세계 최고 수준
- 공급자·기관 중심 서비스 →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추진
  - '07년까지 범정부적 통합관리 등을 위한 전자정부 로드맵 마무리
    - \* 종이→전자문서, 방문→온라인 처리
  - '07년 이후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 구축 추진

#### ④④ 정부 인력의 서비스 위주 재배치

- 그간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인력배분 미흡
  - 통제위주 인력관리, 현안중심 미시적 대응에 치중  
→ 정부부문 효율성, 공공서비스 국민만족도는 낮은 수준
-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對국민서비스 분야로 재배치
  - 상시적·전문적 조직진단, 총액인건비제 시행 → 중기적 시각, 자율과 성과에 따른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 업무효율화(정보화, 프로세스개선), 업무수행 체계개편(지방이양, 민간위탁), 시장메카니즘 적용(아웃소싱, 바우처) 등 → 감축 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 등 인력공급이 부족한 분야 → 보강, 재배치

## 1. 그간의 성과와 한계

□ 우리나라는 적극적 개방정책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

- '05년 국민소득은 7,875억불로 세계 12위에 진입하였고 수출은 2,844억불로 12위, 수입은 2,612억불로 13위 유지

\* 외환보유고 4위, 전자제품 생산액 4위, 자동차 생산량 5위, 인터넷 이용자 비율 2위, 선박건조량 1위

(단위: 억불)

	'90	'95	'00	'05
명목 GDP	2,637	5,173	5,118	7,875
수출	650	1,250	1,727	2,844
수입	698	1,351	1,605	2,612

\* IMF, World Economic Outlook('06.4)

- 경제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지위도 강화

\* 올림픽개최('88), UN가입('91), WTO가입('95), 월드컵개최('02), PKO 파병('03, 이라크) 등

□ 그러나 경제력 수준에 걸맞는 의식·관행·제도는 아직 미비

- 여전히 폐쇄적 중상주의 사고가 지배적이며 정부규제, 행정절차, 노동시장관행 등 여건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달
- 국가이미지는 홍보부족, 정치·사회분야 관행·제도적 문제로 세계 중하위권 수준
- 세계적으로 EU, NAFTA, ASEAN 등 지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되는 경향



## 2.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우리경제를 국제표준에 맞게 전환하고 외국과의 네트워크도 촉진하여 열린 국가 구현
  - 교육·의료 등 시장개방 확대, FTA 확대,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 외국인력정책 마련 등 제도·관행의 국제표준화 추진
- 남북한 공동번영을 실현하고 동북아 경제통합 등 지역 내 협력을 통한 동북아 번영의 가교국가 건설
  - 통일 인프라 구축,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축 등 추진
-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 확보
  - 한류 등 소프트 파워 강화, ODA의 지속적 확대 등

## 3. 2030년 미래의 모습

- 사회·문화의 폭넓은 개방으로 돈·사람·정보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열린사회, 품격있는 국가
  - GDP, 수출입 등 경제력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 외교역량 등 모든 부문이 강화된 Global Leading Country

지 표 명	'05	'10	'20	'30	근거/국제비교
▪ ODA/GNI 비중(%)	0.09	0.11	0.25	0.25	· '15년 DAC 평균('05, 0.25) 도달
▪ FTA 체결국 수 (개국)	2	15	25	50	· '10년 : 미국, ASEAN · '30년 : 동아시아 경제통합 실현 * 싱가포르 24('05), 일본 15('10계획)
▪ 국가이미지 순위(위)	34	24	10	5	· '10년 : 대만수준 도달 · '30년 : 세계 5위권 도달

#### ④5 FTA 체결 확대

-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체결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 등 선진통상국가 기반 마련
  - 한미 FTA의 경우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되,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을 우선시 하면서 협상 추진
  - 농업 및 서비스산업 등 일부 취약부문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마련 추진
- 중남미, 동남아, 유럽, 북미에 걸친 FTA 네트워크의 대륙별 거점 구축을 마무리
  - 거대경제권과의 FTA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흥유망시장과의 FTA도 병행

#### ④6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주요 사업 착공 등 개발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일류 기업의 비즈니스·물류 거점 육성 본격 추진
  - 송도 국제업무단지 프로젝트 착공, 부산·광양항 컨부두 확충, 여수 화양 레저단지 착공 등을 조속히 추진
    - \* 송도의 IT·BT 클러스터 구축사업, 청라지구의 금융 등 국제업무, 레저·위락단지 조성사업 추진
-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등도 지속 추진
  - 개발사업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 실시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대상 추가 확대 등의 제도개선 추진
  - 교육·의료기관 유치를 계기로 국제학술단지 조성, 의료관광 인프라 마련 등 교육·의료 허브육성 추진

#### ④⑦ 외국인력정책 마련

- 통제중심의 외국인력 관리방식을 탈피, 각종 차별 해소 및 권익 증진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사회통합 실현
  - 외국국적동포의 이중국적 문제 해소, 결혼이민자·외국인 여성 등의 정착 지원, 불법체류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 전략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외국인 산업인력(총 166천명)의 14%(24천명)에 불과한 전문인력 확보 정책 추진
  - 단순기능 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도입
    - \* 이를 위해 '06년말까지 외국인관련법령 정비, 총괄기구 설치 계획

#### ④⑧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

-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으로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금융시장의 투명성·국제화 및 경쟁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금융규제·외환제도·감독시스템 등 금융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금융인력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협동을 강화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로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
  - 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된 항만과 공항을 집중 육성하고 배후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하드웨어적인 경쟁력 확보
  - 물류기업 전문화와 글로벌화, 전문인력 양성 추진, 물류정보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도 제고
    - \* 국가물류부가가치 비중 : ('05) 8 → ('20) 11% 수준 확대

#### ④9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 확대

-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도록 ODA 규모를 '15년까지 OECD DAC 평균('04)인 0.25%까지 확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DAC평균	非DAC 평균
▪ ODA/GNI(%,'05)	0.095	0.22	0.28	0.47	0.48	0.33	0.05

- '06년 출범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07~'09년간 ODA 중기전략계획 수립 추진
  - ODA 확대와 병행하여 ODA 평가시스템 구축, 유·무상 원조간 연계 강화 등 해외원조 관리체계를 효율화
- ODA 확대 노력에 대한 홍보와 개도국에 대한 경제개발 경험 전수를 통해 국가이미지 개선

#### ⑤0 통일 인프라 구축

- 남북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선순환 구도 정착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남북한 경제력 격차 최소화 기반 구축
    - \* 3대 경협사업(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사업)을 내실화하고 농업·SOC·에너지 등 남북호혜의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부분으로 확대
  -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지원, 대북지원 기구 설치 추진 등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사회발전 지원체계 마련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역량 강화
  - 통일 대비 재원확보, 각 부문별 통합방안 등에 대한 연구 및 민간차원의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지속